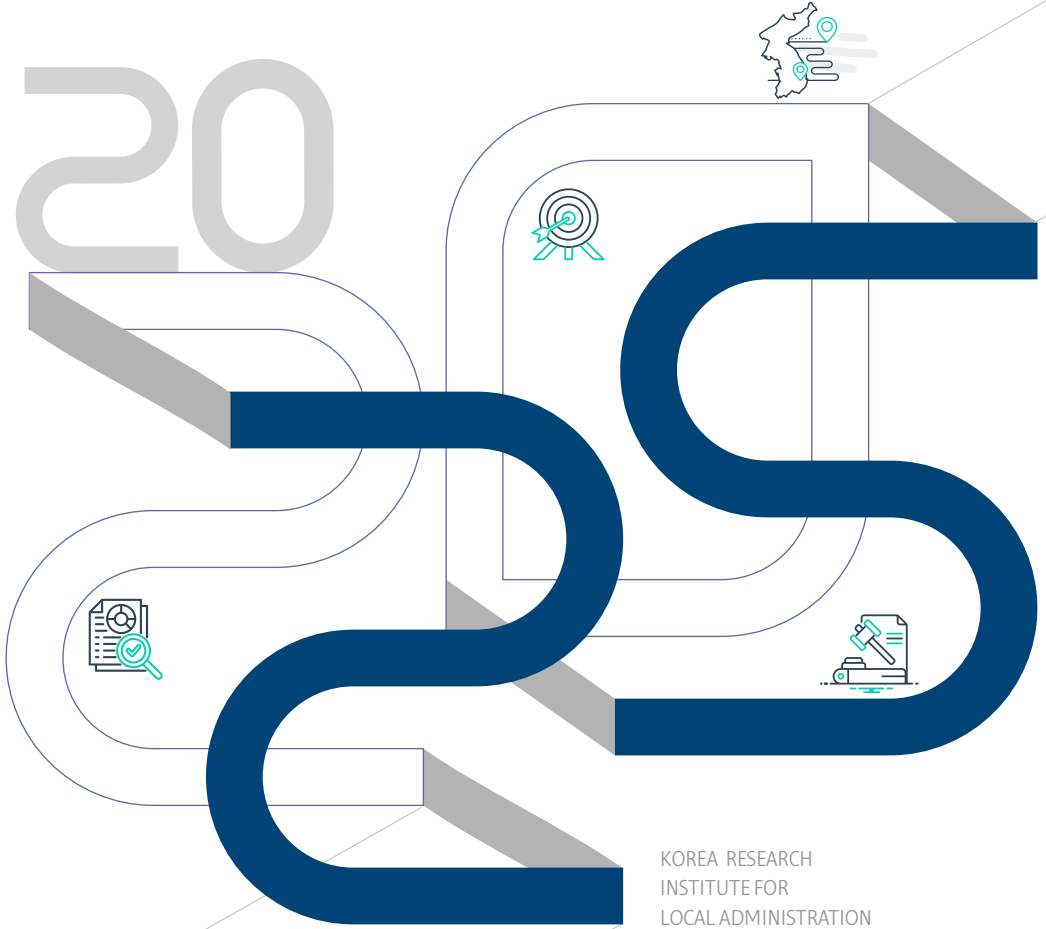


20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발간사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이 여는 새로운 길'의 이정표를 세우며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육동일입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의 성취를 발판 삼아,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구어낸 결실을 종합하여 『2025년도 성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길을 밝혀온 41년, 현장에서 답을 구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41년간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역발전 분야의 정책 연구를 선도하며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 소멸의 위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도전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고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중심·지역주도·현장중시'라는 핵심 가치를 기치로,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정착을 넘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합 위기를 넘어, 지역 주도의 혁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러한 연구 방향과 노력이 응집된 성과들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2026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을 통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초광역 협력(5극 3특) 체계 구축과 기능 재편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균형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행정혁신 모델을 도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인구·이민 정책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등 시의성 높은 연구는 물론, 「이슈와 포럼」 및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등 정기간행물을 통해 정책 현장과의 소통과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역량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본 보고서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고, 권한과 책임이 조화로운 분권형 국가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도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방이 주도하는 혁신이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힘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안을 나누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해 온 연구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날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육 동 일

CONTENTS 목차

발간사

I 연구원 소개

II 연구보고서

1. 기본연구

우수과제

- | | |
|---|----|
| 1)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주민인식 특징과 전략적 대응 | 19 |
| 2) 생활인구 소비 특성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 22 |
| 3) 인공지능 기술 전환기의 지방행정 혁신 방안 연구
: 주민중심의 AI 거버넌스 구축 | 25 |
| 4) 상호협력적 지방이양 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
: 중앙-지방 간 이양협상제도를 중심으로 | 28 |
| 5) 지방주도의 디지털 전환전략 연구
: 디지털 전환 수준별 유형화를 중심으로 | 34 |
| 6)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실태분석 및 활용 제고방안
: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 37 |
| 7)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 시점(timing)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40 |
| 8) 에이지테크 중심의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 43 |
| 9) 도시공원 타당성조사의 가치추정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 46 |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1)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발전 방향 연구: 대국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51
2) 국민 편의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감증명제도 개선 연구	54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및 성과지표 표준안 마련	57
4) 읍·면·동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 연구	61
5)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65
6) 효과적인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69
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연구	72
8) 초광역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 발전사업 선정기준 마련	75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 우수과제

전북특별자치도	1)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한 자율적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	79
전라남도	2)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효과분석과 발전 전략 수립 연구 : 관광·소비·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중심으로	82
서울특별시	3) 서울특별시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연계 방안 연구	85
부산광역시	4) 부산 SI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베드 추진 방안	88
대구광역시	5)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차원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92
인천광역시	6) 중앙 및 지방 간 소방재원 분담의 개선방안 연구 : 소방공무원 인건비 확보를 중심으로	95

대전광역시	7)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대전광역생활권 설정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99
울산광역시	8) 해오름동맹 협력 사업 발굴 및 실행 방안 연구	102
세종특별자치시	9)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105
경기도	10)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108
강원특별자치도	11)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평가체계 구축 연구	111
충청북도	12) 초광역 협력체제를 위한 충청북도의 전략적 대응방안	114
충청남도	13)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 참여율 제고방안	116
경상북도	14)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119
경상남도	15) 남해안권 초광역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122
제주특별자치도	16)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재편 방향과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연계 방안 연구	127

4. 정책이슈리포트

서울특별시	1) 서울 균형발전 전략 재구성 방안: 개념 및 정책 추진 방향 정립	131
부산광역시	2) 북극항로 거점항구 역할을 위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전략적 방안 모색	134
대구광역시	3)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기준 연구	137
광주광역시	4)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저감 개선방안 마련	139
대전광역시	5) 계족산 권역 특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143
울산광역시	6) 상수도 분야 전문인력 고령화 대응 방안	146
경기도	7) 경기도 소방관서 성과집단 구분 지표 설계에 관한 연구	149
강원특별자치도	8) 시·도 지역본부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152



충청북도	9)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55
충청남도	10) 충남소방 현장활동 업무량 기반 성과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158
전북특별자치도	11)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교통서비스 확보 방안	161
제주특별자치도	12) 「제주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도시 조성」 추진 방안 연구	164

5. 자체연구

🏆 우수과제

1) 2026 지방행정 트렌드	169
2)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	173
3) 지방주도·현장중심 지방행정혁신전략	176
4) 지방재정 30년 평가를 통한 주민중심 지방재정 전략	181
5)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	186

6. 지침연구

1) 문화·체육시설 건립의 편익 추정을 위한 객단가 적용 방법론 연구	191
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가이드라인	194
3) R&D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II):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론 관련	197
4) 의료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II)	200



III 정기간행물

1.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207
2.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211
3. 지방의정브리프	212
4. 지방행정연구	213
5. 세계지방자치동향	217
6. 유튜브	219

IV 부록

2025년도 연구과제 수행 목록

1. 기본연구과제	226
2. 정책연구과제(행정안전부)	227
3. 정책연구과제(시도)	228
4. 정책이슈리포트	229
5. 자체연구	230
6. 지침연구	230
7. 수시연구과제	231
8.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231
9. 공동연구과제	231
10. 수탁연구과제	231
11. 타당성조사과제	231

※ 홈페이지 개편 시, QR코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la.re.kr>)로 접속 바랍니다.

20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I

연구원 소개

1. 연구원 개요
2. 조직 현황

I. 연구원 소개

01 연구원 개요

● 설립목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관 제2조)

- 국가발전 및 지방행정의 선진화와 관련된 제 부문의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정책수립에 기여

● 주요 연혁

- 1984. 9. ● (재)지방행정연구소 개소
- 1986.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정(법률 제3809호)
- 2002. 4. 2001년 공기업 및 경영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04. 6. 2003년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06.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개정(법률 제7910호)
- 2007. 5. 부설 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 설치(「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 2011.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개정(법률 제10440호)
- 2014. 11. 행정안전부 지정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2호)
- 2016. 12. 청사신축 이전(서울 서초동 → 원주 혁신도시)
- 2017. 1. '2017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4위 선정
- 2020. 6.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7호)
- 2023. 1.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설치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 2023. 7.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재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제4항)
- 2023. 12. 지방규제연구센터 설치(「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행정안전부훈령 제322호))
- 2024.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40주년
- 2024. 11. ↓ 제 20대 육동일 원장 취임

● 미션 및 비전·핵심가치

미션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국책연구기관

비전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
정책연구로
지방의 혁신적 미래 설계



● 전략 및 과제

경영 목표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 가치 실현과 확산	전략적 소통·협업을 통한 성과공유·활용체계 강화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는 경영혁신체계 고도화
8대 추진 전략	전략 1 연구원 위상·역할 재정립	전략 2 연구·조사 성과의 정책 연계 및 실행기반 강화	전략 3 국정운영 및 국가정책 지원 강화
	전략 4 연구성과 확산 및 국민과 주민 공감대 형성	전략 5 연구원 주도 국내외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 6 고객만족도 선순환 구조 확립
	전략 7 연구력과 행정력을 강화하는 전사적 혁신문화 재조성		
	전략 8 성과관리 및 혁신지원체계 고도화		
24대 실천 과제	전략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성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추진 ·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 1 관점의 실현가능한 정책대안 개발 · 연구성과 기반 對국민·對지방·對전문가 등 고객 소통 및 공감대 형성 강화 		
	전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 연구의 정책 연계성 강화 · 지방·주민·현장 수요 기반의 지역맞춤형 정책연구 기획·추진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평가 고도화 및 역량 강화 		
	전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성장 실행전략 제시 ·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투자사업 관리시스템 고도화 · 범정부(관련부처 및 위원회 등) 공동 정책기획 및 실행 파트너십 구축 		
	전략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성과확산체계 구축 · 언론, 방송, 미디어, SNS 기반 대국민 소통 강화 ·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연구성과 콘텐츠 제작·확산 		
	전략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학계·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장 및 정례화 · 4대 협의체와의 공동세미나·정책포럼 등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활성화 · 국제기구·해외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전략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맞춤형 상시 소통·협력체계 구축·운영 · 연구력 강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SI 활용 · 피드백 기반 연구기획·수행·지원 순과정 환류체계 강화 		
	전략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성장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적극 지원 · 동기부여와 사기진작,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도전과 창의적 시도를 장려하는 조직분위기 쇄신 및 혁신문화 조성 		
	전략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프로세스 정비 및 체계적 운영 ·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실행체계 강화 · 연구·행정지원 시스템 전면 개선 및 업무 효율화 		

주요사업

구 분		분 야		
일반 회계	연구 사업	연구 사업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정책이슈리포트	
			자체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공동연구과제			
	연구 관련 사업	학술 행사	국내세미나	연구원 주최
				학회 협력
			지방자치혁신포럼	
			지방의정아카데미	
		대국민 공모사업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국제 협력	일본 자치체 및 전문기관교류협력	
			UNPOG, OECD 정책센터, 중국 기관 등 교류협력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활동	
		발간	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지방의정브리프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국내외 통신원 제도				
연구성과물 영상 콘텐츠				
창의 혁신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KRILA 자치포럼			
수익사업		수탁용역 연구과제		
특별 회계	조사 사업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공기업 및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지원		
		센터연구과제		
		협약면제 검토		
		세미나		
	조사 관련 사업	공무원 교육		
		내부 역량강화		
		연구자문위원회		
		국문/영문 브로셔 발간		
		연차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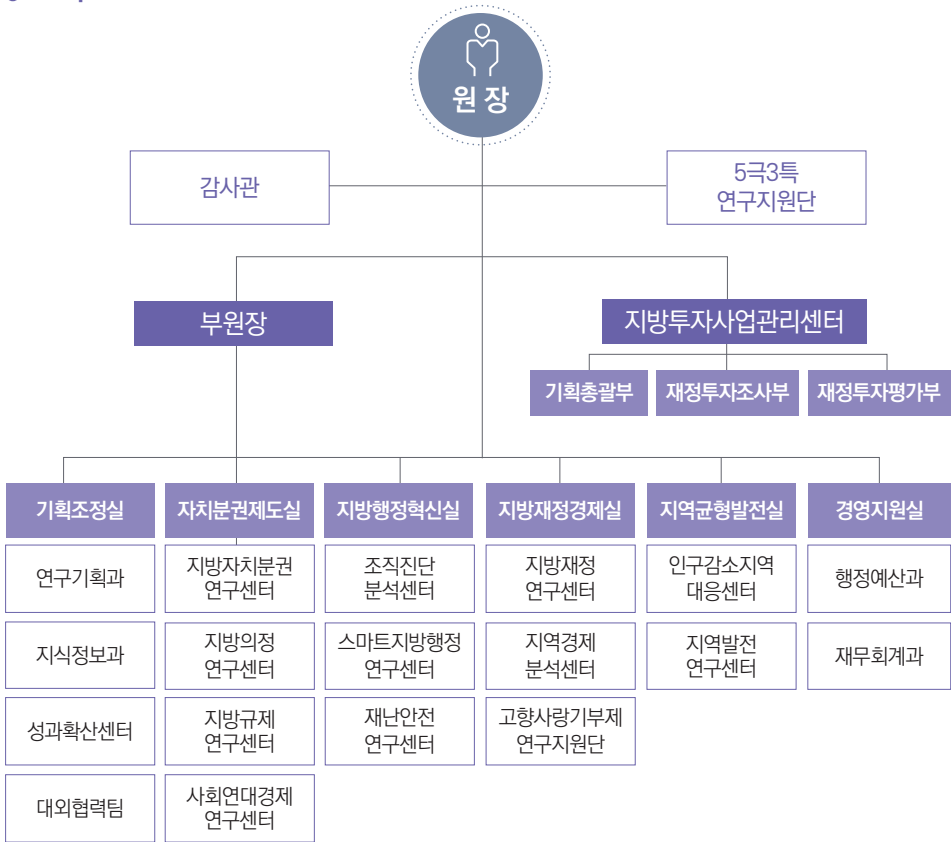
2025년도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세 입		세 출		
	총 계	11,509	총 계	11,509	
일반 회계	1. 정부출연금	3,223	1. 인건비	6,930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4,100	2. 연구사업비	1,087	
	3. 지방분권 평가·확산 지원사업 출연금	200	3. 연구관련사업비	1,008	
	3. 순수 자체 수입	가. 기금회계전입금	945	4. 경상운영비	1,164
		나. 수탁연구용역 수입	1,979	5. 수탁용역사업비	1,320
		다. 잡수입	400	6. 예비비	0
	4. 전기이월금	662			
특별 회계	총 계	10,963	총 계	10,963	
	1. 정부출연금	200	1. 인건비	3,077	
	2. 타당성조사 수수료	8,960	2. 조사사업비	7,020	
	3. 출자출연타당성검토	1,160	3. 조사관련사업비	202	
	4. 예비검토사업 수입	300	5. 경상운영비	564	
	5. 잡수입	150	6. 예비비	100	
	6. 전기이월금	193			

02 조직 현황

조직도



정·현원 현황

- 100명(정원 104명): 원장 1, 연구직 61, 투자분석직 20, 행정직 17, 전문직 1

구분	계	원장	연구직	투자분석직	행정직	전문직	공무직 (정원 외)
정원	104	1	63	20	19	1	12
현원	100	1	61	20	17	1	11

* 정원 외: 공무직 11(2025년 12월 말 기준)



20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II



연구보고서

1. 기본연구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4. 정책이슈리포트
5. 자체연구
6. 지참연구

기본연구

-  1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주민인식 특징과 전략적 대응
-  2 생활인구 소비 특성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 3 인공지능 기술 전환기의 지방행정 혁신 방안 연구
: 주민중심의 AI 거버넌스 구축
- 4 상호협력적 지방이양 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
: 중앙-지방 간 이양협상제도를 중심으로
- 5 지방주도의 디지털 전환전략 연구
: 디지털 전환 수준별 유형화를 중심으로
- 6 지방자치단체 가용자원 실태분석 및 활용 제고방안
: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 7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 시점(timing)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8 에이지테크 중심의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 9 도시공원 타당성조사의 가치추정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1-1

우수과제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주민인식 특징과 전략적 대응



주제어 성과 인식 괴리 | 주민체감 | 평가 패러다임

연구책임 김건위 · 연구진 최지민, 안지선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결론

-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객관적 성과(복지 확대, 인프라 구축)는 향상되었으나 주민 체감도는 20~30% 수준에 불과한 괴리를 실증적으로 확인함
- 괴리의 본질은 ‘관찰자의 준거틀 차이’로, 지방정부는 투입·과정 중심, 주민은 결과·영향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적 단절에서 비롯됨

● 정책제언

- 평가 패러다임 전환
 - 투입·과정 지표에서 결과·영향 지표로 전환: “시설 건립 수” → “주민 생활 개선도”
 - 객관지표와 주민체감지표 통합, 결과기반관리(RBM) 도입
 - 빅데이터·AI 기반 실시간 주민 의견 분석 시스템 구축(중기 과제, 예산 확보 필요)
- 실질적 분권 구현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사무·재정·인사의 실질적 이양 및 자치입법권 확대(장기 과제)
 - 중앙-지방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법제화
- 진정한 주민참여 실현
 - 주민참여예산제·주민투표제 등 참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법적 요건 강화(단기 과제)
 - 정책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주민 의견 반영 및 과정 투명 공개

II

연구보고서

• 소통 혁신

- 행정 전문용어 배제, 인포그래픽·동영상 등 시각적 콘텐츠 중심 소통(단기 과제)
- 홈페이지·모바일·SNS·오프라인 통합 채널 운영, 일방적 홍보 → 쌍방향 대화 전환

• 행정계층별 역할 분담

- 중앙정부: 제도 기반 구축, 사무·재정 이양 / 광역: 통합 전략 수립, 공동 인프라 구축 / 기초: 주민 직접 소통, 성과 가시화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이후 30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주민 체감도는 객관적 성과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지방자치단체는 노력의 미인정을, 주민은 지방자치 효과에 회의를 표출하는 괴리 상황 지속

● 연구 필요성

-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주민 인식 괴리의 실증적 규명 및 구조적 원인(제도·평가·소통·참여) 분석 필요
- 주민 체감형 지방자치 전환을 위한 구체적·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 필요

III 주요내용

● 이론적 논의

- ‘관찰자의 준거틀’ 개념 도입으로 지방정부-주민 간 평가 시각의 구조적 차이 이론화
- 제도적 환경, 평가체계, 인지적 편향을 포괄하는 다층적 분석틀 설계

● 실증분석

- 민선 10년·20년·30년 시점별 정량성과와 주민인식 조사 비교: 객관 성과 지속 향상, 주민 만족도 20~30% 정체

- 전국 설문조사(1,000명 이상): 지방자치 필요성 인정률 60% 이상 vs. 실제 체감률 20~30% 격차 확인

● 괴리 원인

- 제도: 형식적 분권, 중앙 통제, 제한적 자치입법권 / 평가: 투입·과정 중심 지표, 주민 체감 미반영
- 소통: 일방적 정보 제공, 쌍방향 대화 부재 / 참여: 형식적 절차,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 미흡

● 전략적 대응

- 제도·평가·소통·참여의 통합적 혁신을 통한 주민 체감형 지방자치 구현 방안 제시
- 중앙-광역-기초의 계층별 협력 거버넌스 및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이행 로드맵 제공

1-2

우수과제

생활인구 소비 특성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주제어 인구소멸 | 지역경제·일자리 | 지역발전

연구책임 김민영 · 연구진 박진경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생활인구를 실질적 경제 주체로 재정의하고, 소비 환류 체계 구축이 핵심**
 - 전국 인구감소는 지역 소비 기반과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기존 정주인구 중심 성장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음
 - 이에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에 머물며 소비·활동하는 생활인구를 실질적 경제 주체로 재정의하고, 그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생활인구 정책은 단순한 인구 유입 확대가 아닌, 유형별 주요 소비 주체를 설정하고 소비의 지역 내 환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지역 유형별 소비 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 활성화 전략 필요**
 - 계절적 관광 수요에 의존하는 지역은 소비의 지역 내 환류 구조를 강화해야 하고, 대도시 접근성을 바탕으로 반복 방문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재방문을 유도하는 여가·문화 소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 장기체류·정주 인구 중심의 지역은 생활밀착형 업종의 소비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며, 광역 생활권의 중간 결절점 기능을 하는 지역은 다양한 업종의 균형 발전과 소비 연결성 강화에 집중해야 함
- **데이터 기반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제도·재정 지원 체계 정비로 전략 실행력 확보**
 - 세 가지 전략 방향으로 ①생활인구 유입의 경제적 효과 연계 강화, ②주요 소비 주체 중심의 선택과 집중, ③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전략 수립을 제시하였음

- 제도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 생활인구 전용 조문 신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재정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주인구 중심 전략의 한계를 넘어, 생활인구 소비를 지역경제 전략의 핵심축으로**
 -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정주인구 유출과 소비 기반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생산·고용 창출 중심의 기존 지역경제 전략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정주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 내 소비 규모와 산업 유지 기반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그 결과 생산과 고용 창출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성장 전략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기존 생활인구 연구는 규모 산정과 이동 패턴 분석에 치우쳐 있으나, 생활인구 소비는 지역 내 소득과 고용을 직접 유발하는 핵심 경로로 작동함
 - 그동안 생활인구 관련 연구와 정책은 주로 규모 산정과 이동 패턴 분석에 집중되어, 소비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는 제한적이었음
 - 그러나 생활인구의 소비는 지역 내 소득과 고용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경로로 작동하며, 지역경제 전략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생활인구를 지역 소득, 고용,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경제 주체로 재해석하고, 소비 유형별 지역 분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제도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III 주요내용

● 인구·공간·시간 세 차원에서 생활인구 소비 행태를 입체적으로 분석

-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의 소비 특성을 인구적, 지역적, 시기적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음

● 요인분석·군집분석을 통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네 가지 소비 유형으로 분류

- 생활인구 규모, 소비 규모, 소비의 경제적 파급력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적용한 결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음
 - ①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지역, ②반복방문형 당일 여가소비 지역, ③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 지역, ④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 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소비 구조와 경제적 기여 방식에서 차이를 보임

● 유형별 대표 사례 심층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전략 도출

- 각 군집의 대표 사례로 강원 양양군(군집 1), 충남 부여군(군집 2), 전북 고창군(군집 3), 경북 안동시(군집 4)를 선정하여 소비 구조와 체류·정주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유형별 맞춤형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음

1-3

인공지능 기술 전환기의 지방행정 혁신 방안 연구: 주민중심 SI 거버넌스 구축



주제어 인공지능 행정 | 지방행정 혁신 | 주민중심 SI 거버넌스

연구책임 주희진 · 연구진 황정윤, 김필(외부)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주민중심 SI 거버넌스 기반의 지방행정 혁신 필요성

- 인공지능 기술은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수단을 넘어, 공공성·책임성·신뢰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단순 자동화·개별 서비스 중심의 AI 도입은 행정 혁신 효과가 제한적이며, 주민 신뢰 확보 없이는 정책 확산이 곤란함
- 설명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참여성을 핵심 요소로 하는 주민중심 S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지방정부 AI 도입 여건의 구조적 격차 해소 필요

- 지자체 간 조직·인력·재정·데이터 기반의 격차로 인해 중앙정부의 공공 AI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불균등하게 작동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다수 기초자치단체는 실험적·부분적 활용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지자체 유형과 도입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지원 전략이 요구됨

● 제도·조직·운영 전반의 종합적 개선 전략 제안

- 법·제도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지방정부 적용 기준 구체화와 표준조례안 마련이 필요함

II

- AI 활용에 따른 책임 주체, 위험평가 절차, 통제·관리 기준의 법제화가 요구됨
-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전담조직 구축, 민관 협력 강화, 데이터 공유체계 정비가 필요함
-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주기에 AI를 연계하는 행정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지자체 유형별 AI 행정혁신 추진 로드맵 제시

- 대규모·광역형, 중규모·기초도시형, 소규모·농산어촌형 지자체로 유형을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함
- 기초 단계-확산 단계-정착 단계로 구분된 로드맵을 통해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제고함
- 중앙-지방 간 협력 기반의 점진적 확산 전략이 바람직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 기술 전환기에 따른 지방행정 환경 변화

- 생성형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과 정책결정 구조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 행정의 확대는 효율성과 동시에 책임성·신뢰성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야기함
-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 AI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실행 여건은 상이함

● 지방정부 차원의 실증적 분석 필요성

- 기존 연구는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분석에 치중되어 지방정부의 실제 도입 여건과 정책 수요 분석이 부족함
- 지방정부의 제도·조직·인력·재정 기반과 시민·공무원 인식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음
- AI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조직 내부 준비도를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

III 주요내용

● 인공지능 기반 지방행정 혁신에 대한 이론·제도적 검토

- 디지털 정부 발전 과정과 인공지능 기반 정책혁신 이론을 검토함
- 기술 효율성 중심 논의를 넘어 공공성·민주성 관점의 분석틀을 설정함
- 주민중심 AI 거버넌스 개념을 핵심 분석틀로 도출함

● 지방자치단체 AI 도입 현황 및 제도 환경 분석

-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지자체 조례, 조직·인력·예산 현황을 종합 분석함
- 지자체 간 AI 도입 수준과 제도화 정도의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됨

● 시민·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한 기회·위협 요인 분석

-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실증 분석함
- 행정 효율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병존함
- 디지털 역량, AI 사용 경험에 따라 정책 수용성에 차이가 나타남

● 지방행정 혁신 모델 및 정책 실행 방안 제시

- 데이터 기반·연결형·예측 행정으로의 전환 모델을 제안함
- 주민중심 AI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법·제도·조직·운영 개선 방안을 종합 제시함
- 지자체 유형별 맞춤형 AI 행정혁신 로드맵을 통해 실천적 기준을 제시함

1-4

상호협력적 지방이양 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 중앙-지방 간 이양협상제도를 중심으로



주제어 지방이양 | 분권협상 | 지방분권

연구책임 이경은 • 연구진 강영주, 유자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이양 협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지방이양 협상제도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권한을 배분하던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협상 주체로서 상호 신뢰와 합의를 통해 권한·재정·책임을 조정하는 협력적 분권 메커니즘을 구축하려는 제도적 시도임
 - 지방이양 협상제도는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권한을 나누고 함께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답을 제시함
 - 협상은 일회성 권한 이전이 아닌 지속적 상호조정 의 제도적 과정으로서, 중앙과 지방이 각각의 정책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정책의 품질과 실행력을 높이는 순환형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게 됨
- 궁극적으로 지방이양 협상제도는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 정책 설계의 방식과 국가 운영의 문화를 혁신하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협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동시에, 공동의 공공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양 과정 자체가 국가 전체의 통치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적 재구조화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이양 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전략

- 단기적으로는 지방이양 협상제도의 필요성과 취지를 사회 전반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학습 기반을 조성해야 함

- 공론화는 단순한 제도 홍보가 아니라, 지방이양이 추구하는 자율성·책임성·민주성·협력성이라는 공공가치를 사회적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어야 함
 - 중앙정부는 협력적 분권 철학을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적 학습체계와 인식개혁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며, 각 부처 내 학습조직을 통해 지방이양 협상제도의 원리와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통제 중심의 사고에서 협력 중심의 행정문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현장 중심형 학습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학습모듈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의견 반영 경로를 지방정부의 협상 의제 발굴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중심 공론화와 주민중심 공론화의 상호 보완 구조를 형성해야 함
- **중기적으로는 지방이양 협상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중앙정부는 법 제·개정을 통해 협상 절차, 권한 배분 원칙, 협상 결과의 구속력, 분쟁 조정 절차 등을 명문화해야 하며, 이 과정은 지방정부·국회·시민사회·학계가 참여하는 협력적 입법 협의체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여야 함
 - 또한, 행정적으로는 중앙-지방 협상 전담조직을 설치해 법률·재정·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야 하며, 재정적으로는 권한 이전에 따른 재정 이전 체계 명확화, 지방이양 협상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함
 - 지방정부는 실질적 협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단체·의회·전문가 등과 연계한 지역 협상 의제 구성체계를 운영해야 하며, 법률·재정·정책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기구와 협력하여 협상 자료와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지방이양 협상제도를 안정적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을 넘어, 협상 경험을 제도적 자산으로 축적하고 자율성·책임성·민주성·협력성 기반의 분권 거버넌스 체계로 고도화해야 함**
 - 제도 초기의 격차는 인정하되, 단계적 자율성 확대 전략을 통해 다양한 지방정부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협상 의제 설정 단계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해야 함
 - 지방정부의 이행보고서 제출과 평가 환류 체계를 제도화하고, 중앙정부는 지원·보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유책임 구조를 구축해야 함
 - 주민자치회, 지역의회, 민관협치기구 등을 통해 협상 의제 제안·평가의 참여 경로를 확대하고, 협상 과정의 점진적 공개 전략을 추진해야 함

II

- 중앙-지방 간 정기 교류, 공동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 문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협상제도가 진정한 공동 통치(co-governance)의 장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이양의 의의와 기존 지방이양의 한계

-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임
- 우리나라의 지방이양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구조와 행정 편의 중심 절차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한 화대 없이 책임만 강화되는 형식적 분권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거버넌스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지방이양 협상제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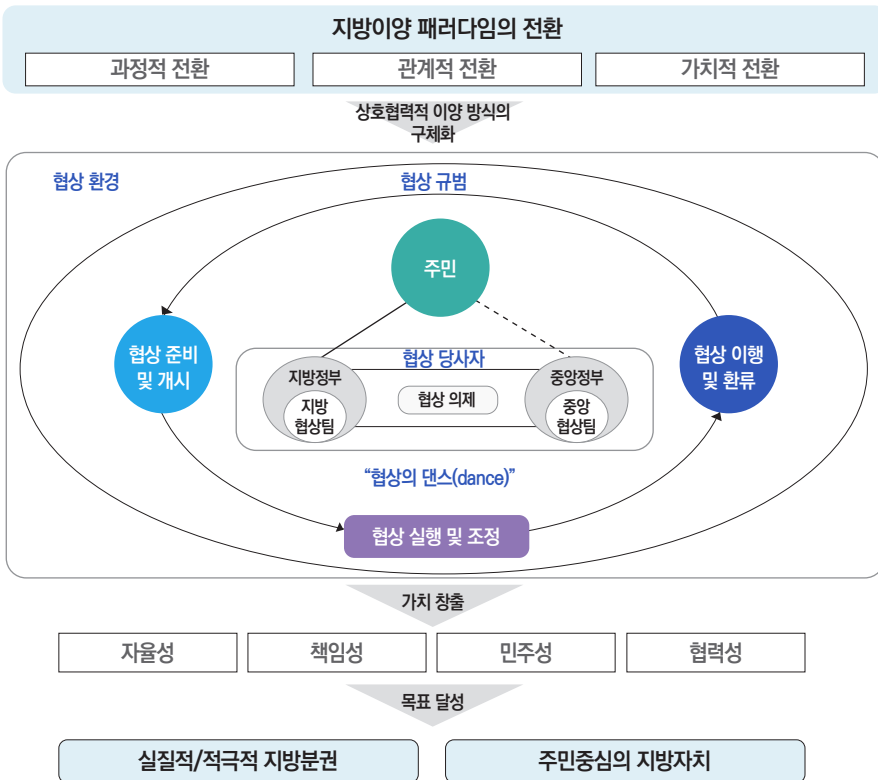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합의된 원칙 아래 지방이양을 설계하는 ‘지방이양 협상제도’를 제안함
 - 이는 지방정부를 단순한 정책 수용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이자 대등한 협상 주체로 재위치시키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 궁극적으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 관계를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분권 거버넌스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지방이양 협상 제도의 개념적 정립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 온 지방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을 상호협력적 설계의 과정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이양 패러다임은 과정적·관계적·가치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지방이양 협상제도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구체적 실현 장치로서, 자율성·책임성·민주성·협력성 등 지방분권의 핵심 공공가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
 - 여기서 협상은 전통적 개념이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의 상호 적응과 이해,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협상의 댄스(negotiation dance)’, 통합적 협상, 원칙 협상의 개념으로 접근함

지방이양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방이양 협상제도



● 해외사례 분석

- 영국의 분권협상(Devolution Deals)과 프랑스의 국가-레지옹 계획계약(CPER)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형 협상모델의 설계 기준과 방향성을 도출함
- 영국과 프랑스 모두 협상을 중앙-지방 간 협력의 제도적 틀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제도 설계에 있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함
 - 영국과 프랑스 모두 중앙-지방 간 권한 조정 또는 이전과 관련된 법제도적 근거 확보,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의 연계, 성과 환류 체계 구축 등에서 긍정적인 특징을 나타냄
 -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실질적 결정권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협상 과정의 비공개로 주민 참여와 투명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독립적 분쟁조정 메커니즘의 부재, 정치적 상황에 따른 협상 성과의 선택적 활용, 대도시 중심의 비대칭 분권 심화 등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지방이양 협상 제도의 설계

- 지방의 실질적 자율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이양 협상제도를 ①협상 준비 및 개시 단계 → ②협상 실행 및 조정 단계 → ③협상 이행 및 환류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계함
 - 설계 과정에서는 앞선 장의 이론적 논의, 해외 사례 분석, 중앙·지방공무원 설문,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함
- 협상 준비 및 개시 단계에서는 협상제도의 출발점으로서 지방의 자율적 제안권 보장과 협상 구조의 제도화가 핵심 요소임
 - 협상 의제와 관련해서는 '권한·재정·성과관리'라는 3대 의제를 제도화하여야 하며, 지방정부 주도로 주민, 중앙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한 의제 설정이 필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듈형 의제 구성이 필요함
 - 지방정부 협상 개시권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되, 장기적으로는 특별자치단체로 확대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개시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협상팀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의 협상전담조직 설치 방식, 인력 구성 및 확보 방식, 권한 범위, 유인체계 등에 대해 구체화하였음
- 협상 실행 및 조정 단계에서는 중앙과 지방,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요소임
 - 협상 기구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도 관련 중앙기관, 지방협의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합적 협력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공동 조사·연구기구를 설치하고, 협상 결과와 이행 현황의 정기적 공개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사전 정보 공개 의무화와 제3의 검증기관 활용을 통해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단계적 정보 공개 원칙을 적용해 민주성과 책임성을 조화시켜야 함
- 협상 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쟁점별 추가 협상 기회를 보장하고, 부분 합의된 사안부터 우선 실행하는 방식을 통해 협상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협상 이행 및 환류 단계에서는 협상 결과의 구속력 확보와 성과 기반의 지속적 개선체계 구축이 핵심 요소임**
 - 협상 결과의 제도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협약과 법제화를 병행하는 이중 제도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시행령 등으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법제화 절차를 도입하여 정치적 상황 변화나 행정 편의에 따라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성과관리 및 환류와 관련해서는, 중앙-지방 공동의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협상 이행 여부와 정책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협상 또는 권한 재조정 절차를 제도화해야 하며, 성과 미달 시의 책임 확보를 위한 행정·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여 평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협상 결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협상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법적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협상 결과에 대한 행정적·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하며, 협상 장기화나 갈등 발생 시에는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절차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두되, 이는 협상의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지방이양 협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협상 결과의 이행 점검과 환류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지방주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연구: 디지털 전환 수준별 유형화를 중심으로



주제어 디지털 전환 | 기술적 변화 | 행동적 변화

연구책임 이재용 · 연구진 김수동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결론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전환 수준을 ‘기술적 변화(digital transformation, TT)’와 ‘행동적 변화(behavioral transformation, BT)’의 이중 관점에서 측정·분석함
 - 분석 결과, 기술적 변화 측면에서는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등의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이 확보되었으나, 빅데이터 분석, AI 활용,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등 고도화 영역에서는 자치단체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행동적변화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디지털 기술 수용 의지와 리터러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이를 조직 차원의 성과로 연결하고 내재화할 수 있는 리더십, 제도, 변화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함이 확인됨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디지털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역량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책 실행의 디커플링, 지역 간 디지털 격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정책제언(유형별 한계 및 전략 중심)

- 기술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를 종합한 유형화 결과(4사분면 유형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전환 선도형, 참여 선도형, 잠재 성장형, 기술 주도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 유형별 강점과 한계 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방향성을 도출함

디지털 전환 선도형(H-H, 1사분면)

- 기술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가 모두 높은 유형. 관련 조례, 데이터·AI 인프라, 예산, 민관 협력 등의 측면에서 성공 요인으로 나타남
-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고도화, AI 기반 행정 혁신, 신뢰 기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참여선도형(L-H, 2사분면)

- 기술적 변화는 상대적으로 낮지만(L), 행동적 변화 수준은 높은(H) 유형. 제도적 기반 대비 기술 역량 부족이 장애요인으로 확인됨
-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 AI 패키지의 단계적 도입 필요함

잠재성장형(L-L, 3사분면)

- 기술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 수준이 낮은 유형. 법적 기반과 연계 구조는 있으나 구조적 지원 부족이 한계로 나타남
- 기초 인프라 확충과 인적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단계적 디지털 전환 추진 필요함

기술주도형(H-L, 4사분면)

- 기술적 기반은 높으나 행동적 변화가 낮은 유형, 기술 투자 대비 조직 수용성과 활용이 낮아 전략적 설계가 필요함
- 변화관리 및 조직문화 혁신, 주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재설계 등이 필요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 수준이 상승하고, 디지털 전환이 AI·빅데이터·플랫폼 기반의 행정 혁신과 거버넌스 전환을 요구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함
- 중앙정부 주도의 디지털전환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과 수용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 간 디지털전환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 간 공공서비스 품질의 불균형과 주민 체감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의 논의는 기술 도입 중심으로 조직 내부의 변화 수용성 및 행동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진단이 부족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전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수준에 따른 유형화와 맞춤형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AI 전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진단 체계 구축이 요구됨

III 주요내용

● 디지털 전환 개념 및 분석틀

- 디지털 전환은 기술 도입을 넘어 조직 경쟁력 향상과 행정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임
- 디지털 전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의 고려가 필요함
 - 기술적 변화는 디지털 기술을 조직에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체계적 변화를 의미함
 - 행동적 변화는 기술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중심의 심리적·행동적 변화를 의미함

● 측정 지표 및 분석 범위

- 기술적 변화 측정을 위해 데이터 관리 및 활용, AI/자동화 기술 도입,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 거버넌스 도입을 지표로 설정하고, 총 11개 세부 지표를 활용함
- 행동적 변화 측정을 위해 공무원 대상 지표(11개)와 주민 대상 지표(3개)를 구분함
- 공간적 범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시간적 범위는 2025년 기준으로 함

● 기술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 분석

- 자치단체 간 기술적 변화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데이터 개방, 표준화 수준 대비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음
 -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데이터 연계·공유 영역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행동적 변화 측면에서 공무원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신기술 수용 의지는 높게 나타났으나, 이를 제도화·조직화하는 리더십 및 정책 지원이 낮은 병목 현상이 확인됨

1-6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실태분석 및 활용 제고방안 : 중앙-지방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주제어 가용재원 | 재정자율성 | 재정분권

연구책임 전성만 · 연구진 전영준, 황해동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재정자율성 확대 위해서는 세입구조와 세추구조의 동시 개선 필요

• 세입측면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세출측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정책 수행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적 개편과 성과 중심의 협약형 보조사업 확대가 요구됨

●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서 재정자율성 측정을 위해서는 “가용재원” 지표 활용 필요

-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기존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중심에서 벗어나 가용재원 중심의 재정평가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 가용재원의 개념, 범위, 측정에 대한 정교화 필요

- 가용재원의 객관적인 개념 내에서 주관성을 배제를 위한 데이터 측정과 방법론의 정교한 검토가 요구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 재정여력에 대한 논의 간과

-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약 30년 동안 지방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약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어느 수준의 재정여력을 보유해야 주민의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와 같은 지표로 평가되어 왔지만, 이 지표들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III 주요내용

● 가용재원의 개념화-중앙-지방 재정 간 관계에서 재정의

-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서 지자체 재정자율성 측면에서 “**운용 가용재원**”이 중요
 - 1) 사전적 가용재원(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와 같이 재원의 구조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 2) 운용 가용재원(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 3) 사후적 가용재원(순세계잉여금과 같이 재정운용 결과 나타나는 재원) 중에서 운용 가용재원이 실제적으로 지자체의 가용재원의 개념에 가까움

● 운용 가용재원의 측정: 5단계 기준을 통해 규모 추정

-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용재원 모델을 구축
 - 1) 5단계 기준을 통해 가용재원 규모를 추정하고, 예산 통계목을 재구성하여 지자체의 재정운용 행태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였고, 2) 또한 분석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가용재원의 정책적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함(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정책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의 의미가 비교적 제한적인 반면 기초 시·군은 지역개발 및 주민서비스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단위로서 가용재원이 매우 중요한 재정지표로 작용)

● 가용재원 실태의 정량분석 결과, 재정자립도보다 낮은 가용재원 지자체 다수 발견

- 재정자립도보다 낮은 가용재원 비율은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서 비롯

-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의무 매칭지출이 많을수록 가용재원비율은 낮아짐
- 실증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확대에는 자체세입의 확대 및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함
- 세출 구조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다양한 정책 분야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지출 공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1-7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 시점(timing)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제어 재정 지출 시점 | 지역경제 활성화 | 신속집행

연구책임 이서희 • 연구진 유보람, 최정우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상반기 재정 집행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실증 확인

- 상반기 재정 집행액이 1% 증가할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0.2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반기 집행이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함을 입증함
 - 신용카드 소비 효과는 수도권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순창업 수(골목상권) 역시 상반기 집행 확대에 따라 평균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임
 - 투자성 지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크며,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 시기에도 상반기 집행의 긍정적 효과는 견고하게 유지됨을 확인함

●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패키지 제안

- 지역·사업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목표 관리, 구조적 제약 해소를 위한 행정 프로세스 개선 등을 제안함
 - 획일적인 단일 목표율(예: 60%)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 구조를 반영한 탄력적 목표 설정 및 자율성 강화가 필요함
 - 기획-배정-계약-집행 단계별 병목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입찰 패스트트랙 도입, 이전재원 교부 시기 조정, 선제적 사업 준비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함
 - 단순 집행률 수치 관리에서 탈피하여, 경제 파급 효과와 집행 가능성에 기반한 '품질 중심 평가 체계'로의 고도화를 제안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재정 집행 ‘시점(Timing)’의 정책적 중요성 부각

- 재정 정책의 효과는 지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언제’ 지출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나, 그간의 연구는 주로 총량적 확대에 집중되어 시점의 효과 규명은 미흡했음
 - 상반기 재정 집행은 경기 둔화 시기 지방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핵심 전략이나,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

● 정책 기대와 집행 현장 간의 괴리 해소 필요

- 지자체 실무 현장에서는 연초 인사 발령, 법적 계약 절차의 물리적 소요 시간, 동절기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획일적 신속집행 목표 달성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상반기 집행이 실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실행력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II 주요내용

● 상반기 재정 집행의 지역경제 효과 실증분석(정량분석)

- 2016~2024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집행은 지역경제(GRDP)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 안정적인 긍정 효과를 미침
 - 수도권외의 파급 효과가 비수도권보다 크며, 비수도권은 GRDP와 순창업 부문에서 유의한 효과가 관찰됨.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공 지출이 민간 소비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남
 - 투자성 지출이 소비성 지출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뚜렷하게 크게 나타남

● 집행 현장의 구조적 제약 및 병목 요인 진단(정성분석)

- 행정·제도적 시차, 물리적·절차적 한계 및 현장의 인식 등을 진단하여 분석함
 -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다층적 전달 체계의 시차와 이전재원(국비·교부세)의 분기별 자금 배정 구조가 상반기 즉시 집행을 저해함
 - 대규모 시설 사업의 보상·설계·계약 절차 장기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존재, 연초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단절 등이 주요 병목 지점으로 식별됨

II

연구보고서

- 획일적인 집행 목표 관리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 집행을 유발하여 사업의 질적 완성도를 저해할 우려가 제기됨

● 실천적 제도 개선 방안

- 중앙-지방 간 일정 동기화 및 전년도 하반기 선제적 지침 통보, '선(先)기획-후(後)예산' 방식 도입으로 시차 단축 등을 제안함
 - 소액·단순 사업 대상 계약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비수도권 취약 지역을 위한 '광역 단위 공동계약' 활성화 및 지역 여건(재정자립도 등)과 사업 유형을 반영한 차등 목표제 시행 등도 고려될 수 있음

1-8

에이저테크 중심의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주제어 지역산업 | 초고령사회 | 고령친화산업

연구책임 양원탁 · 연구진 이원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 에이저테크 산업생태계 진단에 근거한 전문화 기반 마련

- 지역 단위 에이저테크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확화
- 지역별 에이저테크 산업기반과 디지털혁신역량의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육성 계획과 연동하여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

● 복지-산업 간 연계를 위한 전주기 통합지원 인프라 구축

- 산업-복지를 총괄·조정하는 지역 컨트롤타워와 통합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실증-인증-생산-보급-환류가 순환되는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조성
- 산업·기업지원과 사용성 평가·돌봄·복지 인프라를 공간적으로 연계한 복합단지과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중점분야에 특화된 순환형 생태계를 조성

● 지속가능한 혁신 창출을 위한 다층적 추진체계 고도화

- 지자체를 매개로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복지와 산업을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체별 역할분담과 협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추진체계 고도화
- 국가계획과 지자체 종합계획이 상호 연동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수요와 육성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정합성과 환류 구조를 보완

●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수요 기반 시장생태계 조성

- 지역 차원에서 에이지테크를 둘러싼 수요 및 공급 특성을 바탕으로 전략 제품을 선정하고, 지역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초기보급 지원 및 수요 기반을 형성
- 리빙랩을 통한 사용자 참여형 실증 및 피드백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도형 보급·확산 단계로 전환하여 자생적인 시장생태계를 구축

● 지역 단위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 현행 법률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에이지테크 산업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의 범위와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국가계획과 지자체 계획 간의 법적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지방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역 수요에 기반한 육성 전략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확립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돌봄인력 부족, 복지재정 부담 증대 등 사회·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이나, 돌봄 인력 부족과 수요 급증으로 인해 디지털 기반의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 요구가 증대
- 기존 에이지테크를 포함한 고령친화산업은 시장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성과 창출에 한계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으로 골든타임 도래
- 에이지테크의 전주기적·수요지향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5대 중점분야를 바탕으로 지역별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통한 지역 단위 육성 전략 수립이 필요

III 주요내용

● 이론적 논의와 동향 분석

- 에이지테크를 둘러싼 개념과 산업적 특성을 정립하고,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의 산업육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고령친화산업과 에이지테크의 개념과 산업적 특성을 정립하고,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산업육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

● 지역별 에이지테크 산업 역량 분석과 유형화

- 정부의 5대 에이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17개 시·도의 산업 전문화 수준과 디지털혁신 역량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강점과 취약점을 비교·분석
- 지역별 산업 역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비교우위와 디지털 역량에 근거한 차별화된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

● 지자체 고령친화산업 정책 추진실태 분석

- 광주와 전북을 사례로 정책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정책 추진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
- 분석 틀에 따라 중점분야 선정, 산업생태계 구축, 제도·거버넌스, 초기수요 창출 등 4가지 측면에서 지역 단위 에이지테크 고도화를 제약하는 공통된 문제점을 도출

● 에이지테크 중심의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단위 에이지테크 중심의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과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

1-9

도시공원 타당성조사의 가치추정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주제어 도시공원 | 타당성조사 | 사용가치

연구책임 김남주 • 연구진 문소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도시공원 가치추정 과정에서 단일 방법론 중심 접근의 구조적 한계 진단

- **현행 도시공원 가치추정 시 활용되는 방법론별로 한계가 존재하며, 타당성조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의 의존도가 높음**
 - 환경재 가치추정에 적용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도 도시공원의 다기능성·공공재적 특성·장소성·이용행태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확인
 - 헤도닉접근법은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공원가치 왜곡 가능성, 여행자비용법은 도시공원의 짧은 체류·근거리 이용 특성상 여행이란 의미 적용 한계, 선택실험법은 공원 속성 세분화의 현실적 제약이 존재
- **개별 방법론이 갖는 이론적 한계 외에도 시간적·비용적 제약으로 인해 방법론 적용 과정에서 도시공원에 내재된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 존재**
 - 설문 난이도, 제공되는 정보의 부족, 보기카드 구성 한계로 인해 일반인이 응답하는 최대지불의사금액(WTP) 과소 추정 경향 확인
 - 비사용가치 측정을 위해 CVM을 적용하지만 도시공원의 비사용가치(환경·생태·재난대응·상징성 등)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

● 도시공원에 대한 지역주민 수요와 타당성조사 결과의 정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단기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단기 개선안으로 현행 CVM 적용은 유지하면서 설문구조 개선 방향 제시**
 -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항목 분리 및 구체화, 공원유형·규모·입자·시설 수준에 대한 시각적 정보 강화, 응답자 대상 사전 설명 및 인지 수준 제고, 보기카드 구조·디자인 개선을 통한 응답 품질 제고 등

- 중기 개선안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조성에 적합한 가치추정 모형 도입
 - CVM 의존 완화 및 복합적 가치추정 모형 도입 검토(진술선호 기반 체류시간 조사 방식 등)
 - 공원 기능 유형화에 기반한 표준화된 가치항목 체계 정립 및 도시공원 부문 가치추정 지침 마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도시공원 수요 급증과 타당성조사 결과 간 괴리 발생

- 기후변화·코로나19 이후 도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 급증
- 정책현장-타당성조사-투자심사 간 비정합성 존재
 - 도시공원에 대한 주민의 높은 수요에 비해 타당성조사(경제성분석) 결과는 낮은 가치 산정 문제 존재하며, 투자심사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고려되어 사업이 통과하는 현실적인 문제 존재

● 정책결정 과정에서 타당성조사의 역할 및 평가결과 실효성 제고 필요성 증대

- 도시공원의 복합적·다층적인 가치를 종합·유형화하여 해당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자체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기여하는 타당성조사의 역할 강화 필요

III 주요내용

● 자연공원과 차별성을 갖는 도시공원의 가치 종합 및 재유형화 실시

- 설문 응답자의 시간적·인지적 한계를 고려하여 도시공원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재유형화함
 - 도시공원의 개념, 법적 근거,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도시공원이 갖는 다층적 가치를 재구조화
 - 도시공원의 경제적가치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할 수 있고, 사용가치는 오락·여가 및 휴양, 건강 증진, 교육, 친목 및 문화, 비사용가치는 환경보호 및 방재효과, 도시경관, 상징성으로 재분류 가능

● 일반인 FGI 및 타당성조사 검토를 통해 현행 평가 체계의 한계 진단

- 도시공원 가치추정은 ①환경재의 일환으로 비사용가치를 갖고, ②부문 지침 부재 속에서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CVM 중심의 가치추정이 수행됨
- 지자체가 수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서 CVM을 적용한 가치 추정 시 사업 규모 및 시행에 따른 이용 특성보다 영향권 내 인구수에 따라 가치가 추정되면서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불리한 분석결과 발생
- 설문 과정에서 5년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추가 지불할 세금이라는 가상상황 이해도 부족 및 보기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한 응답 정도가 낮음을 확인

● 도시공원 가치추정 개선 방안 제안

- 타당성조사로 적용 가능성, 구체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개선안 제시
- (단기) 현행 가치추정 방식(CVM)을 유지하되 설문조사 과정 개선을 통한 응답 품질 제고 방안 마련
 - 설문조사 업무흐름도 배포, 보기카드 개선을 통한 시각 정보 향상, 설문조사 전 FGI 실시 및 설문문항 수준 검토 등 도시공원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표준화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제시
- (중기) 새로운 도시공원 가치추정 방식 검토 및 타당성조사 부문 지침 마련 검토
 - 재유형화된 도시공원 가치항목 체계를 반영하면서 지자체에 특화된 가치추정 방식 도입의 필요성 제시(진술선호에 기반한 체류시간 조사 방식 도입 등)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가치추정 방법 검토를 통해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공공재적 가치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타당성조사 결과와 주민 체감가치 간 괴리를 완화하는 방안 모색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 1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발전 방향 연구
: 대국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2 국민 편의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감증명제도 개선 연구
-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및 성과지표 표준안 마련
- 4 읍·면·동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 연구
- 5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6 효과적인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 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연구
- 8 초광역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 발전사업 선정기준 마련

2-1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발전 방향 연구: 대국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주제어 지방의회 | 의정활동 | 대국민인식

연구책임 김건위 • 연구진 주희진, 추병주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의회 30년 의정활동 분석 결과

- 입법·감시·주민참여 활동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질적 성과는 제한적임
- 조례 발의 등 입법활동은 증가했지만, 의원 질문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함
- 주민 인지도와 신뢰 수준이 낮아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주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지방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 지방의원·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부정적 평가가 높음
-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와 기능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부족함
-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확대(37.9%),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36.0%)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정책제언

- 의정활동 분석 결과 기반 제도 개선 방안
 - 의정활동의 질 제고를 위하여 의원의 정책분석·소통 역량 강화
 - 재정심의 지원: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및 전문인력 확충

II

연구보고서

- 의원·지원인력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여성·청년 지원
- 자율규제·윤리규범: 징계 세분화 및 정보공개
- 대표성 보완: 여성·청년 공천 확대·비례 보완·청년 육성

• 국민인식 인식 기반 제도 개선 방안

- 지방의원 대표성 강화: 여성·청년 공천 의무화, 비례대표제 보완
- 견제 기능 실효성 강화: 행정사무조사·예산심의 공개 및 결과 공유, 제재수단 강화
- 전문성 강화: 대학·연구소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 지방의원 맞춤형 역량 교육 강화
- 윤리성·책임성 강화: 자율규제 및 윤리규범 강화, 외부 통제기구 설치
- 주민 인식 및 참여 제고: 주민참여 확대 제도 활성화, 지방의회 홍보 강화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시점의 지방의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 파악

-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인식은 부정적임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의정활동 수요자인 주민의 지방의회 인식을 조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문제 대응을 선도하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필요
 -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여 주민인식 조사를 통해 현재의 지방의회 문제점 등 진단 필요

III 주요내용

● 지방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 의회 인식: 의원·의회에 대한 인지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접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의원의 윤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 확대를 요구
- 제도 인식: 정당공천·선거구는 현행 유지를 선호하지만 찬성과 반대가 혼재되어 있음

- 우선 과제: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하며(의정모니터링단 등), 자체감사·전문가 자문단 등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지방의회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실질적 주민대표 기관의 위상 정립: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 자율적 의정활동 기반 구성에 따른 책임성 확보: 실질적인 지방대표 기관 확립을 비전으로 자율적 의정활동 기반 구축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원칙 및 방향 제안

- 대표성 강화: 성별·연령·계층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
- 실효성 강화: 제도 존재를 넘어, 집행부 견제·정책지원 기능의 실질적인 작동
- 책임성·투명성: 자율적 규제와 주민에 대한 책무성 제고
- 주민 인식 제고: 지방의회 기능과 성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참여 확대

2-2

국민 편의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감증명제도 개선 연구



주제어 주민 접근성 제고 | 디지털 행정 | 행정 효율화

연구책임 황정운 · 연구진 김건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인감증명제도의 개선방향

- 읍면동 차원의 업무 변화 및 행정부담을 고려한 단계별 제도개선 전략 필요
 - (단기)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인감 신규 신고의 주소지 요건 완화 적용
 - (중기)전산화를 통해 수기 인감대장 폐지 및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고·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의 범위 확대
 - (장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기재’ 및 ‘대리인 정보 상세 기재’ 의무 완화를 통해 본인 서명사실확인제도 중심의 인증체계로 점진적 전환

● 법·제도적 고려사항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과제

- 국민 편의와 일선 현장의 행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법제정비를 추진
 - (단기) 시군구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 시범 규정 마련 및 업무 폭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력의 한시적 지원
 - (중기) 수기 인감대장 폐지를 위한 인감증명법 및 시행령 개정과 전산 장애·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 매뉴얼 마련·훈련
 - (장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제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중심의 인증체계 개편, 수요기관의 인감 이용 관행 개선
- 제도개선 실효성 위해 현장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
 - 인감 업무의 재배치 및 정원 재설계, 전산·보안·비상대응 교육, 디지털 취약계층 대응 창구 운영 등을 통해 공무원의 책임 부담과 적용 비용을 완화 장치 마련

- 인감증명제도 축소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민과 수요기관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단일 인증체계로 전환 추진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생활권 변화에 부합하는 인감증명제도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주민등록 주소지 중심의 신고·변경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직주불일치, 생활권 분산이 일반화된 행정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
 -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나 신고·변경은 주소지 관할로 제한되어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
-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소지 요건 완화 등 인감증명제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증대**

●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감 관리체계 전환 요구 증대

- **인감대장의 수기 및 전산 이중 관리, 문서 이송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의 존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관행 등으로 인해 제도 간 대체성이 제한되는 한계 존재**
 - 인감대장 전산화와 함께 인증체계의 합리적 재편을 통해 인감증명제도의 효율성과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

III 주요내용

● 현행 인감증명제도 운영체계 검토 및 쟁점 도출

- **문헌분석을 통해 인감증명제도의 운영 실태 및 현황을 검토하고, 업무 담당자 대상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현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무 부담을 파악**
 - 주소지 요건의 제약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인감대장 관리의 비효율성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도출

● 인감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 및 인식 분석

- 일반 국민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제도의 이용 실태,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 국민은 접근성·편의성 개선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인 반면, 담당자는 업무량 증가 및 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
- 인감대장 전산화의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제도 개편 전략 도출을 위해 수요기관(은행, 법원행정처) 및 전산시스템 구축 관계자 대상 심층 면접조사 수행
 - 인감대장 전산화 이후의 방향 및 단계별 개선 전략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도출

● 인감증명제도 개선의 정책적 효과 분석

- 주소지 요건 완화 시 발생 가능한 수혜인구 규모 추정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업무량 변화 분석
 - 인감 신고·변경의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국민 편의 및 접근성의 향상의 실익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감 신고·변경 수요가 대도시·업무중심지로 집중됨에 따라 업무량의 공간적 편중 또한 확대
-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 확대를 위한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감대장 전산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우 보수적인 조건 하에서도 전산화의 중·장기적인 타당성이 충분히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2-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및 성과지표 표준안 마련

주제어 지방자치제도 | 자체평가 | 성과관리

연구책임 김수동 · 연구진 이재용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자체평가 역량 강화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지역·권역별 전문가 인력풀 구축을 통한 실질적 전문성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형식적 위원회 모델을 극복하고 현장 밀착형 자문·컨설팅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임
 -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등 단계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담당자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역량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도입형 기관에는 기반 구축, 체계화형 기관에는 프로세스 개선, 고도화형 기관에는 전략적 성과관리 컨설팅을 제공해야 할 것임
 - 성과지표 클리닉 제도 도입을 통한 부서별 심층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것임
- 평가 결과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성과상여금 우대, 특별승진, 희망보직 부여 등 다각적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평가 총괄부서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된 표준 조례(안)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자체평가 활용 기반 구축 방안

- 성과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조성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통합 DB 구축을 통해 우수 지표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자체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담당자 연찬회 정례화를 통한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할 것임

- **자체평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표준화된 공통 성과관리시스템 모듈이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할 것임
 - 맞춤형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제도적 진단 및 개선 요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자체평가제도의 종합적 재검토가 요구됨**
 - 형식적 구조는 정착되었으나, 실질적 운영과 성과관리 내실화가 미흡한 상황임
 - 정책환경 변화와 지방분권 강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적응과 혁신이 부족함
- **자체평가 중심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
 - 중앙정부 주도의 분절적 평가 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약과 행정비용 증가가 문제임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 30주년에 따른 분권형 성과관리 체계 재정립이 요구됨**
 -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주권 강화, 자치권 확대 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패러다임의 질적 변화가 요구됨
 - 중앙정부는 지원자·조력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방법론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전환이 필요함

● 운영 역량 격차 및 내실화 요구

- **지방자치단체 간 자체평가 운영 역량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전담 인력과 시스템 보유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 기관의 제도적 성숙도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 모델과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함
- **평가 결과와 정책·예산의 환류 단절로 인해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
 - 자체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이나 사업 개선에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법적 의무 이행 절차로만 인식됨
 - 성과지표 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지표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이 미흡함

III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개념 및 현황

- **자체평가제도의 이론적 완결성과 실질적 운영 간 괴리가 확인됨**
 - 계획수립→지표설정→집행→평가→환류의 체계적 운영 절차는 구축되어 있으나, 실질적 이행에 한계가 존재함
 - 다층적 평가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자체평가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가 지적되기도 함
- **자치법규 제정 현황과 성과지표 가이드라인의 방법론적 제약이 나타남**
 - '자체평가'가 명시된 자치법규는 105개 시군구, 110건이 존재하나, 제도화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기존 성과지표 가이드라인의 경우 BRM 기반 분류체계와 정량지표 중심 구성(90% 이상)으로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나, 융합적 정책과제 관리와 질적 성과 측정에는 한계를 보임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운영 현황조사

- **제도 운영의 보편성과 역량 격차가 동시에 확인됨**
 - 모든 응답자(145명)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전담 조직 구성(62.8%)과 전담 인력 배치(53.8%)에서는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제도적 필요성 인식(57.9%)에 비해 실질적 중요성 인식(42.1%)이 낮아 제도에 대한 인식 격차가 존재함
- **평가 결과 환류의 선별적 활용과 지원 요구의 실무 중심적 특성이 나타남**
 - 운영 투명성(77.2%)과 결과 신뢰성(66.2%)은 높으나 예산 연계(17.9%)와 사업 내용 반영(22.7%)은 현저히 낮게 나타남
 - 성과지표 관리 가이드라인(72.4%), 운영 가이드라인(70.3%), IT 시스템 구축(66.1%)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 **지역 맞춤형, 실무 활용성, 성과관리 내실화, 제도적 정합성의 기본원칙을 설정함**
 -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선택적·모듈형 가이드라인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II

연구보고서

- 이론적 설명을 최소화하고 업무 흐름에 따른 단계별 과업과 담당자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 **도입형-체계화형-고도화형의 수준별 모델을 제시함**
 - 도입형은 기본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체계화형은 정량·정성평가 균형화, 고도화형은 전략적 성과관리 구현에 초점을 맞춤
 - SMART 원칙 기반 성과지표 개발과 지표 성격평가 도입을 통한 평가의 정교화를 추진함
- **성과지표 관리 가이드라인의 체계화 및 실무 중심 개선을 추진함**
 - 7가지 개발 원칙과 7단계 개발 절차를 체계화하고 성과지표 정의서 표준 서식을 제공함
 - 4개 지방자치단체 576개 지표 사례를 공통형과 개별형(도시형·농촌형·어촌형)으로 분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함

2-4

읍·면·동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 연구

주제어 주민자치회 | 맞춤형 모델 | 참고조례

연구책임 강영주 • 연구진 이경은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맞춤형 주민자치회 모델 제시 및 참고조례 개정안 등 정책 제언

- 지역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3가지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①공동체자립형, ②숙의정책협력형, ③공공서비스직접운영형)을 도출하고, 각 지역이 특성과 해결 과제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화함
 - 공동체자립형은 공동체 형성과 공유자원·생활편익의 공동관리(공동체자립기능)를 통해 정부도 시장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공백 영역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 중심 기능을 주로 수행함
 - 숙의정책협력형은 주민 의견의 숙의적 수렴과 정책 제언·협의·자문·모니터링(숙의정책 협력기능)을 통해 기존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협치 중심 기능을 수행함
 - 공공서비스직접운영형은 공공서비스의 기획·운영·평가 및 소규모 위·수탁 사무의 직접 운영(공공서비스직접운영기능)을 통해 기존 공공서비스를 대체 가능한 수준의 계약 기반 책임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음
- 현행 획일적 참고조례를 ‘기능연동형(Function-Based) 참고조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함
 - 공통 기본 조항은 정의 확장(자치활동 중심), 맞춤형 운영 원칙, 주민주도 설치 및 분회 설치, 필수·선택 기능 이원화, 주민총회 권한 강화, 자치규약 격상 등을 포함함
 - 기능별 차별 적용 조항은 사무국 설치(기능별 조직 유연성), 재정 및 회계(재원 구조 다변화), 감독(책임성의 차등화), 법인 설립(법적 리스크 해소) 등을 포함하여 ‘기능에 맞는 규칙’ 적용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확보함
 -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재정 확보, 주민 역량 강화, 활성화 로드맵의 4대 차원에서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2025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검토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읍·면·동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 사회 복잡성 증대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는 읍·면·동의 행정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행정력 약화와 민간 서비스 철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부도 시장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공백 영역이 발생하고 있음
 - 인구증가 지역에서도 획일적 행정체계로 인해 다양한 계층·세대·생활양식을 가진 주민들의 복잡다기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사회는 다양한 주체들이 비선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복잡적응 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으로서, 중앙에서 설계된 획일적 제도로는 각 지역 고유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확대되었으나, 현행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조직·주민대표기관·행정사무 수탁기관으로서의 복합적 성격이 혼재되어 역할 정체성이 모호하며, 실질적 권한 부족과 행정 의존성으로 인해 ‘관변화’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참고조례에 기반한 ‘협력형’ 모델 중심의 운영은 지역별 맞춤형 주민자치 실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변화된 행정환경과 지역사회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조직화’ 원리에 기반한 유연하고 다원화된 모델 설계가 시급함

III 주요내용

● 맞춤형 주민자치회 모형 재설계

- 복잡계 이론(맥락)·공유지 이론(대상)·거버넌스 이론(수단)을 종합하여, 주민자치회 활동 영역의 성격에 따라 자치-협치의 스펙트럼 위에 위치하는 3가지 기능 유형을 도출하였음
 - 각 유형은 규칙의 정도, 정부-주민 관계, 서비스의 성격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향후 모듈형 참고조례안 설계의 기본 방향이 됨
- 공동체자립형: 공동체 형성과 공유자원·생활편익의 공동관리를 핵심 기능으로 하며, 정부도 시장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공백 영역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 중심의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모델임
 - 최소한의 규칙(자율규약)만 적용하여 창발성과 유연성을 최대화하고, 회비·공동기금·수익 등

- 자체자원 중심으로 운영하며, 자율 운영을 최대 보장하고 사후보고 원칙을 적용함
- 일본 정내회(町内会), 광주 송정1동 주민주도 마을화페 발행, 의성군 단촌면 주민주도 산불 재난 극복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지하수 거버넌스 사례에서 공유자원의 자율관리 원리를 확인함
 - **숙의정책협력형: 주민 의견 수렴, 정책 제안·협의, 자문·모니터링을 핵심 기능으로 하며, 기존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협치’ 중심의 파트너십 기반 상호보완적 거버넌스 모델임**
 - 보통 수준의 규칙(위탁계약)을 적용하여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지원 예산(보조금) 중심으로 운영하며, 숙의 과정에는 불개입하되 보조금 사업만 감독함
 - 미국 네이버후드 카운실(Neighborhood Council), 네덜란드 위크라드(Wijkraad)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국내 화성시 반월동 주민자치회 조례안에서 숙의정책협력 기능의 제도화 사례를 확인함
 - **공공서비스직접운영형: 공공서비스의 기획·운영·평가, 소규모 위·수탁 사무의 직접 운영을 핵심 기능으로 하며, 기존 공공서비스를 대체 가능한 수준의 ‘협치’ 중심 계약 기반 수평적 책임 거버넌스 모델임**
 - 높은 수준의 규칙(조례·규칙)을 적용하여 운영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위탁사업비와 행정지원의 혼합 재원으로 운영하며, 실행법인 설립, 계약 기반 평가, 외부감사 의무를 적용함
 - 영국 패리시 카운실(Parish Council)이 대표적 사례이며, 국내 안산시 재활용정거장 운영,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위탁 등에서 공공서비스 직접운영의 가능성을 확인함

● 참고조례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 **현행 참고조례가 모든 주민자치회에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강요하여 지역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기능에 따른 규칙 수준과 감독 원칙을 차등화하는 ‘기능연동형(Function-Based)’ 참고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함**
 - 공통 기본 조항(예시): ①제2조(정의) 자치활동 중심 정의 확장, ②제3조(운영원칙) 주민주권·맞춤형 운영 원칙 명시, ③제4조(설치) 주민주도 설치 및 분회 설치 요건 확대, ④제5조(기능) 필수·선택 기능 이원화(공동체 형성·공유자원 관리 등 필수, 숙의정책협력·공공서비스 직접운영 선택), ⑤제14조의2(주민총회) 최고의결기구로 위상 강화, ⑥제25조(자치규약) 운영세칙을 자치규약으로 격상
 - 기능별 차별 적용 조항(예시): ①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기능에 따른 조직 유연성, ②제21조의2(재정 및 회계) 공적·사적 자원 구성 및 회계관리 원칙, ③제23조(감독) 수행 업무 성격에 따라 감독 범위 차별화, ④제25조의2(법인 설립) 대규모 위탁·고용 시 별도 법인 설립 근거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재정 확보 방안, 주민 역량 강화 방안, 활성화 로드맵의 네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주민자치회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
 - (행정적 지원체계) 중앙(행안부 총괄·종합정보시스템·공통 교육)-광역(지원 허브·중간지원·연합체 지원)-기초(자율성 전제 실행 지원·소통 창구·의회 관계 명확화)의 다층적 체계 구축
 - (재정 확보) 국비 확대(특별교부세·균특회계)·지방비 안정화(예산 편성 의무화·유형별 차등 지원)·자체 자원 다각화(회비·기부금·수익사업)
 -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체계(사전 교육·보수 교육·유형별 심화·리더 양성)·중간지원조직 활용·우수사례 확산
 - (활성화 로드맵) 행안부·광역·기초·주민자치회 4대 주체별 단기(참고조례 정비·시범 지정·자치규약 정비) → 중기(국비 지원체계·종합정보시스템·역할 분담 명확화·역량 강화) → 장기(일반법제화·헌법적 위상 정립·자립 운영·거버넌스 주도) 과제 제시
 - (법 제개정 쟁점) 2025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의의(행정종속 → 자율협력, 중립성·재정자립 강화, 협의체 근거 신설)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로 설치 보편화, 법적 지위 명확화, 기능 모듈화 법적 근거 신설, 행재정 지원 의무화 등을 제시함

2-5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주제어 지역금융 | 지역발전 | 지역경제

연구책임 전영준 • 연구진 전성만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정성 기반의 최종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해당 지표 체계에서는 금융기관의 본원적 기능인 자금공급 및 금융접근성과 관련된 정량지표가 전체 배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 최종 정립된 체계는 8개 평가부문, 14개 평가항목, 3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의 배점 구조로 설계된바,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 지역기업 지원 부문, 지역서민 지원 부문의 배점이 각각 가장 높게 형성(18점)되어 평가지표 체계의 핵심 축을 이룸
 - 또한, 금융기관이 지역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사회·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인재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부문을 평가지표 체계에 함께 포함함
 - 한편, 이러한 최종 평가지표 체계는 금융기관의 유형을 전국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나누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실행 가능성·공정성·전문성·지역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기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의 수행 주체와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함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 평가는 행정 부담과 지역 이해 부족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반면,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일괄 평가는 현실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임
 - 개별 지방자치단체 직접 평가는 지역 금융 수요와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으나, 전문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됨
 - 국내·외 공공부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적합성 기준 적용 결과, 광역자치단체 주도 평가와

II

개별 자치단체 직접 평가 모두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할 때 공정성·객관성의 담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문성·효율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 평가가 우위를 보인 반면, 지역 이해도 측면에서는 개별 자치단체 직접 평가의 강점이 확인됨
- 평가조직 구성 방식으로는 별도 평가위원회 신설과 기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활용이 검토되며, 전자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나 비용 부담이 크고, 후자는 즉시 도입이 가능하나 전문성 보완이 필요함
- 아울러,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과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전제로, 금융기관 제출 자료는 자치단체 실무부서가 표준 서식에 따라 검증·취합하고, 중앙정부는 지표 정의·매뉴얼 제공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역 간 금융자원 배분 격차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필요성 증대

- 비수도권을 위시한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 이에,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됨
 -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지표가 부재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 따라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객관성 및 적실성을 갖춘 평가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주체 및 운영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개념 및 이론적 검토

- 최근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는 지역재투자라는 용어로 통용되어 정책 영역에서 정의되고 있음
 - 해당 개념은 금융자원이 단순한 사회공헌의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순환하고,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충족되며, 실제 기여가 어느 단위에서 측정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관점에 해당함
- 한편, 내생적 성장이론, 사회적 자본론, 균형성장이론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지역의 장기적 성장의 내생적 동력을 제공하고,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가능하며, 자본의 분산적 배분을 가능하게 함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관련 국내·외 주요 제도 검토

- 미국은 ‘지역재투자법(CRA)’에 따른 평가결과를 금융기관의 인허가, 합병, 영업 확장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투자와 포용적 금융 확대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제재 효과가 제한적이고,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머물러 수도권 및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님
- 또한,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과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결과가 참고·활용되고 있으나, 해당 평가제도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간에 평가항목이 중복되거나 평가대상(금융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함
- 무엇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항목과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역 여건과 정책 목표를 반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님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지표 개발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정성 기반의 최종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해당 지표 체계에서는 금융기관의 본원적 기능인 자금공급 및 금융접근성과 연관된 정량지표가 전체 배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 최종 정립된 체계는 8개 평가부문, 14개 평가항목, 3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의 배점 구조로 설계됨

- 이때, 지역자금 역내 순환 부문, 지역기업 지원 부문, 지역서민 지원 부문의 배점이 각각 가장 높게 형성(18점)되어 평가지표 체계의 핵심 축을 이룸
- 또한, 금융기관이 지역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사회·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인재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부문을 평가지표 체계에 함께 포함함
- 아울러, 정성평가를 위해 기타 지역사회 기여 부문을 포함함으로써, 금액화·지표화가 어려운 금융기관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한편, 이러한 최종 평가지표 체계는 금융기관의 유형을 전국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나누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체계 운영 방안 제시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일괄 평가가 현실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 평가는 행정 부담과 지역 이해 부족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게 평가됨
 - 한편, 개별 지방자치단체 직접 평가는 지역 특성 반영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 및 행정 효율성 측면의 한계가 지적됨
-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주도 일괄 평가와 개별 자치단체 직접 평가 모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가능함
 - 다만, 전문성·효율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 평가가 우위에 있고, 지역 이해도 측면에서는 개별 자치단체 직접 평가의 강점이 확인됨
- 평가조직 구성은 별도 평가위원회 신설과 기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활용 방안이 검토되며, 전자는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나 비용 부담이 크고, 후자는 즉시 도입이 가능하나 전문성 보완이 필요함
- 아울러, 민간위원 중심 위원회와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전제로, 자치단체 실무부서는 자료 검증·취합을, 중앙정부는 지표 정의·매뉴얼 제공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체계 구축이 요구됨

2-6

효과적인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인구감소 | 빈집 정비

연구책임 양원탁 • 연구진 이원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빈집 법제도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현재 빈집 정비에 관한 2개의 법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가칭)빈집 정비 지원 특별법의 입법 추진을 제안**
 -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빈집 정비를 저해하는 인구성장기 만들어진 법·제도적 제약요인과 물리적 정비 또는 철거 중심 빈집 정비의 한계를 개선
 - 민간과 지자체 역량만으로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의 관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정책과 연계 체계를 확보
 -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된 빈집 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현행 법률의 비효율성·불충분성 해소
 -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심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 역량 부족 문제와 지역별 빈집 정비 역량의 편차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
- **신규 입법 취지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2개 법률 체계를 유지하되,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새롭게 규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특별법 형태 제안**
 - 기본법은 해당 법에 반하는 내용 입법의 억제와 입법체계 구축에 유리하나, 특별법 우선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상위법적 성격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2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상위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제안
 - 신규 입법 취지, 오랜기간에 걸쳐 소관부처에서 구축한 정책 틀에 미치는 영향, 입법기술 난이도, 부처 협의 등의 입법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률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통적인 사항, 범정부 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의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

II

- 신규 입법(안)은 총칙, 국가의 국가 단위 추진체계,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 보칙 등 4개 장,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
 -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무 등, 제2장은 국가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 지원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시책과의 연계, 전담기구 및 기술지원 등으로 구성
 - 제3장은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대집행, 지방교수베,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지역균형특별 발전 특별회계, 광역자치단체의 보조, 세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는 가운데, 빈집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쇠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빈집 정비에 관한 사무가 2020년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나, 빈집의 증가 속도에 부합하는 지자체의 정비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 지역의 빈집 발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비 실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40년부터 가구 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빈집 관리체계가 구축된 가운데,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지자체 대응 수준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제도 정비 방안이 필요한 상황

III 주요내용

● 지역별 빈집 대응 여건에 관한 현황 파악

- 우리나라 및 지역별 인구 및 가구 수 추이, 빈집의 발생 현황과 정비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미스매치 수준을 파악함
- 지방자치단체별 빈집 정비와 관련한 조례 제정 현황, 조직과 예산,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여건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 역량을 분석

● 빈집 관련 현행 법·제도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 국내 빈집 관련 법·제도별 주요 내용과 빈집 정비 업무 단계별 쟁점사항과 최근 발의된 법률안을 분석하여 빈집 정비를 저해하는 법·제도적 한계점을 파악
-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과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지원 정책 등 빈집 정비에 관한 정부 정책 동향과 지원시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

● 일본의 빈집 관련 법·제도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와 빈집의 발생 원인과 영향, 대응체계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닌 일본의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의 개정 동향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시정촌 단위의 빈집 조례 동향을 파악하고, 「교토시 빈집 등의 활용 및 적정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동향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효과적인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제안

- 빈집 정비의 시급성과 현행 법률 체계상의 한계점 및 소관부처별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의 필요성 논리를 마련
-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제정법의 성격을 포함한 신규 입법의 방향, 법률(안)을 구성하는 목차와 주요내용 등을 제안함

2-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연구



주제어 지역사회·공동 | 지역경제·일자리

연구책임 김민영 · 연구진 양원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및 정책 과제 제시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적 위임 범위, 기존 지침, 유사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함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20개 조문을 중심으로 각 조문별 규정 범위와 요구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함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유사 제도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시행령에 포함할 요소와 조문 설계의 근거로 활용함
 - 지자체 담당자, 지원기관,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 등 이해관계자와 법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 초안 초안을 구체화함
- 시행령 제정으로는 반영이 어려운 현장 요구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단기 제도 개선 과제와 중장기 행·재정 및 추진체계 개선 과제를 제안함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 중 시행령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정책 과제로 정리하고, 과제의 성격과 실현 가능성에 따라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체계화함
 - 단기적으로는 사업기간 보장과 실태조사 주체 불일치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제를 제시함
 - 중장기적으로는 유형별 맞춤 지원, 지역순환경제 기반 사업모델 개발, 지원기관 구축 및 협회 재정 지원 등 마을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행·재정 및 추진체계 개선 과제를 도출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마을기업 법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와 정책 과제 도출 필요성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시행령으로 담기 어려운 과제를 정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법률이 국회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 시행 시점에 맞춘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이 요구됨
 - 법률 전체 22개 조문 중 20개 조문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임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 설계가 필수적임
 - 아울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나 시행령에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을 선별하여, 향후 마을기업 육성·지원 정책에 활용 가능한 추가 과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III 주요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법률 제정 현황 검토

-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개념과 추진 경과, 운영체계를 정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체계를 검토함
 - 구체적으로, 마을기업의 정의 및 의의, 성장단계별 지원 내용, 중앙-광역-기초-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통해 기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정리함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주요 규정, 장·조문 체계를 살펴보고, 시행령 설계를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유사 사회경제조직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함께 검토함

● 마을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마을기업 법·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와 결과를 정리하고, 해당 의견의 시행령 반영 가능성을 검토함
 - 지자체 담당자, 마을기업 지원기관,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 법제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별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유형화하여 정리하고, 제도 운영상 문제와 개선 요구를 도출함
 - 수렴된 의견을 시행령에 직접 반영 가능한 사항과 법률 개정 또는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향후 시행령 제정과 정책 과제 도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체계 분석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들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각 위임사항을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조문 단위로 검토함
 - 기존 시행지침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유사 법률의 관련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실행력 있는 시행령 조문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시함

2-8

초광역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 발전사업 선정기준 마련



주제어 초광역 | 연계·협력 | 지역발전

연구책임 양원탁 · 연구진 이원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중부내륙연계발전 사업선정 기본방향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해 실행력을 갖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다층적 협의·조정 프로세스를 마련
- 법률과 유관 계획, 해당 정책 내 기본방향 등과 유기적인 정합성을 갖추어 정책의 일관성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문 및 전략별로 균형성을 확보
- 법률의 시효기간(2032년) 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은 실현가능성이 면밀하게 검토되도록 기준을 마련
- 지자체 간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초광역 협력을 실현하고, 지역이 공유하는 고유 자원과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기준(안)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 기준은 크게 정책부합성, 실행가능성, 성과창출 가능성, 지속가능성, 차별성 등 5개의 대분류 항목으로 구성됨
 - 정책부합성은 국정 또는 해당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법률·정책적 취지·목적 부합성, 국정과제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시·도발전계획(안)상의 비전·목표와 유기적 연계성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 실행가능성은 해당 사업이 계획된 기한 내에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자체·지역사회 추진 의지와 역량으로 구성됨

II

연구보고서

- 성과창출 가능성은 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효과, 사업 목표 및 예상 기대효과 달성 가능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 측면의 영향 또는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영향 정도로 구성됨
- 차별성은 다른 정책 또는 사업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 및 지역 특화자원과의 연계성 정도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공통기준과 더불어 실질적인 연계·협력의 수준과 역할 분담의 균형성, 연계·협력에 따른 시너지 창출 가능성에 대한 세부항목이 추가로 적용됨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 추진 절차(안)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은 크게 지자체의 사업 발굴 및 조정, 제출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선정, 선정된 사업을 반영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의 절차로 추진
 - 행안부는 사업선정 기준과 절차를 확정하여 사업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검토·조정·협의를 거쳐 사업 신청 및 시·도 발전계획안 반영
 - 행안부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선정 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시·도와 행정안전부는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조정·협의를 우선순위 설정을 진행하고,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사업을 확정
 - 최종 선정된 사업을 반영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발생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최근 더욱 가속화되면서 연계·협력에 기반한 초광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
- 2024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의 연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법률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도 발전계획(안)을 토대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법률의 취지와 한정된 자원 및 시효기간을 고려하여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기준이 필요

III 주요내용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시도발전계획(안) 수립 등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해당 정책 취지와 목적, 주요 특성을 분석

● 초광역 및 연계협력사업 선정 사례 분석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내륙권 발전계획, 지역발전위원회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 선정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기준 항목을 도출



●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 수행

- 중앙부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시도간담회를 통해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 진행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선정기준 및 추진체계(안) 제안

-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행력을 갖춘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선정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선정 기준, 추진절차 및 체계(안)을 제안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  전북특별자치도 1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한 자율적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
-  전라남도 2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효과분석과 발전 전략 수립 연구: 관광·소비·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중심으로
- 서울특별시 3 서울특별시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연계 방안 연구
- 부산광역시 4 부산 시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베드 추진 방안
- 대구광역시 5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차원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인천광역시 6 중앙 및 지방 간 소방재원 분담의 개선방안 연구: 소방공무원 인건비 확보를 중심으로
- 대전광역시 7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대전광역생활권 설정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8 해오름동맹 협력 사업 발굴 및 실행 방안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 9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경기도 10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강원특별자치도 11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평가체계 구축 연구
- 충청북도 12 초광역 협력체제를 위한 충청북도의 전략적 대응방안
- 충청남도 13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 참여율 제고방안
- 경상북도 14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 경상남도 15 남해안권 초광역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16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재편 방향과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연계 방안 연구

3-1

우수과제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한 자율적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



주제어 지방자치제도 | 지방조직 | 특별자치도

연구책임 김지수 · 연구진 유자영, 강희송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자율적 조직진단시스템 개발

- (민관합동조직진단반)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율적 조직진단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와와의 협조체계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문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단계적으로 자율적 조직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기반 마련
- (자율적 조직진단을 위한 맞춤형 도구 개발) 전북특별자치도의 업무량과 근무형태 등에 맞춘 업무량측정산식 개발과 조사표양식, 머신러닝기반 문서생산량프로그램 제공(베타버전)을 통해 지역맞춤형 분석도구 개발을 지원
 - 지역연구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조직관리 전담부서와의 공동학습과정을 통해 자생적 진단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용을 통해 시스템 운영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율적 조직진단시스템 활용에 관한 제언

- 정기조직분석 및 환류시스템 제언
 - 분기별 연도별 자료축적을 통한 조직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
- 단기과제
 - 자체 조직진단 체계화를 통한 역량강화
 - 산하 시·군 대상의 조직관리지원 노하우 축적 및 시·군 중장기인력관리기본계획수립을 점검·지원하는 방식으로 산하 시·군의 조직관리역량제고 지원 노하우를 확보

II

연구보고서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매뉴얼”에 광역자치단체 자체진단방식 활용·개발 우수사례로 성과확산

• 장기과제

- 5극3특의 지방자치 강화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관리 권한 재정립 등 법제도개선을 동반한 발전방향 제언
- 법정인구감소지역 등 인구감소에 위기 속에서 조직관리비용에 관한 사회적 책임 분담의 방안을 공동모색하는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기대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필요성 및 목적, 기대효과

- (연구필요성) 전북특별자치도로서의 조직관리역량강화 및 기관비전에 부합하는 조직재설계 방안 모색 필요
- (연구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적 조직진단시스템 구축 및 적용
- (기대효과)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관리 및 산하 시·군의 조직관리지원역량제고, 광역지방 자치단체 맞춤 자율적 조직진단시스템 구축 우수사례로 발전

III 주요내용

● 자율적 조직진단시스템 구축

- 장기적으로 자율적 조직관리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민관합동조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방식, 맞춤형 분석도구의 개발 등을 진행

● 자율적 조직진단시스템 적용

- 개발된 자율적 조직진단시스템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접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설계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
 - 환경분석, 인식분석, 기능분석, 업무량분석 등을 종합하여 기관의 미션과 비전, 부서별 업무량 등을 종합반영한 새로운 조직설계안을 과학적 기법을 통해 도출하는 과정 경험

● 자율적 조직진단시스템 활용

- 향후 정기적 자율적 조직진단시스템의 운영과 산하 시·군의 조직관리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식을 제안
- 그밖에 특별자치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자율적 조직진단시스템의 활용방안 제안

3-2

우수과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효과분석과 발전 전략 수립 연구: 관광·소비· 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중심으로



주제어 관계인구 | 지역경제활성화 | 사랑애서포터즈식

연구책임 유보람 · 연구진 전영준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서포터즈 방문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관광 유입 효과 확인
 - 서포터즈 방문으로 인해 발생 된 총 지출비용은 116억 원으로, 전라남도에서의 생산유발액은 16,239 백만 원, 부가가치유발액 6,846 백만 원, 취업유발인원은 225명으로 확인됨
 - 전체 서포터즈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 약 4개월 후에 전남 실제 방문 외지인 수와 관광 총 소비액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대와 30대 가입자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남
- 서포터즈 및 할인가맹점 인식조사 결과 인지도 제고, 혜택 다양화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서포터즈는 할인을 확대 및 가맹점 다양화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할인가맹점은 인지도 제고, 할인을 부담 완화, 가맹점 이용 편의성 및 인증 절차 개선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지속 가능한 방문 유도를 위한 서포터즈 참여 전략 수립 필요함
 - 할인가맹점 확대에 집중하여 업종 및 지역별 할인가맹점 분포 다양화를 위한 노력 요구됨
 - 서포터즈 혜택으로 주요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한 연계 관광 검토가 요구됨
- 소상공인(할인가맹점) 연계 소비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함
 -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확대 및 가맹점 부담 완화 방안 검토를 제안함
 - 사용자가 구체적인 혜택을 확인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사업 효과성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 서포터즈 확장이 외부 인구 유입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결과 지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결과의 실증적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연도별 서포터즈 가입자 증가 속도는 2023년 대비 2024년 크게 감소함
 - 연도별 모집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3만 명 → 2023년 12월 기준 43만 명 → 2024년 6월 기준 50만 명으로 증감을 측면에서 2023년 대비 2024년 크게 감소함
- 정책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성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 마련 필요함

● 서포터즈의 외연 확장과 함께 전남 방문을 증대·유지를 위한 질적 측면의 개선 방안 마련이 동시에 요구됨

- 서포터즈의 동기 부여와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연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 필요함

III 주요내용

● 사랑애(愛) 서포터즈 사업 성과 검토

-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사업 성과를 양적,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양적분석) 서포터즈 가입자 중 전남 지역을 방문하여 소비한 산업별 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활력 효과 검토하였고, 서포터즈 가입이 전남 지역관광 유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관광 소비 및 외지인 방문자 수와의 시차적 상관관계 규명함
 - (질적분석) 서포터즈 및 할인가맹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질적 측면의 정책 성과를 검토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관광 유입 효과 검토 결과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전라남도에서의 생산유발액은 16,239 백만 원, 부가가치유발액 6,846 백만 원, 취업유발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남

- 서포터즈 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전남 관광 유입 효과를 확인함

- 서포터즈 가입자 수는 다시 외지인 방문자 수($p=0.0033^{**}$, $lag=4$)와 관광 총 소비액($p=0.0606^*$, $lag=4$)에 영향을 줌
- 특히 20대($p=0.0094^*$) 및 30대($p=0.0362^*$)는 소비 전환 효과 뚜렷함

- 서포터즈 및 할인가맹점 인식조사 결과

- 서포터즈는 할인을 확대 및 다양화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할인가맹점은 할인을 부담 완화 및 인증 편의성 제고, 홍보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서포터즈 지원 확대를 위해 할인가맹점을 확대 하는 방안, 기본 혜택과 추가 혜택으로 구성하거나 테마별로 특정 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운영 체계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할인가맹점 지원 확대를 위해 주요 금융기관과 협업 방안을 제안함. 즉,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사업의 홍보 채널을 확대하고, 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서포터즈 가입 유도 및 지역소비 촉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증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스톱으로 혜택을 확인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3-3

서울특별시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연계 방안 연구



주제어 유학생 | 외국인 | 해외인재

연구책임 김필 • 연구진 안지선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서울형 해외 유학생 유치·정착 지원 모델 정립

- 서울시 해외 유학생을 ‘단순 학습자’에서 ‘미래의 서울 시민’으로 인식 전환 필요
 - 해외 유학생을 단기 체류자가 아닌,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글로벌 파트너로 인식
 - 유학생 유치·교육(대학), 수요(산업계), 정착 연계의 컨트를 타워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
 - 체류 단계별(유치 → 입학·정착 초기 → 교육·역량 강화 → 취업·창업 연계 → 장기 정주) 맞춤형 지원
 - 유학생 패널 구축, 정례 협의체 개최, 정책 대시보드 운영 등 지속적인 성과관리·점검 추진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확보와 해외 인재 활용

- 유학생은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 전략 모색 중
 - Study Korea Project,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등으로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 대학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

●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정착을 통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제고

-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재 유치 필요성 대두
 - 우수 유학생을 통한 창의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기대
 - 서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유학생 유치·정착 연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필요

III 주요내용

●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착 사례 분석

- ‘단기 체류 중심의 유치’에서 ‘장기 정주형 자산’으로 유학생 정책 전환
 - 유학생의 전 생애주기(입시부터 정착까지)를 지원하는 전략적 국가사업의 하나로 정착
 - 지방-대학-산업 간 컨소시엄 중심으로 유학생 취업과 정착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

● 서울시 산업 구조와 유학생 현황

- 고부가가치 산업 및 기술기반의 직무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황
 - 미디어·IT, 연구·공학기술직 등 고학력·전문인력 수요가 최근 빠르게 증가
 - 유학생 과반 이상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로, 현재의 이공계 중심 정책과 괴리 존재

● 서울소재 대학 및 산업군 수요 분석

- 유학생과 대학 실무자: 문과·예체능계 지원 미흡, 정착·취업의 제도적 한계 지적
- 산업군 관계자: 한국어 역량·실무 경험 부족, 비자 문제로 채용 전환 어려움 호소
- 서울시 차원의 채용박람회, 인턴십 플랫폼, 비자 지원 등 구조적 보완 필요성 강조

● 서울시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방안

- 서울시 산업 구조와 연계한 유학생 맞춤형 유치 전략 설계
 - 서울시 미래전략과 연계한 산업-인재 매칭 기반의 목적형 유치 모델 설계 필요
 - K-콘텐츠, 디자인, 도시외교 등 분야에서 문화·예체능계 유학생을 산업 파트너로 재정의
- 서울시-대학-산업 간 협력 모델 구축 및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법무부와 협의하여 비자 제도와 정주 지원 간의 실질적 연계 구조 마련을 위한 광역단위 행정지원 프로그램 및 Visa-Fellowship 연계 설계 추진
 - 서울시 인증 Micro Degree와 실습연계 Fellowship 제도 결합으로 유학생 유치와 역량 증진이 지역으로의 정착과 기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대학, 산업계, 전문가 집단 등과의 다중 네트워크 조직화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 모색

• 유학생 정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구조 마련

- 유학생 산업연계 취업률 등 다차원의 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하고 종합평가 등 실시 검토
- 서울형 체류 비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개정 등으로 정책의 구조적 지속성 확보

3-4

부산 AI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베드 추진 방안



주제어 AI 신산업 | 네거티브 규제 | 테스트베드

연구책임 강영주 • 연구진 이재용, 김정숙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부산 AI 혁신 거점 구축

- (연구결론) 부산시가 AI 신산업(로봇주차, 자율주행, AI 정수장) 선도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수적임
 - 에코델타시티(EDC)를 핵심 거점으로 3대 산업 통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하며, '혁신 친화적 규제 프레임워크'와 '위험 기반 접근'의 조화가 핵심임
 - 강력한 '통합 거버넌스(Control Tower)' 구축과 '한시적 실증'을 '영구적 법제화'로 연계하는 환류 장치 의무화가 성공의 관건임
- (정책제언: 부산시) 「부산 AI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베드 특별 조례」 제정, '부산 AI 네거티브 규제 위원회' 설치·운영, 원스톱 창구 및 전담지원단 운영 체계 구축
 - 지원 조례 제정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테스트베드 성과귀속형 보조금(가칭)' 개념 도입 및 부울경 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
- (정책제언: 중앙정부) 실증 결과의 신속한 법령 정비 의무화, 부처 간 칸막이 해소,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확대
 - 실증 결과의 '영구적 법제화' 연계를 위한 환류(Feedback) 메커니즘 제도화, 실증특례 기간 중 참여 기업의 보험·인증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 등
- (법제도 개선) 복합적 접근 권장: ①규제샌드박스 활용 → ②개별법 개정 → ③「부산특별법」 제정의 단계적 추진

- 핵심 법령 개정: 「자율주행차법」 레벨4 조건부 무인운행 허용, 「수도법」·「먹는물관리법」 AI 기반 자율운영 특례 신설
- 「부산 AI 네거티브 규제 특별법(약칭: 부산특별법)」제정: 실증 데이터와 개별법 개정 성과·한계를 근거로, 개별법 개정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 복수 부처 소관 규제의 일괄 적용 배제, ‘한시적 실증’에서 ‘영구적 사업화’로의 전환 근거, 테스트베드 운영기구의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 —을 포괄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부산 AI 허브 도약을 위한 지방 주도형 규제개혁의 필요성

- (글로벌 환경)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각국은 미래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
 - AI 기술은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발전하고 타 산업과의 융복합이 활발하여, 법률에 열거된 행위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로는 혁신 속도에 적시 대응이 곤란함
- (부산시 현황) 부산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더불어 ‘AI BUSAN’ 전략(4대 플래그십·5대 인프라)을 통해 AX(AI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그러나 중앙부처 소관 포지티브 법령과의 충돌로 실제 산업화가 지연되는 ‘정책과 규제의 미스매치’ 상황에 직면해 있음
- (현행 제도 한계) 현행 규제샌드박스 는 개별 과제에 대한 한시적·제한적 허용(2년, 최대 4년)에 머물러, AI처럼 파급력이 크고 복합적인 기술의 대규모 실증 수요에 포괄적 대응이 어려움
 - 2019~2021년 승인 198건 중 규제개선 완료는 29건(약 15%)에 불과하여, 실증 결과가 본 법령 정비로 연계되는 ‘환류 메커니즘’이 미흡한 실정임
- (연구 필요성) 부산시의 AI 신산업 허브 도약 비전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포괄적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본 연구는 ‘AI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베드’의 성공적 지정을 위한 체계적 법·제도 기반과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AI 규제개혁의 이론적 기반과 해외 사례 분석

- (네거티브 규제 개념) ‘원칙허용·예외금지’의 포괄주의에 입각한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입법방식 유연화(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 관리)를 통해 구현됨
 - 네거티브 규제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고, 신기술·융합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규제 대응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함
- (설계 원칙) ①규제 적절성 판단(적용영역·유형 적합성) → ②명확성의 원칙(허용-금지 경계 명시) → ③사전규제 최소화 → ④사후책임 강화의 4단계로 구성됨
- (해외 사례) EU AI Act(위험 기반 4단계 차등규제, 규제샌드박스 의무화), 영국(혁신친화적 원칙중심 규제), 일본(AI 사업자 가이드라인), 싱가포르(국가 AI 전략 2.0, Model AI Governance Framework) 분석
 - 정책적 시사점: 위험 기반 차등규제(Risk-based), 성과·사후관리 기반 규율(Outcome-based), 실증 기반 규제혁신(Testbed-driven)의 3대 설계 원칙 도출

● 부산 AI 현황 및 실증 여건 분석

- (부산시 AI 정책 기반) 「AI 산업 육성 조례」 제정, AI 연구센터·데이터센터 구축,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 정책적 기반을 확보함
 - ‘AI BUSAN’ 종합전략을 통해 4대 플래그십(AI 의료, AI 제조, AI 물류, AI 관광)·5대 인프라(데이터, 인재, 기업, 인프라, 거버넌스) 구축 추진 중
- (3대 핵심 산업별 규제 현황) 3대 핵심 산업(로봇주차·자율주행·AI 정수장) 모두 기존 법령상 대면·유인 운영을 전제한 인력 상주 의무, 시간·설비 기준 등이 무인·자동화 기술의 현장 적용을 제약하고 있음
 - 로봇주차: 「주차장법」 입출고 시간 2분 제한, 「소방법」 필수시설 요건 등
 -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법」 레벨4 무인운행 불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무인 셔틀 근거 부재 등
 - AI 정수장: 「수도법」 유자격자 상시 근무 의무, 「먹는물관리법」 관리자 판단 의무 등
- (공동 규제 쟁점) ①현행 포지티브 법령과의 근본적 충돌(법률의 경직성), ②신기술 고유의 규제 공백(책임소재·데이터·보험), ③거버넌스 및 실증 공간의 분절(제도의 파편성)

- 이에 따라 포괄적 지원 기반(특별 조례) 마련, 산업별 맞춤형 규제안 설계,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3대 정책 과제 도출

● 부산 AI 네거티브 규제 설계 방안 및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

- (규제 설계 모형) ‘누가(Who: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기관-민간·학계)-무엇을(What: 3대 산업별 규제 요소)-어떻게(How: 3단계 규제 구조)’의 복합 거버넌스 체계로 설계함
 - 산업별 3단계 규제 구조: 1단계 금지 목록(안전·생명 관련 절대적 금지사항) → 2단계 조건부 허용(세이프가드 충족 시 허용) → 3단계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검증)
- (통합 거버넌스) ‘부산 AI 네거티브 규제 위원회’(시장 직속) 설치, 동시심사·기술안전·데이터표준인증·성과환류 분과 운영, 중앙부처 참여로 Fast-Track 협력 채널 확보
 - 「부산광역시 AI 산업 실증 지원에 관한 특별 조례」 제정을 통해 테스트베드 운영 근거, 원스톱 창구, 위원회 설치, ‘테스트베드 성과귀속형 보조금’ 개념 도입
- (테스트베드 구축) 에코델타시티(EDC)를 핵심 혁신 거점으로 선정, 로봇주차·자율주행·AI 정수장 복합 실증 환경 조성,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자율주행차와 신호등·도로시설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C-ITS·V2X) 구축
 - 운영 원칙: 데이터 기반 운영, 민간참여 활성화, 시민참여형 관리, 지속가능 재정체계, 스마트 규제 및 평가체계
- (중장기 인프라) 홍콩형 ‘타워형 버스 차고지’ 모델(자율주행 버스 차고지+연구센터+정비시설 통합) 검토, 가덕도 신공항 연계 ‘모빌리티 토탈 허브’ 구축 구상
 - 통합 데이터 시스템(현장수집 → 전송연계 → 저장분석 → 정책산업 환류) 4단 구조, 정량·정성지표 병행 다차원 성과평가, ‘공유형 도시운영협의회’ 분기별 운영 체계 마련

3-5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차원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주제어 지방자치제도 | 교육자치 | 사무이관

연구책임 김지수 · 연구진 전대욱, 김성주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 유보통합 관련 사무는 일괄 이양하되, 「영유아보육법」 상 가정양육수당은 본래 일괄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주민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남기는 것이 적절함
 - 「아동수당법」 상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남게 되며, 육아지원센터 및 지역별 특수시책은 교육청으로 일괄 이양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됨
- 이관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직원 동의 없이 현재 업무 담당자의 소속을 변경시킬 수 없으므로, 그에 준하는 인건비를 추정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이관사무 수행에 투입된 인력규모는 현원 기준 평균 광역 2개 팀에 8명, 기초 1개 팀에 6.2명
- 급증하는 교육분야 지방비 부담 증가 및 대구광역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이관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중 지방비는 이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이관시 건물은 유상인수가 적절하며, 지자체 소유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건물관련 협약은 신규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방안

- 교육청 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운영하되, 내실있는 소통방안 강구 필요

- **유보통합의 단계별(사무이관준비단계-사무이관실행단계-사무이관종료후단계)로 지역거버넌스의 역할변화에 관한 로드맵을 적용함으로써, 이 거버넌스가 장기적으로 지역차원의 유아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로 기능하도록 함**
 - 정부유보통합추진위원회 산하 “(가칭)지방관리체계일원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대구광역시 유보통합정책추진단은 유보통합 3법 개정 등에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자료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무이관종료 후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필요성 및 목적, 기대효과

- (연구필요성) 국가차원의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지역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는 미완성된 상태이므로, 지역의 목소리가 담긴 대안 모색 필요
- (연구목적)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모색
- (기대효과) 유보통합 3법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주민의 혼란 없이 보다 높은 수준의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

III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의 유보통합 대상 이관사무 범위 확정

- 11개 대분류, 23개 중분류, 75개 소분류로 구성된 이관사무 범위 확정
 - 조사표 조사 및 공무원 간담회로 사무범위 분류의 타당성 확보
 - 가정양육수당 등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이관대상사무로 분류(지역 특수시책 포함)

● 대구광역시의 이관사무 수행인력 및 재정부담 분석

- 이관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는 광역 2개 팀 8명, 기초 1개 팀 6.2명
 -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부처 간 사무이관과 달리, 자치단체-교육청 간 업무담당자의 소속을 변경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II

연구보고서

-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및 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사무이관에 따라 해당 사무 수행인력의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관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 중 전체 예산의 약 38%는 지방비에 해당**
 - 급증하는 교육분야 지방비 부담 증가 및 대구광역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비로 수행된 특수시책사업은 사무와 함께 지방비가 함께 이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6

중앙 및 지방 간 소방재원 분담의 개선방안 연구: 소방공무원 인건비 확보를 중심으로



주제어 소방재정 | 소방안전교부세 | 정부 간 재정관계

연구책임 최정우 • 연구진 전성만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소방공무원 인건비 재원 마련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방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거나 지역 간 자원배분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방안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2만 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확충방안은 ①2026년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 일부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소방인건비에 활용하는 방안, ②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로의 배분 비율의 상향, ③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 등을 제시함
 - 인건비 부족분 3,698억 원에 대해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활용은 3,585억 원, 담배분 개별소비세 배분 비율 인상은 4,39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은 4,725억 원의 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담배소비세의 활용은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담배분 개별소비세분 활용은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재정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자원 시설세의 활용은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가중시켜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소방사무의 외부성, 및 공동사무 분석을 통한 중앙-지방 간 재원 부담 원칙 설정 및 관계 법률 정비
 - 소방 관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소방사무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자치사무, 국가사무,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사무 특성을 분석하여 사무특성에 기인한 재정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소방사무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명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소방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 등과 관련한 법안 등이 발의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사무 구분 및 공동사무의 처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직 공무원 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 필요

- 소방사무가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자치경찰 사례를 준용하여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현 시점에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점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건비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분담 비율을 설정하여 점차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이 필요함.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에 의존하는 소방 재원은 세수의 안정성 및 충분성 등에 한계가 있고 결국 세수의 취약성이 심화될 수 있음
- 소방의 기능이 부수적인 행정기능이 아니라 재난의 복잡화,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방사무의 다양화 등으로 정부의 주요 행정서비스로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목적제 외에도 보통세를 활용한 소방재원 확충 방안이 필요함
- 신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화재보험료,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보험료,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소비 등 소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물품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소방사무의 외부성 및 소방사무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의 어려움

-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가장 주요한 서비스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혼재, 소방인력의 증가, 소방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요에 대응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됨
-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 재원 8.7조 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 전입금은 4.5조 원으로 전체 세입의 62.4%를 차지하여(한재명, 202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자체별 소방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소방사무는 화재에 대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구조구급 등이 강화되어 소방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소방직 공무원 2만 명 총원에 따른 소방인건비 증가 등으로 소방재원의 지출수요는 증가추세임

• 지방의 소방 인건비로 인한 재정부담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분담 기능에 대한 검토 필요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재원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고, 2020년 소방직 국가직화와 연계하여 신규채용되는 약 2만 명의 인건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인건비를 감안할 경우 재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개별 소비세의 규모는 정체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부담의 적정성, 인건비 우선 사용에 따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III 주요내용

•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루어진 약 2만 명의 소방공무원 확충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이 총원된 공무원의 인건비의 총당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존 소방직 공무원은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었으나 소방공무원의 법정 정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정부의 주도로 약 2만 명의 소방공무원을 총원함
- 2020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대가 이루어 졌고 이를 통해 총원된 소방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방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봉급 인상, 호봉인상, 그리고 총원된 소방직 공무원의 총원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2020년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기존 인력 및 현재 총원되고 있는 인력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 인건비 부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2장에서는 총원된 소방공무원의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담 논의를 위해 소방사무의 특성과 소방분야 재정구조 및 소방교부세의 기능,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의 쟁점 및 고려사항을 검토함

-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소방사무의 성격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자원분담의 수준을 논의할 수 있으므로, 소방사무의 성격에 있어서의 외부성, 그리고 업무량의 변화 등을 검토함
-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분야의 재정 구조, 그리고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방교부세의 기능 등을 검토함
-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쟁점과 인건비 자원 분담과 관련하여 고려사항을 검토함
- 제3장에서는 지방의 소방분야 재정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방 소방분야 재정을 세입 및 세출로 구분하여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세입 및 세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함
- 소방안전교부세의 운영 현황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규모 시도별 지원규모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인건비에 대한 자원 마련 방안을 제시함**
 - 2017년~2022년까지 각 연도별로 총원된 실제 공무원 표본의 인건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지급된 연도별 인건비 수준을 분석하고 퇴직공무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잔여분을 고려한 지방자치 단체의 인건비 부담 수준을 분석함
 - 인건비 부담수준을 고려할 때 부족한 인건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평가 하고, 대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

3-7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대전광역생활권 설정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지방분권 | 균형성장

연구책임 이원도 • 연구진 유수동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광역생활권 활성화 방안

• 생활권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초광역권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패러다임에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혹은 지자체 간 광역연합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 또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효과적인 인구감소 위기 등 행정경계에 따른 개별적인 대응에서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 충청권(중부권) 내 대전광역생활권 활성화 전략은 하나의 정책 단위로 설정하고, 의료·교육·레저·상업 등 기능별 목표와 추진전략, 실행과제의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선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동 사무 및 사업 발굴, 생활권 맞춤형 협력제도 설계·적용, 그리고 지자체 정책·사업 기획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대전광역생활권 내 기초생활권의 주요 기능적 연계 활성화 방안

- 광역생활권 내 기초생활권은 주요 기능별 생활권 단위의 협력을 강화하고, 광역생활권 정책과의 부합성을 지키면서 다층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다시 말해, 광역생활권에 포함된 기초지자체 간,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 광역지자체 간 거버넌스 협력모델을 통해 기능별 생활권 활성화 정책의 통합·조정·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기능별 생활권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조직하는 기초단계에서, 중장기적으로 주담당·부담당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생활권 정책을 지향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광역행정과 지역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

•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

- 전국을 자치분권 기반의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전략지대 체계구성을 통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제시되었음(5극 3특)
- 초광역권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패러다임은 초광역권 설정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 초광역 교통 조성 및 산업기반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한 권역 산업역량 확보 등 권역 차원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정주개념에서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집적체 개념이 포함된 광역생활권

•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집적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행정 분야에서 생활권은 지자체의 공간적인 영역과 자치권 행사범위,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공급범위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정주생활권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초광역권은 하나의 거대도시, 경제권역으로써 다양한 활동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일상생활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 공간적 범위”로써, 다층적인 초광역권-광역-기초생활권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광역생활권을 구성하는 기초생활권은 권역별 특성의 차이가 뚜렷한 차별성을 고려하여 분류할 수 있음

III 주요내용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초광역 생활권 개념

• 초광역권 내 광역생활권 개념 정립

- 정주생활권의 위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광역권 내 광역생활권과 기초생활권 위계설정이 가능함
- 기능지역의 연계된 공간집적체로써 생활권은 지역 간 연계·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과 정책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축소사회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지역 간 연계망에 기반한 기능적 협력 및 분화가 강조되고 있음

• 생활권 개념 정립을 통한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 광역행정 수요와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지자체 간 연합·협약·공동사무처 등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광역·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대전광역생활권 설정 및 특성

• 대전광역생활권 구획 및 탐색

- 지역 간 통근·통학 통행량을 바탕으로 구획한 전국 초광역 생활권에서 대전광역생활권은 충청권(중부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과 세종, 그리고 인근 5개 기초지자체(공주, 계룡, 금산, 옥천, 영동)가 포함된 권역으로 분류되었음

• 기능별 기초생활권 설정 및 비교

- 의료, 교육, 레저, 상업 기능 기초생활권에선 대전 도심(서구, 유성구)과 원도심(중구, 동구)이 분화되었으며, 대전 자치구가 포함된 기초생활권은 공주, 계룡, 옥천 등 인접 지자체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능별 기초생활권의 공간적 범위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전광역생활권에서 주요 기능의 중심지는 모두 대전 자치구에 쏠려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대전광역생활권의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초생활권 지원이 필요하며, 기초생활권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선 대전 자치구에 집중된 일부 기능의 이전 및 배분을 검토할 수 있음

3-8

해오름동맹 협력 사업 발굴 및 실행 방안 연구



주제어 해오름동맹 | 초광역 연합 | 협력사업 기준

연구책임 이서희 • 연구진 최정우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거버넌스의 단계적 진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

- 현재의 행정협의회 방식은 예산 확보 및 결정사항의 구속력 부족으로 대규모 협력사업 추진에 한계가 명확함
 - 단기적 협력을 넘어 안정적이고 실행력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화된 협력기구로의 도약이 필요하며, 강력한 법적 지위와 독자적 자원 확보가 가능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하였음
 - 장점: 안정적 자원과 독립적 집행기구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며, 중앙정부 지원 확보에 유리함
 - 단점: 설립까지 지자체 간 복잡한 협의 과정과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운영의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음
 - 이행 조치사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에 대한 3개 도시의 공론화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착수, 공동 추진단 내 전담 TF 구성, 사무 범위·경비 분담·조직 구성 등을 담은 구체적인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함

● 안정적이고 공정한 자원 분담 체계 구축

- 현재의 불균형적인 자원 분담 구조는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분담 모델의 규약 명문화가 필요함
 - 단기 대안: 인구, 면적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소요 재원을 분담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임
 - 중장기 대안: 단기 대안의 지표에 재정력 지수(재정자립도 등)를 추가하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함

- 이행 조치사항: 「지방자치법」 제206조 제1항 및 타 행정협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한 비용 분담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해오름동맹 규약에 명시적으로 반영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해오름동맹의 성과와 한계 및 고도화 필요성

- 2016년 해오름동맹 출범 이후 원자력 혁신기술센터 구축, 국도 7호선 확장 공동 대응 등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하며 동해안권의 대표적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함
 - 그러나 공동기금 및 독립적 집행기구의 부재, 개별 도시 중심의 사업 운영 등은 협력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단순 분야 나열식 사업을 넘어 3개 도시의 산업·SOC·인구 등 핵심 자원을 융합한 전략적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특히 중앙정부의 초광역 공모사업, 균형발전 재정 지원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협력사업의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접근이 시급한 시점임

III 주요내용

●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신규 비전·전략 도출

- 프랑스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하향식 통합 모델)’과 독일 ‘하노버 권역 연합(상향식 네트워크 모델)’ 등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해오름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 해오름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동해안 제1의 초광역 경제권: 첨단산업·에너지·관광이 융합된 국가 균형발전 선도 모델”로 설정함
 - 3대 전략 목표로 ①동해안 첨단산업 벨트 완성, ②해양·문화 기반 스마트관광 거점화, ③통합형 협력 거버넌스 정착을 제시함

● 협력사업 현황 진단 및 성과와 한계 분석

- 2025년 기준 5대 분야 43개 공동협력사업 추진, 상설 추진단 출범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으나, 불균형적 사업비 분담 및 행정협의회 방식의 느슨한 협력 구조라는 본질적 한계가 나타남

- 강력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지원제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회발전특구 등)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함

● 핵심 협력과제 도출 및 선정

- 기존 43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광역 교통망 구축, 공동 재난·안전 대응 등 16개 우선 추진 사업을 선정함
 - 중앙정부 국비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①산업단지 환경개선, ②신재생에너지 보급, ③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등 기존사업과 연계 가능한 과제 및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하여 총 20개의 연계 국비사업을 도출함
 - 전략 부합성, 시너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5대 핵심 추진 사업을 선정함
 - ①지자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②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③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④국가유산 야행사업, ⑤대용량 청록수소 공급 시스템 기술개발사업 등임

3-9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경제·일자리 | 산업단지

연구책임 양원탁 • 연구진 이원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전략적인 추진

- 노후산업단지의 고착화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력과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지별 특성에 부합하면서 단기간 성과 창출이 가능한 개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
 - 지원사업별 목적과 기준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유형과 규모, 중점산업과의 부합성, 단기간 파급효과, 타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단지를 선별

● 세종특별자치시의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 급변하는 노후산업단지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체간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추진체계가 중요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충청본부), 지역 혁신기관, 지역대학, 입주기업협의회 등과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는 광역 단위 정책 기획과 공모 대응을 담당하는 산단기획팀, 단지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산단관리팀의 적절한 기능재설계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단지별 데이터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활성화 시책 추진

- 산업단지별로 활성화 이슈는 다양할 뿐 아니라 시기에 따라 지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재한 데이터의 통합 관리가 필요

II

- 세종특별자치시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관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환경, 주력산업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단지별 특성과 쟁점의 효율적인 분석 기반을 마련
-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단지별 실태와 관련한 데이터는 단지별 협의회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단지별 쟁점 요소를 도출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활성화 종합계획(가칭) 수립

-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는 산업단지로서 약화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산업, 근로자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장기 목표, 현황, 부문별 지원 시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종합계획(가칭)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 도모

● 노후산업단지별 실태에 근거한 맞춤형 활성화 전략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요 노후산업단지별 실태와 활성화 요인에 근거한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
 - 조치원산업단지는 조성 중인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노후된 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바이오·의약품 분야로 고도화하여 약화된 산업기능 회복과 지역 거점 단지화를 추진
 - 전의산업단지는 근로자 정주기반 조성 and 신도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한편, 의약품 앵커기업과 연계한 산업 고도화를 통해 북부권 거점기능을 강화
 - 응암·명학산업단지는 단절된 2개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 중인 5생활권과 연계하여 청년과 문화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단지 활력 제고를 추진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산업단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거점에 해당하지만, 주요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 약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2000년대 이후 노후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노후산업단지는 생산, 고용 감소 문제와 더불어 신도시 및 신규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상대적인 입지여건 감소와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자체 차원의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과 정부 지원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활성화의 변곡점 창출에 한계
- 세종특별자치시의 노후산업단지 특성과 실태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함

III 주요내용

● 노후산업단지 관련 개념 및 동향 분석

- 산업단지 및 노후산업단지를 둘러싼 법률적, 학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노후산업단지의 특성과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를 검토함
- 정부의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관한 정책 흐름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국비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특성을 분석함

●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산업단지 현황과 특성

-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에 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산업단지의 물리적, 산업적인 현황을 파악함
- 산업단지 유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 노후산업단지와 구별되는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산업단지의 특성과 잠재력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

●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산업단지 실태 분석

-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측면에서 심층 분석이 요구되는 전의, 조치원, 응암·명학 산업단지 대상으로 실태 분석
- 물리/인프라, 산업/기업, 정주환경에 관한 통계자료 분석 및 현장 실태 분석을 통해 활성화 요인을 탐색하고 단지별 활성화 방향을 제안

●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산업단지를 둘러싼 정책 환경과 세종시 노후산업단지의 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시 산업단지의 여건을 종합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함
-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과제와 실행 방안을 제안함

3-10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주제어 지역경제·일자리 | 지역발전

연구책임 김민영 · 연구진 박진경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경기도는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과 미래 지향적 산업구조로 전환 필요

- 경기도가 보유한 기술력, 인프라, 인재와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인 디지털 콘텐츠·게임, 앱·플랫폼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기술, 첨단 연구개발 등 네 개 산업군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육성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융합된 기술 기반 서비스업은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전략 제시

-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서비스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함
- (기업 성장 역량 강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글로벌 진출, 성장 단계별 투자 지원을 추진해 기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해야 함
- (혁신 생태계 고도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혁신 허브를 조성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서비스산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한계 존재**
 -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책적 대응 가속화**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음
- **경기도는 변화된 산업·정책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재정비 필요**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1차(2014~2018), 제2차(2019~2023)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음
 - 현재는 산업구조 변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2025~2029)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함

III 주요내용

- **경기도 서비스산업 현황 진단**
 - 최근 10년간 경제 규모, 성장 기여도, 고용 비중, 생산성 등을 기반으로 경기도 서비스산업의 구조와 위상을 정량적으로 진단하였음
 - 경기도 서비스산업은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전통산업 중심 구조로 인해 질적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서비스업 고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과 비교하여 생산성이 낮은 수준임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제2차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2019~2023) 추진성과 평가

- 연차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계획 이행 수준, 성과지표 달성도, 전략별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였음
-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5대 전략 추진으로 중점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미흡했음
- 공공 주도 기반 조성에 집중해 ‘혁신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스타트업 플랫폼’ 등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성과를 달성했음
- 성과 평가는 예산 집행률, 신규 일자리 등 단기·정량 지표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구조 전환과 질적 성과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음

●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발전전략 수립

-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산업 매출, 일자리 창출 효과, 수출 및 국외 진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 7개 정량 지표, 조례상 서비스산업 해당 여부, 공공 개입을 성과 창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였음
- 최종적으로, ‘디지털 콘텐츠·게임’, ‘앱·플랫폼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기술’, ‘첨단 연구개발’ 등 4개 산업군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음

3-11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평가체계 구축 연구



주제어 성과관리 | 성과평가 | 종합계획

연구책임 안지선 • 연구진 김건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강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의 평가체계(안) 마련

- 종합계획의 장기목표와 연차별 추진실적을 동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체계(안) 정립
- 평가 목적: 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 및 성과 달성 도모, 책임행정 구현
- 기본 구조: 저장(stock)과 유량(flow) 관리를 위한 통합적 평가체계
 - (저장관리) 종합계획 목표·관리지표(69개)는 2033년 목표치 대비 현재의 달성 수준으로 평가
 - (유량관리) 전체 사업 중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핵심사업 선정하여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
- 운영 전략: 정성·정량평가 혼합, 내부·외부평가 연계, 평가부담 최소화 및 환류 강화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의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하고, 정책추진 상황을 연계한 평가항목 설계
 -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년도 계획 수정 및 사업 조정, 부진과제 개선, 우수사례 확산, 주민참여 및 소통 등 구체적인 정책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평가 지향

● 평가체계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제언

- 평가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할 것
- 도입 초기에는 제도적 기반 정비와 평가체계 안착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과관리 문화 정착과 평가체계 고도화, 주민 체감형 평가로의 확장 등을 추진할 것
 - (단기)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성공적 안착 유도: 조례 개정을 통한 평가체계 명확화, 평가지침 및 운영 규정 명문화, 사업부서 수용성 제고, 평가위원과 담당자 교육 실시, 평가부담 완화 등

II

연구보고서

- (중기) 성과관리 문화 정착 및 평가체계 고도화: 학습과 개선 중심의 평가문화 조성, 우수사례 확산 도모, 평가지표의 주기적 개선, 평가체계 운영에 대한 상위평가(meta evaluation) 실시 등
- (장기) 주민 체감도를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 주민 체감형 평가기법을 활용한 정책방향 개선 및 우선순위 도출 등 주민 체감형 평가로의 확장 고려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강원특별법에 따른 중장기계획 평가체계의 기본 틀 마련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2024~2033)은 「강원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 단위의 최상위 법정계획
- 중장기 종합계획의 이행성과 점검·관리를 위한 평가체계(안) 설계 필요

III 주요내용

● 평가체계 설계를 위한 이론적·제도적 고찰

- 본 연구는 성과관리 및 평가 이론,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규율체계, 중장기 이행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평가 사례를 검토하고, 평가체계(안) 설계의 고려사항을 도출
 - 논리모형, 목표관리제, 균형성과표 등 주요 논의를 바탕으로, 법·제도 정합성을 갖춘 평가체계 필요
 - 주요 사례를 참고하되,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평가부담 최소화 등을 고려할 필요
 - 타당성·기능성·정당성 가치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통제와 처벌이 아닌 학습과 개선을 지향
 - 초기에는 간소한 평가체계를 운영하되, 평가 경험이 축적되면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할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과 평가제도 현황

-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의 구성과 추진체계, 도내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현황 등을 살펴보고, 평가대상과 지표체계, 평가방법과 절차 등의 함의를 도출

- 구조적 특성 반영: '종합계획 지표 평가'와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이원화하여 전체적인 방향과 궁극적인 목표 달성도를 점검(저량관리)하는 동시에, 개별 사업의 연간 수행 현황을 점검(유량관리) 필요
- 내용적 특성 반영: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한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 실행적 특성 반영: 사업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대규모 재정투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적절성, 사업비 확보와 집행 노력 등을 주요 지표로 고려하고, 평가 배점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
- 맥락적 특성 반영: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과 유관 계획,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 부합도, 도정 기여도, 수혜자 만족 등의 다차원적 요소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평가영역별 가중치를 설정
- 환경적 특성 반영: 중장기계획이 지닌 불확실성을 고려해 환경 변화의 대응 노력과 사업·계획의 유연한 조정 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평가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환류되는 평가체계의 설계 필요

3-12

초광역 협력체제를 위한 충청북도의 전략적 대응방안



주제어 행정체제 | 지역발전

연구책임 최지민 • 연구진 안지선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초광역 사무에 대한 인식 개선

- 충청도청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초광역 사무를 자신들의 고유업무에 ‘추가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교육·학습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권역 사업의 성과(예: 충북 내 산업단지 재생, 광역 교통망 확충 등)를 도정 핵심 성과지표와 연계해 국별 성과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설계해야 함
- 도청 게시판·브리핑을 통해 권역별 사업 현황과 진척도를 매월 안내, 각 부서가 실질적 연계성과와 연합 성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규약 개선

-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사무 배분·재정 분담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갈등 발생 시 중재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음
- 연합의 의사결정 절차 및 의회와의 적정관계 설정을 표준화함
- 연합 사무별 성과지표(예: 광역교통망 구축 시 통행시간 단축률, 산업투자액 증가율, 주민 만족도 등)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충청권 차원의 공동제언)

- 특별지방자치단체 전용 법령·조항 신설을 건의함(현행 법제정비 검토 중)
- 연합 사무처 인력의 지위·신분을 명확히 하여 파견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충청북도는 교통·물류의 중심지라는 입지적 장점과 첨단·바이오산업으로 대표되는 특화산업 육성 기반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현재 초광역 협력체계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다양한 연계협력 방식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광역행정의 실질화 전략 마련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 있음

III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역여건 및 정책과제 분석

- 지역 간 교통·물류, 환경·생태계 보호, 산업·일자리 연계, 문화·관광 자원 공유 등 광역 차원의 정책과제의 증가 추세를 구체적으로 확인함
- 충청권에서 진행된 교통(광역버스), 환경(금강 수계 관리), 문화(충청권 문화관광 협력) 등 공동사업 추진 사례를 조사하여 장단점을 분석함

● 초광역 연계협력의 기반 분석

- 초광역 협력기구 간의 권한·책임 중첩과 갈등 조정 비용 등을 검토함
- 중앙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예: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등)과 충청북도 입장에서의 기회·위협요인을 파악함

● 초광역적 기능수행에 대한 인식 분석

- 법령 및 제도 정비: 광역연합 운영 규정, 재정지원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재정지원 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교부세·특별교부금 보완과 더불어 권역 차원의 공동재원 조성 방안을 검토함

3-13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 참여율 제고방안



주제어 빈집 | 빈집정비사업 | 지역발전

연구책임 이원도 • 연구진 양원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체계적인 빈집 정비와 참여 활성화 방안

• 지자체 빈집 관리역량 강화

- 빈집 정비사업의 낮은 집행률은 이원화된 법체계와 기초지자체의 체계적인 빈집관리의 부재와 연관되어 있음
-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2025.05.01.)에선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빈집 관리책무를 담당하고, 기초지자체는 빈집 철거 및 유휴자원 활용에 집중하는 역할을 제안
- 충남도청에선 이러한 정책방향과 부합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사업 종합추진계획(안)을 제시하였음

• 체계적인 빈집 정비와 참여 활성화 방안

- 충남 빈집정비사업 종합추진계획(안)에선 ①원도심 빈집 재개발, ②기초지자체 빈집 리모델링 지원, 그리고 ③철거 시 세부담 완화 등 민간 정비·활용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선 도시재생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참조조례안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언하였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체계적인 빈집 관리의 필요성

• 빈집 증가와 확산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빈집 증가는 거주민 감소와 주택 노후화로 인한 거주 매력도 저하에 따라 나타나며, 빈집 발생시 인근 주택도 '빈집화' 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러한 빈집 밀집구역은 정비가 어려워지고, 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낙후지역(이른바 슬럼화)이 생기게 될 수 있음

• 지자체 빈집 관리역량 강화의 필요성

- 지자체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낮은 집행률은 기초지자체의 빈집관리 체계 및 행·재정적 역량과 밀집하게 결합되어 있음

III 주요내용

● 빈집 관련 법제도 검토

• 빈집 법제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지역(동),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지역(읍, 면, 리)의 빈집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임
- 이원화된 법체계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빈집 관리·활용을 다루고 있음에 따라 빈집 관리 책임기관인 기초지자체는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자체 자치법규(조례)

-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시행 2024.04.05.)」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충남 관할 기초지자체의 읍면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선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제안 하였음

● 충남 빈집 정책현황

● 충남 빈집 실태

- 정비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어촌지역(읍면)을 중심으로 한 단순철거 실적이 대부분임
- 충남 기초자치체 빈집 관리역량은 전담조직 부재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지역 혼재로 인한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행정적 한계가 존재함
- 또한,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 재원이 부족한 재정적 한계도 혼재되어 있음

● 정책제언

● 광역지자체 주도의 빈집정비사업 종합추진계획(안)

- 충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주도의 빈집정비사업 종합추진계획(안)을 작성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광역지자체 주도의 빈집정비사업 종합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중점지원대상 선정과 자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제정되어야 함
- 또한, 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 등 빈집 정비와 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과제에선 빈집 소유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의 연동을 통한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방안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일명 빈집재생민박업)”과 소유자 대신 빈집 유지·단기임대를 관리하는 “빈집관리업” 등을 통한 민간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였음

3-14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주제어 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원기관 | 중간지원조직

연구책임 최정우 · 연구진 유보람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경상북도의 마을기업 지원정책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 대한 마을기업의 기여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 돌봄체계 강화 등 사회연대경제 구성원으로서의 마을기업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외에도 성과관리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마을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 등이 우선시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축, 성과관리 등의 신규기능과 우수 마을기업 육성, 맞춤형 마을기업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양향 및 활성화 방안

-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보다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우수 마을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 지원 기능 강화가 요구됨
- 마을기업 연구, 우수 마을기업 발굴 및 홍보, 마을기업 성과보고서 검토 등의 신규 업무와 함께 경영지원,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기능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은 단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유지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향후 공공기관 위탁 등으로의 전환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마을기업 지원기관 지원체계 개선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마을기업 관련 DB 구축,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지원기관의 운영 자율성 제고 등을 제안함

● 효과적인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 마을기업 지원·육성과 관련하여 마을기업의 양적 확대, 우수 마을기업의 육성, 공공성 및 지역성, 그리고 수익성 등 다양한 목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마을기업의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함
-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률상 임의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수행되는 행안부 주관 마을기업 지원기관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마을기업 제도가 운영되어 2024년 말 기준 1,726개의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공동대응과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기반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 2025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마을기업법) 제정으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확대됨
- 「마을기업법」제정 등 마을기업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상북도의 마을기업 지원 기능 및 사무를 정립하고, 이에 대응한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역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전문가 및 마을기업 종사자 인식분석 결과

- 마을기업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명확한 마을기업 지원 체계 수립, 지원기관 역할의 명확한 정립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마을기업 지원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에 대해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으나 경영컨설팅, 교육지원 사업 등의 추진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중장기 관점에서의 마을기업 지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마을기업 지원정책 및 지원기관 운영 방향

- 마을기업 지원정책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 돌봄체계 강화 등 사회연대경제 구성원으로서의 마을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외에도 성과관리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마을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 등이 우선시되어야 함
-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보다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우수 마을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 지원 기능 강화가 요구됨

●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방식 검토

- 공공기관 위탁 방식은 민간위탁에 비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개정된 「마을기업법」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법 개정사항 등이 사업에 반영되어 정책환경이 안정되면 공공기관 위탁으로의 운영방식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 정책환경 변화가 많은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여 지원기관의 역할 변화 등에 기존의 사업추진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원기관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3-15

남해안권 초광역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주제어 남해안권 | 초광역 추진체계 | 정책·입지전략

연구책임 주희진 • 연구진 김건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남해안권 초광역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

- 남해안권은 해양·관광·문화 자원이 집적된 전략 공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기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권역 범위가 넓어 실질적·집중적 개발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 수도권 집중 심화, 지역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개별 지자체 단위가 아닌 초광역 단위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됨

● 추진체계 형태 및 역할 설정의 방향성

- 전문가 분석 결과, 초광역연합체 지원형 협력기구가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청 단위) 설치가 제시되었음
 - 다만 초광역연합체는 현 단계에서 법·제도·재정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즉시 도입에는 제약이 존재함
 -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특별법안이 중앙행정기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추진체계 논의에서 고려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추진기구는 권역 단위 계획·조정 기능과 현장 기반의 집행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종합개발계획 수립, 전략사업 연계, 정책조정, 인허가 지원, 사업 발굴·추진 지원 등이 핵심 기능으로 제시함

● 초광역권 추진체계 설계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 추진체계는 남해안권의 권역적 연계성과 지역별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함
 - 시·도 공동 참여 구조를 통해 지역 대표성·민주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발의 중인 특별법안, 전문가 의견, 기존 권역 발전 전략 등을 종합해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추진체계 전환 방안이 요구됨
 - 단기적 대응체계 마련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및 향후 초광역 단위의 협력 기반 확대를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함
- 추진기구의 기능과 역할은 향후 남해안권 발전 전략, 권역 협력사업, 재정·제도 기반 정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타 권역 사례와의 비교, 중앙부처 협력 구조, 민간·전문기관 참여 확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남해안권의 국가적 위상 변화와 개발 필요성

- 남해안권은 해양·관광·문화 자원이 집적된 전략 공간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기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권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남해안권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집중적 개발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
- 수도권 집중 심화, 인구구조 변화, 지역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개별 지자체 단위가 아닌 초광역 권역 단위의 통합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앙·지방의 입법·정책 추진 동향

- 국회에서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문금주·정점식)’과 ‘남부권 발전 특별법안(정동만)’ 등에서 남해안(또는 남부권)종합개발청 설치를 공통적으로 제시하며, 추진기구 설치에 대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음
- 부산·경남·전남 등 관련 지자체는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 시·도 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 기존 제도·정책의 한계

- 현행 특별법 및 개별 부처 사업 체계에서는, 남해안권 개발 관련 사업들이 부처·분야별로 분산 추진되어 정책·재정·공간 차원의 연계와 조정 기능이 미흡하였음
- 권역 내 다핵적 도시구조, 연안·환경 규제,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 추진체계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III 주요내용

● 초광역권 개발 및 남해안권 발전의 의의

- 초광역권 개발은 행정경계를 넘는 생활·경제권 기반의 연계·협력을 확대하여 메가리전 구축을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임
 - 기존 광역·기초 단위 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역 단위 정책효과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임
 - 이에 대하여 성장거점이론·네트워크 거버넌스 등 주요 이론은 초광역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권역 단위의 기능 배분·정책 조정·연계 인프라 구축이 지역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제시됨
- 부산·전남·경남의 해안도시는 연속된 광역공간을 형성하며 자연·관광·산업·해양경제 기반이 집적됨
 - 다핵적 공간구조·지역 불균형·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개별 지자체 중심 개발은 한계가 있으며, 통합적 개발체계 마련이 필요함
- 현행 특별법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남해안권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지역개발이 제약됨
 - 다수 부처 개별 사업 중심 구조로 인해 연계 부족 문제가 반복되었고, 통합적 조정기구의 부재가 한계로 존재함

● 국내·외 초광역 개발 조직 설치 사례 분석

- 국내 사례(새남금개발청, 행복청, 경제자유구역청 등)는 중앙주도형 개발청 형태가 주류이며, 개발계획 수립·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함
 - 특정 지역 개발사업 중심으로 초광역권 단위의 연계·협력 기능은 제한적이므로, 남해안권 추진체계 설계 시 협력·연계 기능 보완이 요구됨

- 국외 사례(ARC, TVA, IRDA 등)는 국가-지방-민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장기 정책조정 기능이 강함
 - 재정지원·사업조정·권역관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조정·투자·집행이 통합된 구조로 권역 성과를 창출함
-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남해안권 추진체계를 단순 개발기구가 아니라 지역 간 연계·조정·협력을 수행하는 정책조정형 초광역기구로 설계의 필요성을 도출함

● 남해안권 초광역 개발 추진체계의 설치 필요성과 방향

- 남해안권은 연안·환경 규제, 다핵 공간구조 등으로 개별 지자체 단위 대응이 한계가 있음
 - 다부처·다지자체가 얽힌 이슈로 인해 권역 단위의 조정·중재 기능 필요성이 더욱 증가함
- 해양·관광·산업 축 중심의 남해안권 개발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중요함
 -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연계하여 권역 단위의 정책조정·중재·지원 기능이 요구되며, 남해안권 초광역 추진체계는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 추진기능(안)은 다음과 같음
 -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 권역별 전략산업·관광·해양정책 연계
 - 광역 SOC 및 연안·환경 관리 협력조정
 - 중앙-지방 협력사업 발굴

● 입지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분석

- 입지선정 기준은 접근성, 행정집적도, 권역 중심성, 산업·관광 연계성, 네트워크 등으로 도출함
 - 추진기구의 기능(계획·조정 중심 vs 집행 중심)에 따라 각 기준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전국·남해안권 분석 모두에서 접근성과 행정·기관 집적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남
 - 전국 단위에서는 교통 접근성(국가간선망 포함)과 행정·기관 집적도의 비중이 높게 평가되었음
 - 남해안권 단위에서는 교통·행정 기반뿐 아니라 권역 중심성(세 권역 사이의 위치적 중립성)과 산업·관광 연계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II

연구보고서

- 즉, 전국 단위는 “국가 교통망 및 기존 인프라 중심”, 남해안권 단위는 “권역 내 균형·연계성 중심”에서 기준 우선순위가 차이를 보임

● 남해안권 초광역 개발 추진전략

- 남해안권 초광역 개발을 위한 전략 방향은 해양·관광·산업 중심의 초광역권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5극3특)전략에 부합하는 권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임
 - 기존 특별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중앙-지방 공동 참여형 구조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함
- 수행전략은 다음과 같음
 - (단기) 중앙-지방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특별법 대응
 - (중기)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및 기능 일원화
 - (장기)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제도화 가능성 검토
 - 단계적 기능·권한 이양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3-16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재편 방향과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연계 방안 연구



주제어 지속가능발전 | 종합계획 정합성 | 제주국제자유도시

연구책임 이서희 • 연구진 김민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종합계획의 정체성 재정립 및 기능적 재편 필요성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다수 법정계획과 병존하는 구조 속에서 포괄적 나열식 계획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계획의 전략성과 실행력이 약화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 종합계획을 모든 행정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문서가 아닌, 제주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하는 인프라·공간 중심의 전략 실행 계획으로 기능 재편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인프라 구축, 공간 구조 개편, 핵심 선도사업 중심으로 계획 범위를 재조정함
 - 일반 행정사업은 부문별 법정계획으로 이관하여 계획 간 중복성과 혼선을 최소화함

● 지속가능발전 체계와의 연계 강화 및 이행력 제고

-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도정의 최상위 가치 규범으로 설정하고, 종합계획은 이를 구체화하는 실행 수단으로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계획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 가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위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거버넌스 혁신 및 법·제도적 기반 강화

- 종합계획의 통합 관리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JDC와의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할 필요가 있음

II

연구보고서

-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종합계획 간 위계 관계를 명시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전 검토 권한을 실질화하여 주요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을 제도화함

● 도민 중심의 개방형 계획 운영

- 전문가 중심 지표에서 벗어나 도민 삶의 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개발함
- 계획 이행 현황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과 도민 수용성을 제고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다층적 계획체제로 인한 정책 혼선 문제

- 제주에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다수의 법정계획이 병존하고 있으나, 계획 간 위계와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음
- 동일 정책 분야에 대해 상이한 지표·재원·평가 체계가 적용되면서 정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음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정체성 약화

- 20여 년간 추진된 종합계획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운영되면서 초기 ‘개발 중심’ 목표와 최근 ‘지속가능 가치’ 간의 방향성 혼선이 누적됨
- 실제 사업 이행 및 예산 배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계획의 실효성이 제한됨

●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최상위 규범화 필요성

-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도정 전반을 포괄하는 가치 기준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은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한 인프라·공간 중심의 실행 계획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III 주요내용

● 계획 간 정합성 분석 결과

- 비전 수준에서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공통 가치가 확인되었으나, 지표 수준에서는 괴리가 존재함
- 종합계획은 물리적 투자 중심 지표,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사회·환경 성과 중심 지표로 구성되어 상호 직접 연계가 제한됨
-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 중 일부 영역은 종합계획 내 대응 사업이 부재가 확인됨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 국내 특별자치도 및 서울특별시 사례 분석을 통해 종합계획과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인함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SDGs를 최상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과 프로젝트를 목표별로 매핑·관리하는 방식의 시사점을 도출함

● 종합계획 정비 원칙 및 재편 방향

- 전략적 집중, 지속가능 가치 내재화, 제도적 특례의 패키지화 등을 종합계획 정비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함
- 종합계획은 인프라 축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일반 행정사업은 부문계획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제시함

● 거버넌스 및 이행 체계 분석

- 종합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JDC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 프로토콜 정립이 필요함
- 지속가능성 검토를 전제로 한 공동 이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책이슈리포트

- | | | |
|---------|----|---|
| 서울특별시 | 1 | 서울 균형발전 전략 재구성 방안:
개념 및 정책 추진 방향 정립 |
| 부산광역시 | 2 | 북극항로 거점항구 역할을 위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전략적 방안 모색 |
| 대구광역시 | 3 |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기준 연구 |
| 광주광역시 | 4 |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저감
개선방안 마련 |
| 대전광역시 | 5 | 계족산 권역 특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
| 울산광역시 | 6 | 상수도 분야 전문인력 고령화 대응 방안 |
| 경기도 | 7 | 경기도 소방관서 성과집단 구분 지표 설계에 관한 연구 |
| 강원특별자치도 | 8 | 시·도 지역본부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
| 충청북도 | 9 |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 충청남도 | 10 | 충남소방 현장활동 업무량 기반 성과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
| 전북특별자치도 | 11 |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교통서비스 확보 방안 |
| 제주특별자치도 | 12 | 「제주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도시 조성」 추진 방안 연구 |

4-1

서울 균형발전 전략 재구성 방안: 개념 및 정책 추진 방향 정립



주제어 지역발전 | 지속가능발전

연구책임 김민영 • 연구진 양원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서울 균형발전 개념,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가치로 재정립

- 서울시는 지역 간 인프라와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고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가치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존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균형발전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함

● 서울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방향: 주민 체감형, 취약지원 집중형, 참여 기반 정책으로

- 서울의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 공급에서 벗어나 주거·교육뿐 아니라 문화·환경·건강·고용 등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하는 주민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또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해 불평등이 집중된 취약지역에 재정과 정책을 집중 투입하는 지원 전략이 필요함
- 정책의 성패는 주민 참여와 공동 설계에 달려 있으므로, 파리와 런던처럼 주민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상주 조직이나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어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 의사결정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권한 강화와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통한 협력적 균형발전 체계로 전환

- 고간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수도권에 소외됐으나, 도시 내부 불평등 역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수도권에도 국가적 지원과 권한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여 공동 성장과 상생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 균형발전 체계 속 수도권 위상과 서울형 균형발전 방향 점검

- 국가 균형발전정책은 오랫동안 수도권 억제와 비수도권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울은 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었음
- 그 결과 서울 내부의 도심-비도심, 강남-비강남 간 격차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며, 더 이상 균형발전의 예외적 공간으로 머물 수 없게 되었음
- 주요 해외사례에서는 도시 내부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 국가가 수도라 하더라도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협력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도권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정책 대상이자 동시에 비수도권이 상생 협력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는 국가 균형발전체계 속 서울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도시 내부 불평등 해소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국가와 서울시의 균형발전 개념과 정책 변화 분석

- 1960년대 이후 각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개념과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수도권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짚었음
- 2000년대 이후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변화를 분석하여, 개발 중심의 뉴타운식 접근에서 종합적·제도화된 균형발전 체계로 전환된 과정을 살펴보았음
 - 서울시는 2017년 조례 전면 개정과 2022년 제1차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의 범위를 도시계획에서 사회·문화·경제·환경 전 영역으로 확장하고, 중기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해외 수도의 균형발전 전략과 국가 지원 체계 분석

- 유럽연합,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일본(도쿄) 등 주요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①(초)국가적 균형발전정책 속에서 수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위치 지어지고 지원되는지, ②수도 자체적으로 내부의 공간적·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검토하였음
- 유럽 사례에서는 수도 역시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초)국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도쿄가 지방과의 공존·공영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의 번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쿄-지방 간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한 바 있음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서울이 향후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였음

4-2

북극항로 거점항구 역할을 위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전략적 방안 모색



주제어 북극항로 | 글로벌허브도시 | 지역발전전략

연구책임 주희진 • 연구진 김건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북극항로 전략의 도시 전략화 필요성

- 북극항로는 단순 해운노선이 아니라 부산의 산업·물류·금융·연구·외교를 결합하는 도시성장축임
- 부산은 환적항만(세계 6위), 극지연구·해양교육 클러스터(극지연구소·해양대 등), 가덕신공항 등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이 문제임
- 북극항로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비전의 핵심 전략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3단계 추진 구조의 정립

- 해양수산부(2021)의 단계적 전략을 부산의 허브도시 전략에 적용하여 다음의 구조를 확립함
 - (1단계(기반 조성기, ~2030)) 항만·공항·R&D 인프라 확충, 법·제도 정비
 - (2단계(산업·기술 연계기, 2030~2035)) 극지산업 육성, 친환경 선박기술·해운금융 결합
 - (3단계(글로벌 협력·확산기, 2035 이후)) 국제 네트워크 확대, 북극협력 외교 강화

● 정책 추진의 핵심 제안

- (해양물류 클러스터 재편) 북항재개발-가덕신공항-산단을 연계한 복합물류 축 조성
- (산업·기술 혁신) 친환경 연료, 안전항해, 조선·플랜트 기술 등 북극항해 기반기술 고도화
- (해운금융·보험 생태계 강화) 북극항로 특화 위험관리·보험·투자체계 구축

- (국제협력 도시외교 확대) Arctic Council/AEC/IMO 등과 다층 협력 강화
- (국가전략과의 정합성 확보) 해수부·산업부·외교부와의 공동 전략체계 구축
- (지역산업 재편 대응) 수리조선·친환경 선박·해양ICT 등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북극항로 개방과 지정학적 전환

- 기후변화로 북극해 항로 개방성이 확대되면서 유럽-아시아 간 항해거리 30~40% 단축 가능성이 확인됨
- 각국은 에너지·물류·안보 측면에서 북극항로 전략을 국가 중장기 아젠다로 설정 중임

● 부산의 전략적 잠재력

-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물류 중심지이며, 극지·해양 연구기관 집적도가 최고 수준임
- 북극항로 활용에 따라 환적·물류·금융·기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상승 가능성이 큼

● 정책 대응의 필요성

- 국내 주요 지자체(강원·울산·전남 등) 사이에서 북극항로 선점 경쟁이 이미 심화되는 상황임
- 부산은 선점형 전략을 마련하여 글로벌 해양도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함

III 주요내용

● 국내외 북극항로 대응 동향 분석

- (국내) 부산은 TF 운영, 극지연구 강화, 물류·금융 기능 연계를 기반으로 거점화 전략 추진 중임
- (국외)
 - (러시아·노르웨이) 북극항로 전진기지 육성(무르만스크·키르케네스 등)
 - (중국·일본) 빙상 실크로드·극지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 전략 추진
 - 국제 거버넌스는 Arctic Council 중심에서 산업·경제 협의체(AEC) 등 다층 구조로 확대됨

● 글로벌허브도시 비전과 북극항로 전략의 연계성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비전 4대 축(해양물류·산업혁신·금융·연구/외교)이 북극항로 전략과 구조적으로 직결됨
- 북극항로는 해양물류 중심도시 → 산업·기술혁신 → 금융 허브 → 연구·외교 도시로 확장되는 다차원 성장 경로를 제시함

● 부산의 북극항로 거점화 전략 방향

- (복합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산업·기술·금융·외교 기능의 통합 운영
- (글로벌 협력 강화) 북극 경제협의회(AEC)·IMO 등과의 파트너십 확대
- (도시-국가 연계 강화) 국가항만계획·해양정책·극지전략과의 정합성 확보
-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원·전남 등 국내 북극항로 관심 지역과의 공동 전략

● 타 지자체·해외 주요국과의 연계 협력

- 동해권(강원)-남해권(부산·울산·전남) 간 북극항로 협력 축 형성 가능성 탐색
- 일본(홋카이도), 노르웨이, 러시아와의 해운·물류·에너지 협력 기회 확대
- 극지 공동연구·기술교류 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확장

4-3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기준 연구



주제어 야간관광 | 관광자원 | 지역경제

연구책임 황해동 • 연구진 전성만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시환경변화를 위해 대구광역시형 야간관광 공모 추진

- 2025년 4월 10일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 기준 마련
 - 대구광역시는 관광을 통해 고부가가치로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 중 하나로서 야간관광을 자체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원활한 야간관광 추진을 위해 지역 야간관광의 특징, 추진조직,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함
 - 야간관광은 야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주간과 연계된 관광 콘텐츠의 발굴이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협조와 자연친화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운영상 안전관리가 요구됨
 - 이와 같은 운영을 위해 기관의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굴 및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고 관광관련 지역 조직과 연계가 필요함
 - 주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역활성화를 위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요구됨**
 - 지역성장동력을 위해 지역 특화자원의 관광자원화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체류형 관광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야간관광의 관심이 주목
 - 대구광역시를 관광도시로서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방식과 적정 선정지역 수, 사업유형, 평가기준 등 공모기준 마련 필요

III 주요내용

● 야간관광의 개념 및 특징

- 야간관광은 야간경제로부터 발전하여 일반적으로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사이의 시간적 범위를 두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간과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음
 - 1인당 관광지출액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야간관광 필요성에 대두되고 있으며, 야간시간에 지역의 색다른 매력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됨
 - 최근 24시간을 활동시간으로 보는 경향에 따라 주간활동과 야간의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있으나 관광의 주요활동시간과 주간이라는 점에서 주간과 연계된 야간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있음

●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성과 지속성, 형평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야간관광은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현재 자원과 유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관련 사업에서도 특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설 콘텐츠와 체험 및 프로그램 등 상시 운영되는 상설 콘텐츠로 구분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계획 및 성과평가를 운영하여 정책환류체계를 마련함
- 지역의 특수성을 위한 지표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을 통해 파급효과와 관련된 경제성도 중요한 지표로 제시되고 있음

4-4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저감 개선방안 마련



주제어 지역안전 | 지역사회

연구책임 김수동 · 연구진 이재웅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사회재난 위험저감 방안

● 사회재난 위험관리 체계가 고도화되어야 함

- 데이터 기반 위험도 현황을 정책 우선순위 및 자원 배분과 연동하는 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유형별 주관부서 분산 등 대응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인식 간 격차 해소 및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 인식조사의 활성화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치구별 위험 구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점검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점검의 전문성 강화 및 환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지역 사회재난 위험저감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등급별 차등화된 매뉴얼 관리 및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과 연계해야 할 것임

● 조직·인력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위험성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위해 기초-심화 2단계 교육과정 구축 등 과학적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전문자격 취득 지원 및 전문성 인정 체계 구축, 성과 기반 보상체계 구축 및 전문교육 이수 실적 관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위험저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부서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및 자치구 지원·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사회재난 피해 규모 증가 및 예방정책 전환 필요성

• 사회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국내 사회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여, 사후 수습 중심에서 과학적 분석 기반의 선제적 예방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이태원 압사 사고(2022년) 등 중대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고, 사회재난 사망·실종 건수가 2021년 대비 2022년에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피해 규모가 급증함

•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통합적 대응 한계가 나타남

- 개별법에 따른 재난 유형별 주관부처 중심의 분산관리로 인해 재난현장에서의 부처 간 협력 및 통합적 의사결정에 한계가 존재함
- 유형별·부처별로 분절된 대응 체계로 인해 복합재난 및 연쇄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됨

●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역 중심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 예방 중심의 지역주도형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자연재난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지자체 주도의 위험요인 분석·평가 및 저감활동 수행이 체계화된 반면, 사회재난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협력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함
- 재난 현장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재난 예방 및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재정비가 요구됨

• 광주광역시의 대형 사회재난 경험에 따른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

- 2021년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사망 9명), 2022년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사망 6명), 2025년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등 대형 사회재난이 연이어 발생함
- 광주광역시 주도의 과학적 위험성 평가 기반 예방적 사회재난 관리 체계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위험저감 전략 마련의 실질적 필요성이 제기됨

III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현황

- 최근 10년간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발생은 교통사고와 감염병에 집중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위험 패턴을 보임
 - 2014~2023년간 8건의 주요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교통사고가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의 65.2%(2023년 기준)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북구·광산구·서구 3개 구에 집중(82.5%)됨
 - 화재는 누적(2015~2023년) 기준 광산구(30.8%), 북구(26.3%), 서구(20.6%) 순으로 높고, 2023년 기준 붕괴사고는 서구(39%), 수난사고는 광산구(50.0%), 등산사고는 동구(49.3%)·북구(42.4%)에 집중되어 지형적·공간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위험 패턴이 확인됨
- 주요 붕괴 사고 사례는 건설 생애주기 전반의 절차적 통제 및 감리·감독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줌
 - 2021년 학동 붕괴사고(사망 9명)와 2022년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사망 6명)는 단순 기술 결함을 넘어 설계·시공·감리·감독 전 단계에서의 절차적 통제 시스템 작동 실패를 반영함
 - 공사기간 단축 압력, 다단계 하도급 구조, 형식적 점검 절차 등 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의 시스템적 문제가 근본 원인으로 작용함
- 지역안전지수 및 시민 안전 인식 분석 결과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체감 간 격차가 확인됨
 - 광주광역시는 교통사고·화재·감염병에서 3~5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 대비 취약하고, 동구는 범죄·생활안전·감염병에서 지속적 5등급으로 종합 취약 구역으로 평가됨
 - 시민 안전 인식은 범죄피해 두려움이 개선 추세(2020년 27.2% → 2024년 21.7%)이나, 교통사고는 실제 사고 빈도(65%) 대비 안전 인식(33.8%)이 낮아 '위험의 정상화' 현상이 관찰됨
-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이 체계화되어 있으나 자치구별 역량 격차가 존재함
 - 광주광역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13개 협업기능 실무반 운영 및 위험도 기반 차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자치구별 분석 결과 전문 인력 부족, 부서 간 협업 미흡 등 공통 한계가 확인되며, 광산구(저감역량 1등급)와 서구·남구(저감역량 4등급) 간 역량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위험성 평가 현황

- 위험성 평가는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정량화된 위험도 산정 및 정책 우선순위 도출을 가능하게 함
 - 화재·붕괴·교통사고·감염병을 대상으로 ‘위해성×노출성×취약성÷저감성’ 방식을 적용하여 1-5등급 체계로 위험도를 정량화함
 -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저감성의 4대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유형별·자치구별 비교 가능한 과학적 평가체계를 구축함
- 재난 유형별 위험성 평가 결과는 동일 등급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상이한 위험 구조를 보여줌
 - 화재는 전 자치구 2등급이나 광산구는 ‘고위험-고역량’ 구조(노출성 5등급, 저감성 1등급)인 반면 서구·남구는 저감성 부족(4등급)으로 획일적 정책의 한계를 시사함
 - 교통사고는 서구가 저감성 부족(4등급)으로 4등급 최고 위험을 보이며, 감염병은 서구·북구가 높은 노출성·취약성(5등급)과 낮은 저감성으로 5등급을 기록함
- 이러한 평가 결과는 위험 구조의 차이에 따른 자치구별 맞춤형 위험저감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함
 - 붕괴는 광산구(1등급)를 제외한 전 자치구 2등급이나, 서구는 높은 위해성(4등급) 대비 저감성 부족(4등급)으로 관리역량 강화가 시급함
 - 광산구는 우수한 저감역량으로 높은 노출성을 효과적 통제하는 모범 사례인 반면, 동구는 낮은 노출성에도 생활안전 취약성이 지속되어 자치구별 맞춤형 위험저감 전략 수립이 필요함

4-5

계족산 권역 특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주제어 지방규제 | 지역개발 | 지역발전

연구책임 황해동 • 연구진 전영준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규제 강도의 단계적 접근

● 현행법 상 예외규정 지정-‘환경정비구역’지정요건 강화

-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및 제15조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취락을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염원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는 조건으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소규모 음식점이나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
-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체류형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상수원 보호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환경보호 기반의 단계적 지역개발을 위한 방안

- 1단계: 정밀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신뢰확보 등을 위한 기반 조성 준비
- 2단계: 특별구역을 신청하고 전략환경평가를 준비하여 규제완화 모색 및 명분을 축적하는 등 중기계획 수립
- 3단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제한적 시설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에 입각한 개발을 추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장기적 계획 수립

● 특별법상 특례 규제 신설

- 「개발제한구역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스마트도시법」의 특례 조항을 신설 및 활용하는 것으로 중복규제 해소

• 규제구역의 차등화와 거버넌스 협업체계 구축

- 우리나라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반면, 국외사례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해 규제구역의 강도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규제구역을 지정 및 해제하고 있으나 국외의 사례에서는 갈등예상지역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토지이용에 관해 결정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역할 변화가 필요함

●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요인 최소화 및 시기별 합의를 통한 의제화

- 단기적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하고, 지역의 정책의사결정자들 간 합의 의제화를 중기적으로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 상정을 통해 정치적 결정 요청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경제와 지역활성화의 핵심축으로서 관광산업

- 정부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콘텐츠가 매력적인 관광자원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특화자원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 성장동력 강화를 추진함
- 문체부는 관광 분야 민간 협력체인 ‘케이(K)-관광 혁신 전담팀(TF)’을 출범하여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방한 관광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 해결에 주력하고 있음

●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의 중복규제로 인한 개선방안 마련

-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규제가 적용된 접경지역의 지역개발 한계
-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자연보존을 유지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III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동향

- 최근 개발제한구역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허용 행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같은 제한적 상업활동을 허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존을 위해 대응책으로 개선함

-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및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는 규제와 개발 간 선택적으로 집중함

● 상수원보호구역의 정책동향

-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를 통해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이 필요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함
- 정부는 전국에 일반상수도를 보급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에도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의 상수도보호구역은 지정수 대비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시사점

• 규제의 양면성

-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반면, 때에 따라서는 법에 의해 권리를 제한하기도 함
- 국민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동시에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책무도 함께 부여받고 있는 바, 권리와 책무의 근본적 가치는 안정적인 사회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치임
- 환경규제를 통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있어 규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가 아닌 단기에서 구분되는 결과이므로 적절하게 조절이 필요함
- 환경규제의 완화로 인한 결과는 난개발과 수질오염에 의한 물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토지와 수질 보호를 위한 친환경 기술의 도입이 요구됨

•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생태계 훼손보다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의 결과로 인위적인 훼손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 구축은 건강한 생태계에 있어 필수요소임
- 지역개발에 의해 훼손된 자연을 친환경적 기술을 접목한 시설 구축을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안정성을 확보하여 정부와 주민 간,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함

• 지역의 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지역개발문화 조성 및 정착

- 대한민국의 빈집 문제는 빈집 정책이 경관 훼손, 안전 문제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거하는 대응 외에도 빈집을 지역재생을 위한 잠재적 자산으로 전략적으로 전환됨

4-6

상수도 분야 전문인력 고령화 대응 방안



주제어 상수도 | 고령화 | 조직·인사관리

연구책임 박해육 • 연구진 이경은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전문인력 고령화 대응 방안

-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 고령화에 관한 대응 방안 모색은 우선적으로 누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대응 주체를 울산광역시청과 상수도사업본부로 구분하였으며,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구분함
- 울산광역시청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젊은 연령대의 인력배치, 근평제도 개선, 승진기회의 불균형 해소, 퇴직자 활용 방안 마련 등을 들 수 있음
 -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신규 채용 확대 및 새로운 직렬 신설·운영, 전문직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AI 기반의 인사이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들 수 있음
-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현장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재배치 이후 기존부서 복귀 관행 개선 및 적응 지원,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전문관에 대한 실적관리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 활용 확대 및 역량 강화를 들 수 있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상수도 분야 전문인력 고령화 대응 필요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고령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울산광역시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숙련도가 쌓인 전문인력의 대부분이 퇴직할 경우 상수도 시스템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음

III 주요내용

● 상수도 분야 인력운영 현황 분석

-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인력은 239명으로, 이 중 남성이 191명(79.9%), 여성이 48명(20.1%)으로 구성되어 있음. 직급별로는 7급(98명, 41%)과 6급(63명, 26%)이 전체 인력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어, 본부의 조직운영은 사실상 중간관리자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여줌
-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인력의 평균 근속기간은 3.76년으로, 남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4.27년,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1.74년임
-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인력 중 50대 인력이 120명으로 전체 인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30대(58명), 40대(35명), 60대 이상(20명), 20대 이하(6명)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 상수도 분야 인력운영 문제점 분석

- 상수도사업본부에 배치되는 인력의 상당수는 퇴직이 많이 남지 않은 고령대 공무원이거나 승진 이후 타부서로 전출되어야 하는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있으나 이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담당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업무담당자를 현장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퇴직 시점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상수도 전문인력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업무 부적응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인력의 고령화를 초래하게 됨

- 젊은 공무원을 상수도사업본부로 배치하더라도 상수도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적응이 필요하며, 전체 공정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나, 젊은 층의 공무원이 3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체계는 거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젊은 연령대 공무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타부서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기존의 고연령대에 속하는 인력만이 근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상수도사업본부 내부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젊은 공무원을 정수사업소로 배치하고, 정수사업소의 고연령대 공무원을 지역사업소로 전보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재배치가 쉽지 않음
 - 오랜 기간 동안 정수사업소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의 경우, 공사발주, 시행, 준공 등에 따른 업무처리, 시스템에 각종 서류 탑재, 민원업무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처리를 어려워하거나 또는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 상수도 분야 고령화 대응 관련 인식조사

-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고령화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수는 165명임
 -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인사 분야 관리 및 운영 관련 문제점은 총 15개의 설문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선방안은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됨
- 문제점 차원에서는 ‘시청 실·국에 비하여 근평을 잘 받기 어려움’, ‘승진에 불리한 편임’, ‘고령화’ 등의 문항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근속기간이 짧은 편임’, ‘개별 부서별로 근무자 간 연령차가 큰 편임’ 등의 순으로 문제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개선방안 차원에서는 ‘승진 시 불이익 발생하지 않아야 함’, ‘시청 실·국에 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근평제도 개선’, ‘전문관 선발 시 현장경험 반영 필요’, ‘체계적인 현장교육 필요’, ‘젊은 연령대에 속하는 공무원의 배치 필요’ 등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4-7

경기도 소방관서 성과집단 구분 지표 설계에 관한 연구



주제어 성과집단 | 그룹화 지표 | 소방

연구책임 김필 • 연구진 김해솔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결론

• 세부지표 정교화 필요함

- 동적 인구, 취약계층, 대상물 위험도, 출동 집중도, 근무여건, 심야·중증 대응 부담 등 현실 반영

• 정량·정성 지표 병행 활용

- 단순 활동건수 위주의 한계를 보완
- 질적 강도·난이도 지표를 병행하여 현장 여건 설명력 제고

• 정책 기반 성과관리 도구로 기능

- 단순 성과평가를 넘어 자원 배분·소방력 배치·예방사업 기준으로 전환 필요
- 지속적 지표 업데이트 및 예산 반영 체계화 필요

• 그룹화 지표의 형평성 확보

- A~C 그룹별 차등 기준·가중치 및 정성지표 적용
- 외곽지역의 거리, 면적, 재난 이력 등을 보정계수로 반영

● 정책제언

- 소방력 배치 효율화 및 맞춤형 운영계획
- 예방기능 중심 지표 강화 및 인력·예산 연계
- 데이터 연계 및 플랫폼 구축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성과평가 그룹화 체계 필요성

- 경기도는 도심 고밀지역부터 외곽 농촌지역까지 다양해 관서별 업무량·부담 편차 큼
- 일부 관서는 연간 수천 건 출동, 일부는 출동 빈도 낮음 → 현실 반영 필요
- 현재 36개 관서를 A·B·C 그룹으로 구분하나, 지표 타당성 검토 부족

• 기존 그룹화 체계 한계

- 현장직: 출동 건수 중심, 행정직: 민원 건수 중심 → 정량지표 편중
- 인구·지리·밀집도·조직문화·직원 선호도 반영 미흡
- 성과급·종합평가·포상금·지휘관 평가 등 제도와 연계되나 지표 타당성 검증 필요

● 필요성

• 현장 여건·업무 특성을 반영한 그룹화 기준 재정립 필요

- 수도권·도농복합·농촌지역 등 이질적 환경·업무강도 고려
- 성과평가의 수용성·타당성 제고

• 정량지표 보완 및 질적 요소 반영 필요

- 출동 강도, 협업 난이도, 민원 복잡성 등 질적 요인 포함
- 현장 중심성과 형평성 강화

III 주요내용

● 영역별 지표 개선 방향

- (소방환경-관할) 업무 실제 부담을 반영하는 밀도 기반, 생활인구, 출동패턴 중심 구조로 전환함. 인구보다는 출동 강도와 지역 리스크를 중심에 둠
- (소방환경-대상물) 시설의 '양'이 아닌 '위험도' 중심 평가로 전환하며 아동시설 포함 및 복합·노후 시설 위험계수 도입을 통해 현실 반영 강화함
- (소방환경-조직) 휴직자 제외 실근무 인력 기준 산정 필요하며 실제 응급 대응 가능성과 연결되는 지역 여건 요소(교통, 병원 등) 반영함

- (소방활동-화재) 단순 건수보다 화재 현장의 난이도, 진압 시간의 구성, 위험구조물 유형별 빈도 등 업무 부담의 질적 강도를 지표화함
- (소방활동-구조) 정량적 구조 실적에 더해, 고난도 구조 대응능력, 복합출동 및 계절성 위험 요인, 현장 난이도에 따른 부담을 반영함
- (소방활동-구급) 구급차당 평균 실적 외에, 환자 중증도, 자체처치 수준, 야간 이송 부담, 의료 접근성 차이 등을 반영하여 실제 업무 부담과 대응력 중심으로 개선
- (예방민원) 민원 난이도와 예방활동의 질 중심 종합 평가로 전환하며, 실제 업무부하·조정능력·사회 기여도 반영 강조

● 그룹별 세부 설계

• A그룹(수도권·고밀도 지역)

- 출동·민원량 많음 → 업무강도(거리, 피크시간, 협업난이도) 중심 세부지표 필요
- 등급 세분화(A-1, A-2) → 성과급·승진 연계 가능

• B그룹(도농복합 지역)

- 현장 다양성·예방행정 부담 큼 → 민원 난이도·복합재난 대응실적 반영
- 50:50 등급 세분화(B-1, B-2) → 도농 혼합 성격 반영, 평가 수용성 확보

• C그룹(외곽·농촌 지역)

- 고정적 물리 환경(출동시간·거리 등) 개선 어려움 → 단일 등급 유지가 합리적
- 면적·거리·재난이력 등 보정계수 적용 → 형평성 확보, 실근무 인력 보정 필요성 강조

4-8

사·도 지역본부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주제어 지역본부 | 자치단체 간 협력 | 협력사업

연구책임 최정우 • 연구진 이서희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본부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 지역본부 간 협력은 비물적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하였으며,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규제 개선 및 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중심으로 발굴함
 - 협력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지역과의 연계성, 공동사업 부합성, 성과창출 용이성 등의 기준 활용
- 지역본부 간 수행 기능을 고려하여 관광, 어촌·수산업, 해양·항만, 수소산업, 행정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해 10개 협력사업, 27개 세부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15개 세부사업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27개 세부사업 중 13개 세부사업은 정책건의 및 지방규제 제도 개선 등에서 발굴하지 않고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신규 사업이며, 신규사업 발굴은 한표한 외(2002)에서 제시한 비물리적 협력사업의 내용 및 타 지자체의 연계·협력 사업, 지역본부의 현안 등을 고려하여 제시함
- 발굴된 협력사업 중 행정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연계되어 있으나 관광, 어촌·수산업, 수소산업, 해양·항만과 관련된 사업은 일부 지자체의 지역본부에서 수행하지 않는 기능이므로 해당 사업들은 행정관리 사업에 비해 추진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 추진방안

- 지역본부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협력 추진 시 동시에 참여하여 지역본부 간 협력의 당위성 및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민원편의 제고, 근무여건 개선 등 행정관리분야의 사업과 행정절차 완화 중심의 협력사업 등 단계적으로 성과 창출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협력과제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유관 전문가, 산하기관, 주민대표, 의회, 본청 지원부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특정 지역에 대한 정책 타당성 확보,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영동·남부권 도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 미래산업 기반 구축, 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지역본부를 운영함
- 다만 지역본부 설치 후에도 지역 내 균형발전 및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본부의 성과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타 광역지자체 지역본부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지역본부 간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별 수행 사무, 당면과제 등을 분석하여 지역본부별 유사성을 바탕으로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지역본부 운영 현황 분석

- 지역본부는 시·도가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함
- 지역본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도청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함
- 지역본부 설치 이후에도 지역본부의 수행 기능, 근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본청과 지역본부 간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지역본부 설치 목적 달성인 지역 내 균형발전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본부설치 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기능 수행을 통한 지역 특성과 지역본부 수행 기능간 연계 강화가 필요함

● 지역본부 협력사업 도출

- 타 지역의 동시 참여를 지향할 수 있는 민원 행정 강화 및 업무 여건 개선, 비물적 협력 중심의 유관사무 협력 추진,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 등을 고려하여 5개 분야 27개 협력사업을 발굴함
 - 수상레저 기반조성, 소규모 관광인프라 구축, 귀어인 지원, 해양환경관리 공동 대응, 항만관리의 중앙정부 지원 강화, 수소산업 기업 지원 및 활용 확대, 민원서비스 접근성 개선, 업무 효율성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의 과제를 발굴함
 - 발굴된 협력사업 중 행정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연계되어 있으나 관광, 어촌·수산업, 수소산업, 해양·항만과 관련된 사업은 일부 지자체의 지역본부에서 수행하지 않는 기능이므로 해당 사업들은 행정관리 사업에 비해 추진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4-9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주제어 감정노동 | 감정노동자 보호 |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

연구책임 김건위 • 연구진 안지선, 추병주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충청북도의 감정노동자 정책수요 및 대응 방안

- 2023년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 충청북도 감정노동자들은 법적 보호 강화, 심리상담 지원 확대, 사업주 인식 개선, 고객 대상 홍보 강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예방-보호-사후지원의 단계별 접근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을 선도모델로 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감정노동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과업 추진

- 감정노동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 지원과 법률상담 지원 등 권리구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충청북도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 및 시군 협력체계 구축

- 도는 정책수립·총괄 조정, 시군 지원·평가 등을, 시군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현장 밀착형 지원 등 역할 및 책임의 부여가 필요함
- 연 1회 감정노동자 보호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도와 시군이 협력적으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성해야 함(시군별 담당자 지정, 분기별 담당자 회의, 정기교육 등)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감정노동 위험성 인식 및 노동자의 정서적 복지요구 증가

-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며 고객 응대 업무가 보편화됨에 따라 감정노동의 강도가 센 직종의 노동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감정노동에 따른 정서적 복지요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음

●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충북 감정노동자 정책 대응 필요

- 지역사회 차원의 노동안전 및 노동자 권익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확대되어 충청북도 차원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

III 주요내용

● 감정노동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

- 감정노동은 Hochschild(1983)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노동 행위를 발견하며 제안된 개념임
- 1990년대 서비스업 확대로 감정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실제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개념이 확장되고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들어 각종 사건·사고가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법·제도적 지원이 등장함
- 우리나라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 보호 규정이 신설된 이후, 다양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2016년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감정노동 현황 및 정책 사례

- 2023년 충청북도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감정노동자 일반현황, 노동환경 실태, 권익침해 및 구제 사례 등을 파악하였고, 이후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6년 서울특별시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이후 다양한 자치단체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안)

- 충청북도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함

비전	감정을 존중받는 일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충청북도			
핵심 목표	권리 기반 강화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현장 중심 실천 강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	제도화 및 권리보장 체계 정비 [단기] 권리보장 모범기준 제정 및 기관 권고 공공기관 사용자 대상 보호 매뉴얼 보급 및 교육 의무화 [중기]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및 공표	직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단기] 고객응대 공간에 안내문 설치 지원 [중기] 통화녹음 CCTV 등 물리적 보호수단 확산 [장기]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교육 및 관리자 평가 반영	심리회복·고위험군 맞춤형 지원 확대 [단기]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진단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직종(돌봄·상담 등) 집중 지원 [중기]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협력 및 지역사회 환산 체계 마련 [단기] 인권교육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캠페인 운영 [중기] 감정노동자 보호 민관협의체 구성 [장기] 정기 실태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보호계획) 제7조(모범기준)	제4조(권리준중) 제9조(상담 및 보호조치) 제8조(인권보장 교육)	제9조(상담 및 보호조치) 제10조(지원센터) 제11조(사업비 지원)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실태조사) 제8조(인권보장 교육)
	조례 조문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보호계획) 제7조(모범기준)	제4조(권리준중) 제9조(상담 및 보호조치) 제8조(인권보장 교육)	제9조(상담 및 보호조치) 제10조(지원센터) 제11조(사업비 지원)

4-10

충남소방 현장활동 업무량 기반 성과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주제어 소방서 | 종합평가 | 성과관리

연구책임 박해육 • 연구진 이경은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소방서 종합평가의 개선 및 관리 방안

- 소방서 종합평가에 관한 개선방안 모색은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 관점으로 구분할수 있음. 단기적 관점은 종합평가의 제도적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반면, 중장기적 관점은 소방서에 대한 종합평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문제점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소방서 종합평가에 대한 개선 및 관리 방안을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종합평가에 관한 규정 마련 및 평가의 목적 명확화, 평가대상 시책과 평가지표 간의 연계성 강화, 평가지표의 적합성 및 요건 강화, 평가지표 명확화 및 지표별 배점 부여, 현장출동에 관한 평가지표 추가 발굴, 객관적인 점수 산정 방법 활용 등을 들 수 있음
 -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평가결과의 공개 및 피드백 강화, 종합평가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안전센터 인력의 재배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안전센터 통·폐합 및 재배치 등을 들 수 있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소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종합평가제도 개선

- 소방서 평가계획에 의한 평가항목을 운영 중이나 현장활동 대응부서에 적합한 평가지표가 없어 현재 평가체계는 재난 관련 활동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에는 비위행위, 자격취득, 정책이행도에 중점을 둔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난수요, 현장활동 횟수, 시간 등 현장대응 실적 등은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 하에서 충남소방본부 직속기관(소방서)에 대한 종합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특히, 현장활동 횟수, 시간 등 현장대응 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과기반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소방서 종합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매년 실시되는 소방서 평가는 기본과제 수행 및 정책평가를 통해 소방서별 대응 역량 강화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서에 대한 종합평가임
 - 충남소방본부의 소방서 종합평가는 관내 16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각각의 소방서가 1년 동안 추진한 실적을 평가함
- 평가 분야는 기본과제 1, 기본과제 2 및 정책평가로 구분되며, 분야별 지표 개수는 각각 2개, 4개, 5개로 구성되어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가점 지표가 추가되고 있음
- 소방청 종합평가에 제시된 피평가기관별 평가지표의 수를 살펴보면, 7개 분야 43개 지표 중 충남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는 10.5개이며, 16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는 19개이고,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는 13.5개임
- 소방서 종합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평가의 목적 불명확, 평가 관련 근거 규정 부재, 평가대상 시책과 평가지표 간의 연계성 파악 어려움, 평가지표의 적합성 요건 미충족, 현장활동 관련 평가지표 부재로 소방서의 활동실적 미반영, 평가지표의 복잡성으로 인한 성과 향상에 필요한 정보 미제공, 순위 기반 점수 부여 방식으로 평가 왜곡 발생 및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소방 현장활동 성과측정을 위한 다양한 분석방법 활용

• 소방 현장활동 성과측정을 위한 분석을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충남지역 소방서의 운영 실태를 다각도로 진단하기 위해, 출동 관련 활동의 기초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함
- 둘째, 충남 소방서 산하 센터를 대상으로 관할 인구수 및 관할 면적이라는 대표적 외부 환경 요인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함
- 셋째, 충남 소방서 산하 센터들의 상대적 운영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수행함

4-11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교통서비스 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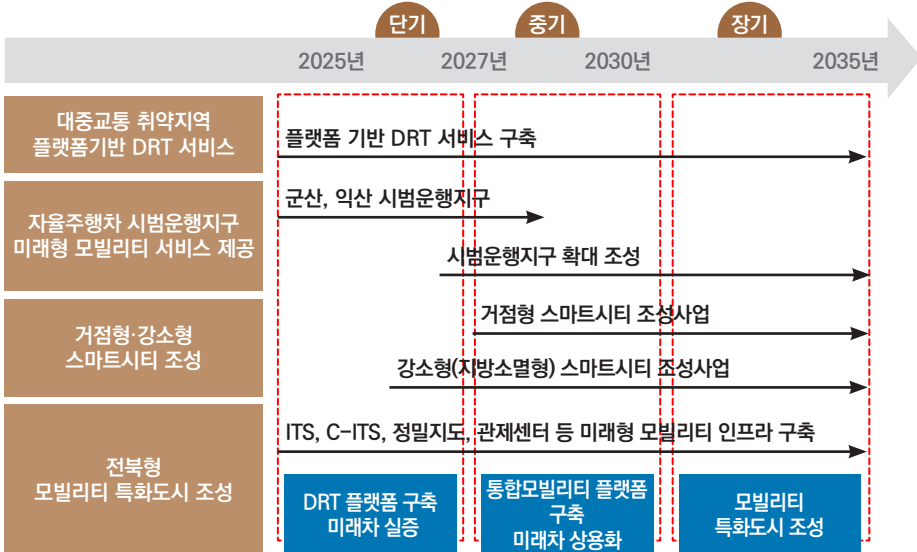
주제어 DRT | 첨단모빌리티 | 자율주행버스 | 공공교통서비스

연구책임 박진경 • 연구진 이원도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특별자치도 미래형 공공교통서비스 확보 추진방향 및 전략, 추진체계 제언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모빌리티(Mobility) 패러다임 전환, 중장기적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트렌드를 반영한 공공교통서비스 혁신 모색
 - 전북형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단기적으로 민간협업 플랫폼 기반 DRT 서비스 운영, 민간협업 플랫폼 기반 DRT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확대 및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상용화, 지방소멸형 스마트시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연계



- 대중교통이용의 효율성 확보 및 재정지원금 감축을 위해 전북형 DRT 플랫폼 구축방안(제1안)과 민간 플랫폼 활용방안(제2안) 제안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소멸 및 고령화 문제로 대중교통 수요는 감소, 버스운영 보조금은 매년 증가

- 지방 도농복합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 및 고령화 문제 심각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교통소외지역 및 벽지노선의 운전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
- 도시 규모는 작지 않아서 장거리 노선이 많고, 대중교통 이용인구는 오히려 감소
 - 배차간격 증대, 노선 감소 등으로 서비스질은 떨어지고, 버스회사 수익성 확보는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 반영 공공교통서비스 혁신 필요

-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전북 차원에서도 미래형 모빌리티 트렌드를 반영하여 교통서비스 혁신방안 마련 필요
 - 전북형 DRT(행복콜버스)는 정읍시와 완주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하고는 있으나 전화 콜방식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해서 다소 한계
 - 2025년 현재 경기도 톡버스, 청주콜 버스, 세종 이음버스 등 플랫폼 기반의 DRT를 운행 사례 벤치마킹 필요

III 주요내용

● 첨단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동향

- 첨단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이 2023년 제정되었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 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022.9),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2019.10)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중앙부처의 첨단 모빌리티 관련 정책 및 사업
 -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거점·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자율주행 리빙랩 구축사업(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경찰청) 등

● 첨단 모빌리티 기술동향 및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사례 분석

-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등 자율주행 기술은 대규모 상용화가 2030년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미흡하나, 부처별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 중
 - McKinsey & Company(2024)에서는 예상 자율주행 도입 시기를 ‘고속도로 레벨4 자율주행’은 2027년에서 2028년, ‘도심 레벨4 자율주행’은 2029년에서 2030년, ‘호출기반 레벨4/레벨 5 자율주행’은 2029년에서 2030년, ‘레벨 4 로보택시’의 대규모 상용화는 2030년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모빌리티 혁신법과 자율주행 자동차법 제정으로 현 제도상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실증이 가능하고, 유상운송특례를 통해 요금부과도 가능
 - '23년 이전 지정된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총 24개 지구로 이들 시범운행지구에 61개의 계획 서비스 중 43개가 실제 운영 중임

● 전북특별자치도 DRT 운행실태 및 플랫폼 기반 DRT 도입사례 분석

- 전북은 2015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국내 최초로 DRT(행복콜서비스) 추진
 - 초기 모형으로 콜센터 기반 사전예약제 방식이어서 체계적인 배차시스템 및 운영요금 전산화는 미흡하고, 기술기반 수요응답형 모형이라 볼 수는 없음
- 현재 경기도는 플랫폼 기반의 DRT(경기톡버스)를 도입하여 신도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노선버스의 효율화 도모 및 버스 재정지원 절감을 도모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의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맞춤형 플랫폼 기반 DRT 운영모형을 구축하였음

4-12

「제주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도시 조성」 추진 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연구책임 이원도 • 연구진 유자영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제주 글로벌 워케이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 신산업인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활성화

- 제주는 청년인구 부족과 외국인 방문객 감소해결을 위해 신산업인 워케이션에 주목하고 있음
-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인프라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로컬 및 글로벌 워케이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먼저 총괄센터 수립이 필요하며, 여기서 제주형 워케이션 모형개발과 정착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선 민간 협업체계 마련과 “주민참여형” 워케이션 지향을 위한 유희시설 재활용, 디지털노마드족 창업지원을 단계별 추진과제로 제안하였음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관광이 주도하는 제주 지역경제

• 제주 농어업 종사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음

- 내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소폭 회복에 그치고 있음

• 인구감소시대, 제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 외국인 증가와 중장년층 인구유입으로 지역 인구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년인구의 비중은 '15년 19%에서 '24년 17%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워케이션”의 등장 및 확산

• 지자체 주도 제주 워케이션 활성화

- 신규 여행수요에 대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와 새로운 지역관광 스타일로서 워케이션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고 있음
-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선 장기체류에 적합한 숙소와 (공용) 원격근무 인프라 조성이 필수임
- 지자체 주도 워케이션 활성화는 지원금 제공에서 더욱 차별화된 전략과 체험기회 제공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함

III 주요내용

● 제주 워케이션 운영 현황

• 공공형 워케이션

- '21년 아일랜드 워크랩 서귀포 운영을 시작으로, 공공형 거점 오피스를 제주, 서귀포, 그리고 최근 함덕에서 운영하고 있음

• 민간형 워케이션

- 제주 워케이션을 희망하는 참가자에게 지원금(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일 4시간 이상 근무와 프로그램 체험 내역을 정산서류로 제출해야 함

•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 마을공동체가 유희공간을 재활용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형태이며, 현재 5개소(감녕어촌, 사계어촌, 김녕 어울림센터, 화순 워케이션 빌리지, 대정 촌-피스)가 운영 중

● 제주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

- 워케이션(일+휴식)과 런케이션(학습+휴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또한, 공공워케이션시설(거점 오피스 및 워케이션 허브센터 설립) 설치·운영 근거를 제시

● 워케이션 사업체 인터뷰

• 제주 워케이션의 차별성

- 주로 업무보다 휴가를 목적으로 방문하며, 소규모 팀이나 부서 전체가 참여하면 변화된 근무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업무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선 기업이 일부 비용을 전담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명확한 효용과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함

• 지역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 기업 유치 및 기업과 마을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및 신산업 발굴 기획이 중요하며, 여기서 제주가 지닌 특성과 매력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산업 경험과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인재 유입과 이들의 지역주민과의 교류·협업은 향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어업 특화 등 지역산업 성장을 통한 “주민참여형” 워케이션 정착에 필요한 전제조건임



자체연구



1 2026 지방행정 트렌드

2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

3 지방주도·현장중심 지방행정혁신전략

4 지방재정 30년 평가를 통한 주민중심 지방재정 전략

5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

5-1

우수과제

2026 지방행정 트렌드



주제어 지방행정 | 트렌드 | 지속가능발전

연구책임 유수동 • 연구진 주희진, 유자영, 유보람, 양원탁, 문혜리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의 자치분권 강화

-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미래상: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
 - 주민중심: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와 삶의 요구 반영
 - 지방주도: 지방이 스스로의 방향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행정적·재정적 자율성 확보
 - 현장중시: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
- 2026 지방행정 트렌드: 지방행정 패러다임 전환 요구
 - 앞으로 지방행정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 의제들을 보여주며, 지방행정이 곧 직면할 민선9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함
 - 미래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는 나침반이자 실행 로드맵으로 가능하며, 무엇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행정에는 어떤 변화가 다가올 것인가?

- 지금 지방행정은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음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화, 그리고 지역 간 격차와 사회적·정치적 갈등은 정책적 과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음

II

연구보고서

- 이러한 격변의 흐름 속에서 2026년 지방행정은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격변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임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해이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제도적 틀과 권한을 넓혀 왔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더 나은 정책혁신을 체험할 수 있는 지방행정이 되어야 함
 - 지방행정의 어제와 오늘을 넘어, 내일을 내다보는 트렌드 분석 연구는 지방행정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의 행정서비스와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

III 주요내용

● 2026 지방행정 트렌드

• 내용구성

- 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징후를 포착하고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제기함
- 지방행정 트렌드가 등장하게 된 구체적 배경과 원인을 분석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현주소를 진단함
-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전망하며 2026 지방행정 트렌드를 제시함
-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함

● 트렌드1. 주민참여의 진화, 주민이 주인이 되다: 지방을 움직이는 힘!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의 실현 본격화

- 주민자치회는 지방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될 것임

● 트렌드2.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기준, 생활인구에 기반한 지방주도 활력 증진!

• 생활인구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방이 주도하는 맞춤형 인구활력 증진

- 생활인구 개념은 행정과 정책 현장에 깊이 뿌리내려 실효성 높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임

● 트렌드3. 청년의 삶을 바꾸는 종합지원, 지속가능한 지역을 여는 길

● 잠시 멈춤도 삶의 일부가 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설계

-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지역의 주요 정책대상이자 사업분야로 고려하기 시작함에 따라 청년 정책은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음

● 트렌드4. 지역균형성장의 새로운 전략, 지역과 주민이 완성하는 에너지대전환

●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체감하며, 중앙이 지원하는 에너지대전환

- 지방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고, 주민은 에너지 전환의 수혜자이자 참여자로서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에너지 대전환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정착할 것임

● 트렌드5. 진정한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지다: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실현을 통해

● 자치분권 기반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 지방이 주도할 때 비로소, 초광역 협력이 현실이 될 것임

● 트렌드6. 지방의 미래를 여는 힘: 맞춤형 재정분권 실현

●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재정분권 실현

- 사무 중심 분권에서 재정 중심 분권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 강화될 것임

● 트렌드7. 현금보다 강한 유효수단: 소비 확대에서 재정 확충까지, 지역화폐의 선순환 전략

● 지역화폐의 정책효과 검증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제도 설계

-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강화하게 될 것임

● 트렌드8. 공공 알고리즘 검증시대: AI 행정의 그림자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책무성

● AI 행정의 도입과 확산에서 공공성·투명성·책임성의 확보

- 지방행정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혁신과제로 자리 잡고, 안전망을 강화하게 될 것임

● 트렌드9. 의정활동의 AI 메이트 시대: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

•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과 신뢰할 수 있는 AI 의정활동의 확산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AI가 깊숙이 스며들고 있으며, 동료이자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임

● 트렌드10. 광역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 지방이 책임지는 주민안전과 민생치안

• 자치경찰제,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새로운 도전

- 광역 중심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주민 밀착형 자치치안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임

5-2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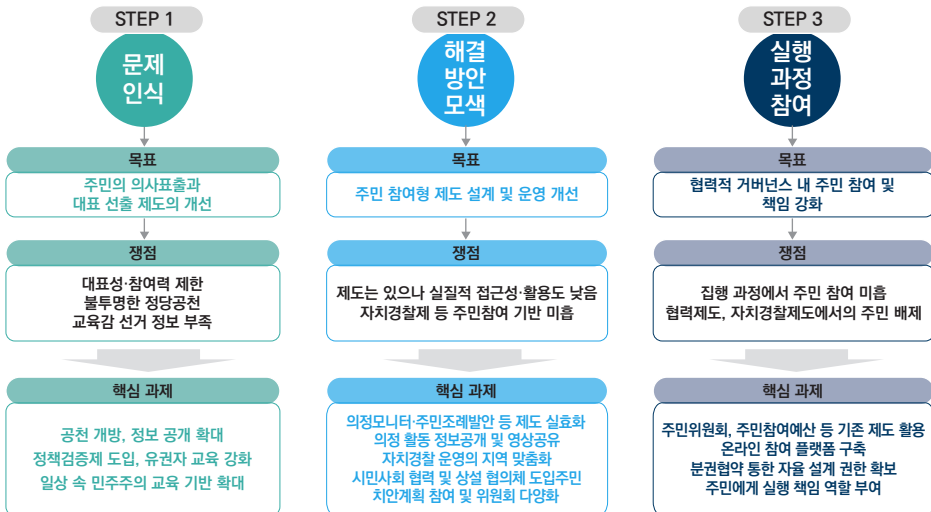


주제어 주민참여 | 지방선거 | 지방의회

연구책임 김필 • 연구진 김건위, 전대욱, 주희진, 안지선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선거제도는 정당공천제 투명화, 교육감 선거 보완, 자치역량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주권의 실현을 도모할 것을 제안함
- 지방의회는 인지도-활용도-체감도-신뢰도를 높이는 4단계 전략으로 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강구할 것을 제안함
- 자치경찰제는 기초자치단체 권한 강화,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 주민참여 구조의 제도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함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분권협약, 주민참여 설계, 기존 제도 활용, 협력체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설계와 실증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제도적 내실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 핵심 제도의 주민중심성을 강화할 필요성 존재

-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제도의 실질적 운영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중심의 지방선거제도 개혁, 지방의회의 주민참여제도 내실화, 자치경찰제의 지역맞춤형 운영, 지자체 간 연계협력의 참여 기반 확대 등 제도별 과제를 도출하고,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III 주요내용

● 주민중심 지방선거제도

-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투명성 강화와 후보자 자격 기준 제도화, 공천 책임성 확보 등이 중요하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되 후보자 검증 강화와 같은 보완책이 요구됨
-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제도 전환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선호하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중심 지방의회제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민주적 기구지만,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주요 기능(대표·의결·감시)에 대한 수행 인식은 낮고, 청원제도·의정모니터 등 참여제도 역시 인지도와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지적됨
- 주민 인지도 향상, 제도 활용도 제고, 지방의정 체감도 증진, 신뢰도 회복으로 이어지는 4단계 발전모형을 통해 실질적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의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주민중심 자치경찰제도

-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구조로 인해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은 자치경찰 권한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화모델 개발과 함께,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주민중심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

-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은 지역 불균형과 행정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기관 주도 구조와 낮은 주민 인지도로 인해 주민 참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협력 유형별 맞춤형 주민참여 전략, 정보공개 및 피드백 체계 강화, 주민대표 참여 기반 추진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주민중심 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5-3

지방주도·현장중심
지방행정혁신전략

주제어 지방주도 | 현장중심 | 지방행정혁신전략

연구책임 이경은 · 연구진 강영주, 김지수, 최지민, 이재용, 유자영, 김수동, 박해육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주도·현장중심 지방행정혁신의 중요성

-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발전은 제도적 기반 확립과 자치역량 제고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인 공공가치 실현은 부족했으며, 향후 10년은 효율성 중심의 행정 운영을 넘어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구현하는 ‘가치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함
-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지방행정혁신전략은 지방주도·현장 중심의 관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음

● 지방주도·현장중심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연구 결과, 지방주도·현장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공공가치 중심의 정책 설계, 제도적 기반 구축, 실행 자원 확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주민 참여 강화, 기술 기반 행정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지방행정혁신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 형평성, 민주성, 협력성, 투명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가치는 상호보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 지방행정혁신의 장기적인 효과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기반과 재정 지원 체계,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명확한 실행 로드맵, 조직 구조 정비, 전문 인력 양성,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 실행 자원이 체계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각 혁신 전략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역량에 맞춘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지방행정혁신은 국가-지방, 광역-기초, 정부-민간 등 다주체 협업 기반의 정책 설계와 협업 메커니즘 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모든 전략은 주민 참여 기반 거버넌스를 전제로 하며, 특히 제도적 구조 변화와 운영 방식 혁신에는 주민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지방행정혁신에 필수적이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정책 설계,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현대 사회는 복합적인 정책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행정혁신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운영 효율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체계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가치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 도입이 요구됨
 - 이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이며,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 포용성, 책임성 등 다양한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서의 혁신임
- 지방행정혁신의 주체인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 주체로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고유한 문제와 사회적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특히,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 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맞춤형 대응이 필요함
- 또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는 상호 연관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
 - 이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해결책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수립함을 의미함

● 본 연구의 목적 및 추진 방향

- 본 연구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운영적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현장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지방주도·현장 중심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제도적 구조의 혁신’과 ‘운영 방식의 혁신’이라는 지방행정혁신 유형별로 두 가지 핵심 세부 전략을 설정하여, 총 4개의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제도적 구조 혁신으로는 ‘광역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수립’을, 운영 방식의 혁신으로는 ‘재난관리체계 혁신’과 ‘스마트지방행정 활성화’를 선정하였음

III 주요내용

● 지방주도의 광역행정통합 전략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광역행정통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광역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도에는 한계가 있어, 행정구역 변경이나 제도 구조 개편을 수반하는 광역행정통합이 구조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광역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공공가치 실현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혁신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지방주도의 통합모델 정립이 필요함

• 지방 주도의 광역행정통합 전략 제언

- 광역행정통합은 협력성,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책임성 등 공공가치 실현을 중심에 두어야 함을 명확히 선언하고, 진정한 ‘지방주도·주민중심’ 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구상하고, 주민이 체감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며, 안정적인 절차와 주민 공감대 위에서 실현 가능함을 강조해야 함
-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절차·기능·권한·주민 참여 등을 포괄하는 법제화와 지역 특성 및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결합해야 함
- 행정계층 재설계와 기능 재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 관리, 주민투표 재 실시 제한 등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합자치단체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함

- 통합 추진 전에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경험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슬로우 스타터’ 전략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실익 중심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지방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전략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과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방 재정의 열악화 등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행정구역을 초월하고,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음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광역적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방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전략 제언

- 기초자치단체 간 공동 행정수행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사무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기반 사무를 확대하며,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공동 논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 공동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로서 제도 본래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운영되어야 하며,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과 협력 강화를 위해 예산관리, 감사, 분쟁조정 등의 기반을 포함한 ‘(가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점진적 사무 확대 및 광역의 기초형 연합 구성 촉진 역할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 교부세 포함, 광역협력계정 신설 등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 확대가 필요하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 평가를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는 피드백 체계와 순환적 관리 구조가 필요함

● 지역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혁신 전략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위기, 초고령화 사회 진입, 도시화, 팬데믹 등으로 재난이 일상화되고 복합화되고 있으나, 기존의 중앙집중형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별 위험요인과 대응 역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지역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지역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혁신 전략 제언

-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 회복력 평가 체계 구축, 예방 투자 확대, 마을 단위 자율방재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기반 신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핵심 인프라의 내구성 향상과 자연기반 그린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물리적·환경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함
-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 예산 관리와 원스톱 재난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복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공론화를 제도화하는 증거기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재난관리 체계와 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함
- 협력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정립하고, 민간·학계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 대응 권한과 조직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함

8 지방주도의 스마트지방행정 활성화 전략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행정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 맞춤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구축이 필수적임
- 현재 스마트지방행정은 중앙정부 주도과 기술 중심의 사업 단위 분절 운영으로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스마트지방행정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AI 행정을 중심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함

• 지방주도의 스마트지방행정 활성화 전략 제언

- 스마트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주민중심의 협력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AI와 RPA 기반의 행정 고도화로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
-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 참여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며, 지역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야 함
- AI 기반의 도시·생활·안전 서비스 도입과 공간정보 기반 행정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고, AR/VR을 활용한 민원 안내를 통해 형평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함

5-4

지방재정 30년 평가를 통한
주민중심 지방재정 전략

주제어 지방재정제도 | 지방재정전략 | 지방재정 평가

연구책임 전성만 • 연구진 조기현, 김성주, 이서희, 유보람, 전영준, 최정우, 황해동, 신두섭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주민중심의 단계별 지방재정 전략

- 단기전략과제: 주민다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균등한 재정지원 확대
 - (지방교육재정 전출금 개선) 지자체-교육 연계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방교육격차 완화
 - …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출금 사용 확대
 - … (내용)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출금 50%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율사업으로 확보
 - … (기대효과) 수도권-비수도권 지자체의 교육재정격차 완화 및 주민의 평생학습사업 지원
 - … (관련 법 조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보통교부세 개선) 보통교부세 규모 확대로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형평기능 강화
 - … (대상)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 확대(~ 내국세의 25%)
 - … (내용) 낙후지역 등 특정지역 수요보강 및 기준재정수입 차등산입률 적용
 - … (기대효과)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의 재정격차 완화
 - … (관련 법 조항)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7조, 제8조 개정
 -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국민의 자발적 기부에 기초한 수도권-비수도권 지방재정 격차 완화
 - … (대상) 고향사랑기부금 대상 및 규모 확대
 - … (내용) 법인기부제 도입 및 기부금 세제 감면 확대
 - … (기대효과) 수도권-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격차 완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
 - … (관련 법 조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개정

• **중기전략과제: 중앙-지방 재정협력으로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

- (국고보조사업 개선) 지역주민의 수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내실화
 - … (대상) 국고보조금 사업
 - … (내용) 지역화폐와 연계한 포괄보조금제 도입 및 성과협약제도 관리
 - … (기대효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 강화
 - … (관련법 조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관리제도 책임운영) 주민(지방의회)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한 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 … (대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자율성 공시 유도
 - … (내용)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의 내실화/ 주민 이해도 높은 재정공시 내용으로 재정정보 공개
 - …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대에 따른 주민 대상의 재정책임성 강화
 - … (관련법 조항)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 제46조) 개정, 동법 제60조 개정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확대
 - … (위상강화) 행안부 장관 소속 -> 분위원회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 (행정안전부)로 분리
 - … (역할 확대) 재정부담심의 및 재정위기 관리 ->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및 재정관리 역할
 - … (기대효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따른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확립
 - … (관련 법 조항)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 **장기전략과제: 조세 자율성 확대를 통한 주민중심의 재정민주화 실현**

- (지방세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및 세원확대
 - … (신세원 발굴) 지방환경세(탄소중립세), A로봇세, 빈집세, 숙박세 등
 - … (세원확대) 법정외세 도입, 지방소비세의 독립세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감면제도 운영
 - … (기대효과) 지방세 세입 확대(국세:지방세=6:4)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및 자체사업 확대
 - … (관련 법 조항) 「헌법」 제59조(“지방자치 재정권”) 개정, 「지방재정법」 제2절 과세권 개정
- (납세자권리보호기능 강화) 재정민주주의 실현
 - … (목적) 납세자에 의한 재정의 민주적 통제절차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보장
 - … (대상) 주민소송제도 활성화와 지방세납세자 보호직 신설
 - … (내용①) 주민소송제도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제도 실효화

- … (내용②)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납세자보호”직 신설
(기대효과) 주민들의 납세의식과 권리 증진으로 재정의 주민자치 실현
(관련 법 조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147조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지방재정분권 정책 실시에도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 심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혁신 필요
- (연구목적) 주민에 대한 책임 재정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재정제도운용 전략 마련
 - 주민중심을 위한 미래지향적 지방재정발전 전략 제언
 - 지방재정 30년 성과를 분석하고 지방재정제도의 가치 기준을 설정
 - 지방재정 전문가 설문을 통해 향후 지방재정제도 방향성을 제시
 - 주요 지방재정분야에 따른 단계별 지방재정전략 제언

III 주요내용

- 지방재정 30년 성과평가
 - 지방재정 총량 변화
 -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세입 총량은 20배 성장
 - 지방세입 구조 변화
 - 2000년 초기까지 지방세는 소위 “2할 자치”였으나, '22년 43.6%로 증가
 - 지방세의 위상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전재원 의존도가 '00년의 37.7%에서 '22년 43.6%로 증가
 - 이전재원의 높은 의존도, 보조금의 팽창은 지방세출의 자연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지방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지방세출 구조변화

-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팽창과 이로 인하여 파생된 다른 세출 부문의 위축에 있음.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비중은 하락하여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여력이 감퇴
- 지역경제 진흥과 밀접한 산업 및 중소기업의 세출 비중은 다소 높아짐

● 주민중심 지방재정제도 전략

• (지방세)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전략

-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개정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
첫째,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의 조항을 수정
- 지방세 세원(세수) 확충전략: 세원 공동이용방식의 활성화
... 지방소비세를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현행 25.3%의 세율을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검토
... 국세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15% 등으로 높이는 방안 검토
- 지방세 세원(세수) 확충전략: 신세원 발굴 및 법정외세 도입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 간 공동세 방식의 환경세(지방환경세), 복지세(지방복지세),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

• (지방교육재정) 주민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 법정전출금 50%를 고등·평생교육·보육환경사업으로 확대
- 현행 지방세 수입의 일정률 보조에서 수비례보조방식으로 전환하여 교육지원청 사업 보조 확대
- 지방-교육 연계협력기구 설치를 통한 범부처 위원회 설립

• (보통교부세) 지역맞춤형 재정안정망 구축을 위한 보통교부세 개선 전략

- 낙후지역의 수요보강을 통한 재정형평기능 확대
-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19.24%~25%
- 재정형평기능 전담 교부세 설치
- 지방세수와 연계한 세수공유의 보통교부세 교부방안

• (국고보조금)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고보조금 운용 내실화 전략

-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을 통한 지자체의 사업운용의 자율성 확대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협약제도 운영

• (지방재정관리제도)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관리 운용 전략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통한 재정관리제도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성과 중심의 재정관리운영
-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등적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 … 중기재정계획수립 시 중기세입 검토제 운영하여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규제가 아닌 필요불급하지 않은 투자사업을 제3기관에서 배제함으로써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 … 지방채 발행의 경우 지방채발행한도액 기준 설정시 경상일반재원의 10%의 획일적 기준보다는 대도시 및 재정력이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보다 상향된 기준으로 설정, 지방채 총량제 도입 및 지방채 발행 범위에 따른 규정 개정(지방재정법 제11조)

5-5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



주제어 지방소멸 | 인구변화 | 균형발전 | 인구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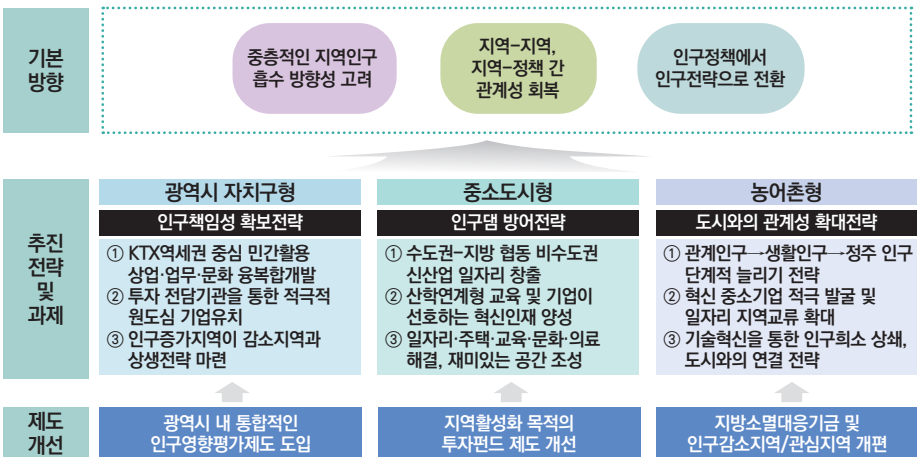
연구책임 박진경 • 연구진 이원도, 김민영, 양원탁, 김주락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 간 관계성을 고려한 공간위계별 맞춤형 지방소멸대응전략 제안

- 광역시 자치구형의 경우 인구책임성 확보전략을, 중소도시형의 경우에는 인구댐 방어전략을, 농어촌형의 경우에는 도시와의관계성 확대전략 제안
 - 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인구증가 자치구와 인구감소 자치구의 개발사업 조정을 위하여 인구정책 목적에 따라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구 불균형 시정 도모
 - 인구댐 확보를 위해 중소거점도시의 경우 지역활성화 목적의 투자펀드 제도를 개선하고, 펀드 방식으로 배당금이나 수익이 발생하면 이들 수익금은 인구감소지역에 환원하는 방식 채택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계별로 확대하여 지방의 인구흐름 전환에 사용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재지정시 개편 제안

인구감소시대 공간위계별 맞춤형 지방소멸대응전략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세계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절벽 위기

- 인구, 생산, 고용, 소득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
 - '90년대부터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 '21년 6월 구 균특법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고 세부적인 정책 지원을 시작했지만 '10년대 중반 이후 신기술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은 점차 더 확대되는 추세

● 보다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 모색 필요

- 인구감소지역 위주의 정책처방에서 벗어나 보다 큰 틀에서 지방소멸 정책처방 필요
 - 인구감소지역 위주의 정책 추진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각자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풀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III 주요내용

● 2000년 이후 시계열적 지자체 인구변화 실태분석 및 유형분류

- 전반적으로 인구감소 심화 및 자연감소 발생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
 - 2000년 대비 2016년에 91개(39.7%)가 총인구증가지역이었으나 2023년에는 70개(30.6%)에 불과하고, 지난 7년간 무려 21개의 지역이 감소했고, 총인구감소지역은 138개(60.3%)에서 159개(69.4%)로 증가
- 반전 가능성이 내포된 성장지역군 vs 인구감소 가속화가 우려되는 감소지역군
 -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주로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인 군지역들의 기회요인도 생겨남

●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인식조사

- 지방소멸대응정책은 지방 인구활력 제고에 87.6%가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77.4%가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인식
 -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 관련 지자체 공무원 인식조사(186부) 결과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지역유형별로 세부적인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전략은 다르게 인식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맞춤형 시급 전략은 상이하게 인식**

- 대도시는 원도심의 민간활용 융복합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및 마중물 투자 추진을, 중소도시의 인구담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자리·교육·의료·생활서비스 기능 강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공간위계별 인구증가지역의 심층사례 분석**

- **지역 간 관계성 측면에서 살펴본 대전 유성구의 인구증가와 정책적 한계**

-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정지역개발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사전분석하는 일종의 인구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개발 과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접근이 필요

- **지역 간 관계성 측면에서 살펴본 강원 원주시의 인구증가와 정책적 한계**

-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내 인구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거점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해 인구붕괴 가속화를 방지하는 한편, 인구담 지역으로의 인구편중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서비스 연계 강화 등 배후지역까지 나눌 수 있는 전략 설계 필요

- **지역 간 관계성 측면에서 살펴본 경북 칠곡군의 인구증가와 정책적 한계**

- 농어촌형의 경우, 도시와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간의 전략적 대응, 타지역과의 관계 접점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



지침연구

- 1 문화·체육시설 건립의 편익 추정을 위한 객단가 적용 방법론 연구
- 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가이드라인
- 3 R&D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II)
: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론 관련
- 4 의료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II)

6-1

문화체육시설 건립의 편익 추정을 위한 객단가 적용 방법론 연구



주제어 타당성조사 | 단위편익(객단가) | 경험재

연구책임 김상기 • 연구진 박용덕, 최성원, 이진우, 신영철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단위편익(객단가)” 개념 정립 및 표준 산정체계 제안함

- 문화·체육시설 타당성조사에서 ‘객단가’가 이용자당 사회경제적 단위편익 의미로 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무적 객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적절한 대리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
- 기존 방식(정책적 책정가격+추가 WTP 또는 유사 민간가격)은 일반재적 특성 중심의 편익 산정으로서, 경험재적 성격(체험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동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사회·경제적 편익을 과소추정할 우려가 있음을 제시
 - 경제적 객단가를 “공연 관람(또는 체육활동) 시간 비용+이동비용(이동경비+이동시간 비용)”으로 정의하고, 일반재적 이용요금 항목과 분리해 합산하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함
 - 여가(비업무) 시간가치 등 객관 자료를 활용해 시간비용을 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동경비는 차량운행비용 원단위(물가보정)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절차를 제시
- 재무적 개념에 가깝게 적용되어온 객단가 편익을 재정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의 경제성을 합리적으로 개량화 할수 있는 방안 제시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문화·체육시설 편익추정의 객관성·일관성 확보 필요성

- LIMAC은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사업 간 평가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부문별 지침 개발 필요성이 있음
- 기존에 편익 정의·수요추정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화폐가치로 환산 가능한 범위 및 단위편익(객단가) 연구는 부족함
- 기 수행 타당성조사에서 문화·체육시설 B/C 평균이 문예회관 0.19(13건), 도서관 0.39(7건), 체육시설 0.25(17건)로 낮고, 최댓값도 0.67(도서관)에 불과해 경제성 분석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단위편익(객단가) 산정의 부적절성이 편익 과소추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위편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III 주요내용

● 선행연구·사례 분석을 통해 객단가 적용의 한계

- PIMAC은 문화·체육시설에 CVM을 일관 적용하는 반면, LIMAC은 사용가치 중심(정책요금+추가 WTP 또는 민간가격)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PIMAC은 전국을 영향권으로 동일한 기준의 분석방식을 적용하나, LIMAC은 개별 지자체의 사업성격에 맞는 사용가치 위주의 편익을 적용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LIMAC 사례에서 관람·시설이용 편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사용가치(CVM)는 낮은 비중임

● 경험재 관점(체험 기반 가치)을 단위편익에 반영

- 공연·체육활동은 소비 전 품질/효용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 후 인식되는 경험재 특성이 강하므로, 시장가격·이용요금 중심 분석은 한계가 있음
 - 경험재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해당 재화의 효용을 판단하여 다시 구매한다는 의사 결정에 단순히 가격만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 시간과 이동시간등 해당 재화를 경험하기 위해 지불한 기회비용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경험재에 해당하는 공연관람 편익과 체육활동 편익의 단위 편익 산정은 티켓 가격만 포함되어서는 없으며, 경제적 객단가 개념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전체 비용을 최소 효용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객단가 산정의 구성요소·자료원·적용

• 공연관람 비용, 시간가치, 이동비용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 KOPIS 자료로 지역·규모·장르별 평균 티켓가격을 산정·활용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예시로 2024년 전국 문예회관 평균 티켓가격(39,520원)을 제시함
- 2024년 여가 통행시간가치(가중평균 14,953원/인)를 시간비용 산정에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함
- 차량운행비용 원단위(물가보정)와 비업무 통행시간가치 등을 이용해 이동비용(경비+시간)을 산정하도록 제시함
- 여행비용법의 변이성(모형 선택·변수 포함에 따른 결과 변동)을 고려하여, 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적 객단가 방식이 일관성 확보에 유리할 수 있음을 제시함

6-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가이드라인



주제어 타당성조사 | CVM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연구책임 송지영 • 연구진 이민기, 정연백, 이정희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LIMAC의 CVM 가이드라인 작성

- “CVM 대상 선정-설문지 및 보기가드 작성-사전조사-본조사-WTP추정-보고서 작성”에 맞춘 가이드라인 작성
 - CVM 설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중양분석택형 질문 방식을 선택하여 설문지를 구성함
 - 설문지는 가상시장을 구성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고, 그럴듯하며, 의미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 LIMAC은 CVM 설문 수행 시 설문업체를 통해 진행하므로 좋은 설문업체를 선정하고 명확한 과업지시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WTP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정보는 설문조사 시점의 모집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의 가구(인구)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가구수 적용시점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LIMAC 보고서 작성에 있어 일관성 확보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CVM의 높은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LIMAC은 현재 자체적인 CVM 가이드라인 없이 PIMAC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함에 따라 지방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 LIMAC CVM 조사설계 표준화방안 연구(김남주 외, 2019)의 연구에서는 총 5가지의 CVM 연구 단계 중에서 CVM 조사설계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CVM 총 5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가이드라인 구성 및 활용

- 실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CVM 적용을 위한 ‘CVM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CVM 연구단계와 단계별 수행 내용을 포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본 가이드라인은 특정 사업부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문과 상관없이 CVM을 적용하는 경우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부문별 지침과는 차이가 있음

III 주요내용

● CVM 적용 대상

- 조사대상 사업의 CVM 적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 의뢰사업의 특성, 의뢰사업(시설)의 영향권 및 대체재 유무, 제공되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 (비배제성 및 비 합성), 비사용가치의 종류 및 수준, 다른 편익추정 방법론의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함
 - 조사과제 착수보고에서는 쟁점사항에 CVM 적용 여부에 대해 상기 5개 기준을 고려하여 CVM 적용을 결정한 논거를 제시하도록 함

● CVM 조사 설계

- 특정 투자사업의 편익의 범위가 되는 영향권과 서비스 수혜 및 지불대상은 CVM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와 총편의 산정과 직접 연계되므로 설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타당성조사에서는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을 사용함

●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 설문은 해당 변화가 응답자에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답자들이 해당 시나리오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 시나리오가 이해 가능하고, 그럴듯하며, 의미 있게 느껴지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 평가 대상 투자사업의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이후 제공될 서비스를 응답자가 현실처럼 상상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장이 제시되어야 함

- 응답자들은 이에 대한 금전적 평가하기 때문에 가상시장 구성과 금전적 가치 추정 방식은 CVM의 핵심 요소이므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함

● 사전조사 및 본조사

- 사전조사 결과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연령/성별/기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할당별 기술통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 특정 표본을 제외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함
 - 필요시 사업시행주체에 요구하여 추가적인 시각자료 또는 운영계획의 구체화를 요구하여 해당 사항을 보기카드 및 설문지에 반영하여, 응답자 개인의 합리적인 선호 체계를 본조사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LIMAC은 CVM 설문 수행 시 설문업체를 통해 진행하므로 좋은 설문업체를 선정하고 명확한 과업지시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WTP 및 총편익 추정

- 설문의 결과에서 CV(문항서 주어진 제시금액에 따른 응답자의 '예/아니오'의 응답패턴을 검토하고 해당 설문이 경제학적 이론에 맞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 작성해야 함
- CVM을 통한 경제적 편익은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도출된 WTP와 가구수를 적용하여 산정
- WTP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정보는 설문조사 시점의 모집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의 가구(인구)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가구수 적용시점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보고서 작성

-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각 연구진이 동일한 양식에 맞춰 WTP 추정 및 산정과정을 제시할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6-3

R&D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II) :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론 관련



주제어 연구개발 | 수요추정 방법론 |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책임 김지훈 · 연구진 김도영, 허은진, 전승훈, 이주석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 R&D 사업의 고유한 특성과 목표를 반영한 수요 및 편익 분석 방법론의 필요성
 - 국가 R&D와 지방 R&D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기존 국가 R&D 분석 방법론 적용의 한계를 검토하고 지방 특성에 부합하는 수요 및 편익 분석 방법론을 제시함
 - 복잡한 지방 R&D 사업의 편익분석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분석방법론을 정립함
 - 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논리모형 활용 방안 및 연구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방안을 함께 제시함
- 지방 R&D 사업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분석 절차와 분석프레임을 제공함
 - 지방 R&D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고, 지방 R&D 사업의 유형별 분석 프로세스를 제시함
 - 사업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수요 범위 산정기준과 편익 분석 방법론(시장수요접근법, 조건부 가치측정법, 인적자본접근법 등)을 제시하여, 타당성 조사 담당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함
 - 기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사회적 수익률 및 지역 내 산업 활성화 효과를 편익 추정에 포함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타당성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방 특성을 고려한 분석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됨
- 국가 R&D 중심의 현행 평가체계는 지방 R&D 사업의 다면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님
 - 이로 인해 잠재력 있는 지역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비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 R&D 사업의 고유한 특성과 목표를 반영한 분석 지침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는 한정된 지방재정이 R&D 사업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효율적으로 투자·평가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지방 R&D의 핵심 목표인 ‘지역발전 기여’ 관점에서, 사업의 수요와 편익이 합리적으로 추정·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III 주요내용

- 문헌 연구 및 국내외 지침/사례 분석
 -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술 문헌, 연구보고서, 정부 간행물 등을 추가 조사함
 - 본 연구와 관련된 핵심 경제학 이론을 검토하고, 국내 타당성 조사 기관의 공식 지침 및 실제 조사 보고서를 분석함
 - 해외 주요국의 R&D 사업 평가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본 지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방안 제시
 - ‘연구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며,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과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방안 제시
 - R&D 사업을 위한 표준 논리모형(Logical Model)구조를 수립하여 지방 R&D 사업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의 체계를 검토

● 경제학 이론을 기반한 수요 및 편익 분석 모형 정립

- 경제학 이론을 토대로 본 지침 연구의 핵심 방법론 및 제안 사항을 구체적인 분석 모형과 함께 제시함

● 지방 R&D 사업의 분석 가이드 라인 제시

- R&D 부문 타당성 조사의 단계별 수행 방법을 제시하여, 사업 준비부터 종합평가까지의 분석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성함
- 사업 유형별 수요 범위 산정 기준과 편익 산정 절차, 그리고 분석 방법론 선정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제시함

6-4

의료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II)



주제어 타당성조사 | 의료부문 B/C분석 | 의료부문 기술적검토

연구책임 송지영 · 연구진 정연백, 박소연, 조현민

I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정부 특수성과 의료부문 재정투자사업 차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의료부문 타당성조사 지침 발간

- LIMAC은 일반지침과 4개의 부문 지침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요 및 편익,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정책적 분석 특히 운영수지 분석 등 일반 재정투자사업과 상이한 의료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을 별도 발간하여 증가하고 있는 의료부문 타당성조사에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 지역의 의료수요에 기반한 의료시설 규모, 병상이 기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 시 기능구성비율(진료, 병동, 지원부)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 경제성 분석 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의료수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공·사 의료기관 선택과 무관하게 동일금액을 지불하며, 질병 발생이 의료공급과 직결되지 않아 일반투자사업처럼 소비증가를 통한 소비자 잉여를 측정하는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공급이 발생시킬 수 있는 대체효과 추정이 핵심임
 - 수요·편익 산정 시 진료권 설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사 착수 시 진료권에 대한 합리적 검토 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편익의 경우 기능(응급, 재활, 감염병, 간호간병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기능별 편익추정을 실시해야 함
 - LIMAC 타당성조사에서만 실시하는 운영수지 분석 시 병상이용률, 연입원환자 대비 외래환자비율, 의료수입단가 및 의료외 수입의 구성내역 등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부담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정책적 분석 시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공공의료 역할 변화 등 거시적 환경변화와 사업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자원의 구조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수반하여 지방정부의 부담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LIMAC의 의료부문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연구 필요성

- 지방정부의 의료부문 재정투자사업 확대, 민관협력·지방의료원 증축·기능보강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대응하고,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지침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본 지침을 발간하였음
 - 2025년까지 중앙투자심사 의뢰 의료부문 사업은 특수목적 병원 27건, 지방의료원 21건, 지역병원 등 그 외 사업이 1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지방 의료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의료부문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외에도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부문 사업계획의 적정 사업규모 산정 및 사전타당성평가에 활용하여, 사업추진 여부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목적의 명확화, 사업내용의 구체화, 추진 주체 등 내용을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경우 합리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임

III 주요내용

● 의료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실무 지침 제공

- 타당성조사 시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보고서 목차와 동일한 순서로 구성된 실무형 지침을 지향하고 있음
 - 기초자료 분석 시 일반현황 이외에도 보건·의료 환경 분석을 위한 의료기관 분포, 의료인력 확보 상황, 진료과목별 수요, 미충족 의료수요 등 정성적 현황 파악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 각 파트별 쟁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유사 사업 타당성조사 시 명확한 수요·편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함
 - 기술적 검토, 수요 및 편익 추정, 운영수지 분석, 정책적 분석 등 각 파트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음

●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 기존 의료시설 규모를 검토할 때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면 각 부서(병동부, 외래부, 중앙진료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동별 병상 수, 진찰실 수, 수술실 및 기타 진료부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음
- 특히 구득가능한 종합병원 공용면적비(G/N)를 조사한 결과, 1990년대 이전 G/N비율이 1.5 미만이던 것에서 최근 1.6 이상으로 상승한 추세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의료시설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면적을 제시하였음

● 경제성 분석

- 의료 부문 비용편익분석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편익항목(중환자실, 간호간병 등)을 발굴하여 편익의 과소추정을 방지하였음

● 운영수지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운영수지’분석 모델을 제시하여 사업의 장기적인 재정영향 예측을 통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위험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0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III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정기간행물

1.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2.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3. 지방의정브리프
4. 지방행정연구
5. 세계지방자치동향
6. 유튜브

정기간행물

- 1 2025년도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 2 2025년도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 3 2025년도 지방의정브리프
- 4 2025년도 지방행정연구
- 5 2025년도 세계지방자치동향
- 6 2025년도 유튜브

2025년도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 제 54호_3월

주제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인터뷰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문제점 및 개혁과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이슈	지방자치 회고와 발전 전략 박재희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집중조명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성현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과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과제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지방자치 30주년에 대한 평가와 방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수사례	국내 우수사례로 본 코로나19 이후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흐름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광역협력의 선도 모델: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이 보여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탐방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다, 경상북도 안동시 김민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 및 사회 이슈	부동산과 금리전쟁

● 제 55호_6월

주제	새 정부에 바란다 I (자치분권)
인터뷰	새 정부에 바란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이슈	민선자치 30년, 지방이양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집중조명	지방분권의 추진 방향: 체제 개편을 지렛대로 권한특례를 강화하자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한국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성과, 혁신, 실험 기반 접근의 모색 정광호 한국행정학회 회장
	차등분권, 지방주도형 자치분권 전략 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우수사례	지역·현장 중심 재난관리 구현을 위한 개선 과제 김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스웨덴 교육 분권 사례를 통한 새 정부 분권 정책의 시사점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탐방	산업에 정원을 수놓는 도시 울산 문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 및 사회 이슈	SI와 일자리: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 제 56호_9월

주제	새 정부에 바란다II: 지방재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인터뷰	지방에서 시작하는 국가의 미래, 새 정부와 함께 그리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
이슈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재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집중조명	바람직한 지방재정 미래를 위한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국민주권시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과 미래의 청사진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주민참여로 주민이 만족할만한 지방예산을 꾸릴 수 있을까?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우수사례	진화하는 재정분권 모델: 영국 스코틀랜드의 최신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재정자립 기반의 전략적 투자: 수원특례시의 자율적 재정 운영 모델 문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탐방	Go Beyond, Create Harmony, 올림픽 개최를 향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도전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경제 및 사회 이슈	MZ세대 vs 베이비붐 세대: 세대 전쟁, 그 끝은?

● 제 57호_12월

주제	새 정부에 바란다III: 균형성장
인터뷰	지방자치 30년, 지역 주도로 새 시대를 열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슈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인구감소 대응 방향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집중조명	거버넌스 혁신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의 기반형성 진중현 공주대학교 교수
	청년지방정착을 위한 압축(compact)과 연계(network) 중심의 국토공간전략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5극 3특 메가시티 경제권 산업성장 전략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수사례	지역이 설계하는 균형성장: 일본의 광역협력이 보여주는 자율성과 유연성 김민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지방자치단체 탐방	천년고도 경주의 재도약, APEC 2025를 개최하다!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경제 및 사회 이슈	헬스케어 혁명: 수명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2025년도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	호수	제목
1	제185호	2025 지방행정 트렌드 유수동 성과확산센터장
2	제186호	'2년 차 징크스' 우려를 불식시킨 고향사랑 기부제 전영준 부연구위원
3	제187호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및 대응전략 윤소연 부연구위원
4	제188호	주민중심 지방자치 발전방안 김필 지방규제연구센터장
5	제189호	주민중심·지방 주도 스마트지방행정의 현황과 과제 이재용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
6	제190호	지방주도·주민중심의 광역행정통합전략 김지수·최지민 연구위원
7	제191호	국민주권시대 주민중심의 단계별 지방재정 전략과제 전성만 연구위원, 전영준 부연구위원
8	제192호	지역·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김수동 부연구위원
9	제193호	지역 간 관계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전략 박진경 선임연구위원
10	제194호	지방자치 성과와 주민인식 간 격차 완화 방안 안지선 부연구위원, 김건위 연구위원
11	제195호	협상을 통한 지방이양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안 이경은 부연구위원
12	제196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방안 김지수 지방행정혁신실장
13	제197호	2026 지방행정 트렌드 유수동 성과확산센터장

2025년도 지방의정보리프



No	호수	제목
1	제45호	정책지원관제도의 주요 이슈와 운영 개선방안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	제46호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분야에서의 시활용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최명순 경기도의회사무처,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3	제47호	지방의회 관련 주민 인식조사와 개선방향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
4	제48호	지방의회 자치권 회복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과제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2025년도 지방행정연구



● 제39권 제1호_통권 제140호

No	논문명	저자명
1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발전 방향: 「지방자치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간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수동
2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관한 연구: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검증과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유수동, 유자영
3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형성 및 형평성 분석: 수원시 입소형 기관을 중심으로	서종근
4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활동을 촉진하는 자치경찰제 개선방안 연구: 세종시 지역경찰관서의 커뮤니티경찰센터 및 광역경찰대응단 개편을 중심으로	김흥주, 홍성표, 장일식
5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희진, 이태천, 엄태호
6	「고향사랑기부금법」 실현상 쟁점과 해소방안	강기홍
7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제도운영전략을 중심으로	박윤경, 유보람, 조정래
8	케이볼카 이용자의 소비 행동이 만족도와 관광 활성화 연계 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유경, 이세규

● 제39권 제2호_통권 제141호

No	논문명	저자명
1	지역혁신 기반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전략 방향 모색	김호철
2	공공봉사동기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다문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을 중심으로	유수동, 전성훈
3	국책사업에 의한 마을 소멸과 주민의 이주 장소 선택: 장소애착의 관점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지를 사례로	김민주
4	교정시설 설립에 따른 지역 내 갈등 연구: 거창 법조타운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김재식, 정혜진
5	국문 전자정부 연구 동향의 체계적 분석: PRISMA 기반 문헌고찰과 토픽모델링 기법 적용	이수인
6	인구감소시대 지역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김상민, 이성원
7	외국인 인력의 역할 전환: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고용에 대한 대체와 보완의 이중적 효과	임태경
8	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노현애
9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에 관한 연구	김경현, 서성민
10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지출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 판매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심규리, 권소영

● 제39권 제3호_통권 제142호

No	논문명	저자명
1	지방선거의 쟁점구조와 2026년 지방선거의 개선 시나리오 분석: 텍스트마이닝-감성분석-시스템다이내믹스 통합분석	최영출
2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의 개편 방향	구균철
3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입되는 도세의 비율과 보통교부세의 관계 분석	주만수, 최병호
4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과 예산 집행: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최정열
5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 거주지역의 조절효과 분석	박민정
6	다중운집 행사의 경찰 경력 배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영향요인과 지역별격차를 중심으로	이건, 정지수
7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제도 개선 방안	김수동, 이재용
8	규제정책의 분권화 가능성에 관한 고찰: 분권형 규제특례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임현정, 이서희
9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 요인 연구: 행정사 교육과 지역의 학습조직을 중심으로	김태용, 한승희
10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R&D 성과별 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 관리기관의 차이를 중심으로	원준희, 오규환, 김창진
11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지역디지털 전략의 실증분석: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박영민
12	지원에서 소외된 청소년부모 가정: 조례 제정의 형평성과 내용 분석을 통한 개선 과제	주선옥

● 제39권 제4호_통권 제143호

No	논문명	저자명
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 모델 유형화와 발전 탐색: 기관 권력배분과 구성주도성을 중심으로	박종혁, 홍성만
2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전환의 구조적 영향 요인 분석: 디지털 리더십-디지털 전환 관계에서 조직학습문화와 혁신행동의 이중 매개효과 검증	이재용
3	개인 및 지역의 통합적 관점(synthetic perspective)에서 지역 사회자본의 지형화(mapping): 지방정부 사회자본의 접근을 통한 이론적 보완	서인석, 이미애
4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유효 가동률에 관한 연구	김대중
5	지방소비세의 과세주체 제한과 배분방식의 단순화	최병호, 정종필
6	4차 산업 특화가 지역 경제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사례 연구	윤성원, 이상원, 김갑성
7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역사회 공동체역식의 직·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정다겸, 김민지, 김예성, 박시연, 선지민, 김서용
8	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오정민, 이상협
9	지역 주도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향 검토	김호철
10	새마을운동 활동의 지속가능성 진단: UN SDGs 관점에서의 정량적 분석	전호성, 김민찬, 남재걸

2025년도 세계지방자치동향



● 제58호

No	나라	제목
1	일본	의회개혁과 지방의회의 자주적 제도 및 사례
2	미국	지방의회와 행정기관 간 협력 및 전문성 강화 노력: 주정부협의회(Council of State Governments, CGS)
3	네덜란드	지방의회를 위한 지방의회가 있다? 네덜란드 WaZ의 사례
4	한국	한국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배경,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 제59호

No	나라	제목
1	미국	지역디지털 혁신: Massachusetts AI Hub
2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
3	일본	TOPPAN의 ICT 개발 거점과 일본 지역 디지털 혁신
4	일본	일본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디지털 혁신 사례: 지자체 DX
5	독일	독일 함부르크의 디지털 전략 2025: 시민 중심의 디지털 도시 혁신
6	한국	“멈춤 없는 도시로” 부산광역시 스마트 교통신호 운영시스템 확대 도입 사례
7	한국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안전한 AI 기술 도입 방안

● 제60호

No	나라	제목
1	일본	요코하마시의 녹지세 부과와 녹지 늘리기 계획
2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대도시 지역 프로젝트 계획(MAPS 3 & 4)
3	미국	주요 도시의 PILOT 제도 비교
4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지방 소비세 균등화 정책: Local Sales Tax Pooling and Allocation
5	프랑스	삶의 질과 지속가능 가치 실현을 통한 세수 확대
6	한국	'디지털 자산 시대의 조세 정의'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사례
7	한국	국민주권 시대 주민 삶의 질 확대를 위한 세수 확보 방안

● 제61호

No	나라	제목
1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행정체제 개편: 카운티 정부 폐지와 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2	일본	일본의 지방행정 체제의 변천과 헤이세이 대합병의 교훈: 자치와 효율의 균형
3	독일	독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4	한국	5극 3특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 논의
5	한국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5극 3특의 지방재정 운영 방안

2025년도 유튜브



No	제목
1	우발채무란 무엇인가? 지방재정의 숨은 위험과 대처법
2	규제 개선으로 바꾸는 지방의 미래, 새로운 도약의 시작!
3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모든 것!
4	지방행정체제 개편, 왜 지금 필요한가?
5	쉬는 청년, 구직 단념, 멈춰버린 한국 청년들의 현실
6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
7	[지방행정 TalkTalk] 지방소멸 막을 수 있을까? 재정격차의 해법은 '제도 개편'
8	[지방행정 TalkTalk] 인구감소·지역불균형...대한민국 행정체제, 바뀌어야 하는 이유
9	[KRILA x SBS Biz 특별인터뷰] 민선지방자치 30주년-성과와 미래를 말하다
10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11	[지방행정 TalkTalk]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
12	[지방행정 TalkTalk]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관리체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13	2025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
14	[지방행정 TalkTalk] 타당성 조사를 통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트렌드
15	[지방행정 TalkTalk] 지방재정투자 사업계획 수립과 내실화방안
16	[KRILA CINEM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1주년 기념 세미나 스케치 영상
17	KRILA x KOSTAT 스마트한 인구 감소 대응, 침체 없는 지역경제
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1주년 기념세미나
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발전 세미나 스케치 영상
20	제16회 한·일 공동세미나

III 정기간행물

No	제목
21	자치분권 30년, 국가균형성장전략 세미나 현장스캐치
22	민선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23	자치분권 30년, 국가균형성장전략 세미나
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01회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02회
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03회
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04회
28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05회
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06회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07회
31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08회
32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09회
33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10회
34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11회
35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12회
36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13회
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14회
38	2025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자치분권 홍보영상
39	2025 울산엑스포 자치분권 우수사례 지역맞춤형 전북(룡)
40	2025 울산엑스포 자치분권 우수사례(행안부)
41	2025 울산엑스포 자치분권 우수사례(부산)
42	2025 울산엑스포 자치분권 우수사례(법제처)
43	2025 울산엑스포 자치분권 우수사례(세종)
44	2025 울산엑스포 자치분권 우수사례 지역맞춤형 전북(숲)
45	2025 울산엑스포 자치분권 우수사례(충청권)

No	제목
46	제31회 한일지역정책연구회: 지방자치 30년 성과 평가와 미래정책
47	제2차 KRILA&KIPA 공공부문 조직관리를 위한 대화: 정부조직의 기능과 업무에 대한 이해
48	제3회 K-BALANCE 대한민국지방시대 엑스포
4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30년, 개혁과 성과의 새 길을 열다!
50	[예고] 2025 대국민아이디어 공모전
51	[KRILA 연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 방안연구
52	[KRILA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전략 시나리오 플래닝을 중심으로
53	[KRILA 연구]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54	[KRILA 연구]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55	[KRILA 연구] 지역청년지원에 관한 법·제도 수립방안 연구
56	[KRILA 연구]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57	[KRILA 연구] 지방시대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방안 연구: 지역 간 기능적 연계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58	[KRILA 연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행정혁신 전략
59	[KRILA 연구]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
60	[KRILA 연구]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
61	[KRILA 연구] 지방재정 30년 평가를 통한 미래 지방재정 전략
62	LIMAC이 말하는 프로젝트 첫 단추 '사업계획 내실화'
63	LIMAC이 말하는 성공 프로젝트의 시작 '타당성 조사'
64	모두의 안전, 이제는 새롭게 생각할 시간
65	지역 간 불균형, 재정으로 풀 수 있을까?
66	지방소멸 위기 해결책은?
67	변화하는 시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68	[BBP챌린지] Bye Bye Plastic!
69	투자심사로 투명한 재정을 만들어갑시다!

III 정기간행물

No	제목
70	지방규제와 정책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71	우발채무, 지방재정의 숨겨진 리스크!
72	지방행정 개편, 뭐가 달라질까?
73	쉬는 청년 40만 명, 왜 이렇게 많을까?



20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V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부록

2025년도 연구과제 수행 목록

2025년도 연구과제 수행 목록

1. 기본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저자
자치분권 제도	1	인공지능 기술 전환기의 지방행정 혁신 방안 연구: 주민중심의 AI 거버넌스 구축	주희진, 황정윤, 김 필
	2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주민인식 특징과 전략적 대응	김건위, 최지민, 안지선
지방행정 혁신	3	상호협력적 지방이양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 중앙-지방 간 이양협상제도를 중심으로	이경은, 강영주, 유자영
	4	지방주도의 디지털 전환전략 연구: 디지털 전환 수준별 유형화를 중심으로	이재용, 김수동
지방재정 경제	5	지방자치단체 가용자원 실태분석 및 활용 제고방안: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전성만, 전영준, 황해동
	6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 시점(timing)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서희, 유보람, 최정우
지역균형 발전	7	 생활인구 소비 특성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김민영, 박진경
	8	에이시테크 중심의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양원탁, 이원도
지방투자사업 관리	9	도시공원 타당성조사의 가치추정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김남주, 문소영

정책연구과제(행정안전부)			
분야	No	과제명	저자
자치분권 제도	1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발전 방향 연구: 대국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김건위, 주희진
	2	지방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읍·면·동 설치기준 및 기준운영 개선방안*	최지민, 안지선
	3	국민 편의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감증명제도 개선 연구	황정윤, 김건위
	4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제도개선 연구*	전대욱, 김지수
	5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개선방안*	정기용, 전대욱, 김해솔
지방행정 혁신	6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및 성과지표 표준안 마련	김수동, 이재용
	7	 특례시 제도와 인정기준에 대한 진단과 정책 방향 연구*	이경은, 강영주, 유자영
	8	읍·면·동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 연구	강영주, 이경은
	9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기능 정착을 위한 실행역량 확보 방안*	유자영, 김수동
지방재정경제	10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전영준, 전성만
지역균형 발전	11	효과적인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양원탁, 이원도
	12	 읍면동 단위 지역소멸 위험도 분석 및 지원 방안*	김민영, 이원도
	1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연구	김민영, 양원탁
	14	초광역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 발전사업 선정기준 마련	양원탁, 이원도

* 비공개 기간 만료 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3. 정책연구과제(시도)

지역	No	과제명	저자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연계 방안 연구	김 필, 안지선
부산광역시	2	부산 AI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베드 추진 방안	강영주, 이재용, 외부1인
대구광역시	3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차원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수, 전대욱, 김성주
인천광역시	4	중앙 및 지방 간 소방재원 분담의 개선방안 연구: 소방공무원 인건비 확보를 중심으로	최정우, 전성만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채무감축과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전영준, 김성주
대전광역시	6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대전광역생활권 설정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이원도, 유수동
울산광역시	7	해오름동맹 협력 사업 발굴 및 실행 방안 연구	이서희, 최정우
세종특별자치시	8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양원탁, 이원도
경기도	9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김민영, 이원도
강원특별자치도	10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평가체계 구축 연구	안지선, 김건위
충청북도	11	초광역 협력체제를 위한 충청북도의 전략적 대응방안	최지민, 안지선
충청남도	12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 참여율 제고방안	이원도, 양원탁
전북특별자치도	13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한 자율적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	김지수, 유자영, 강희송
전라남도	14	 서포터즈 효과분석과 발전 전략 수립 연구: 관광·소비·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중심으로	유보람, 전영준
경상북도	15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최정우, 유보람
경상남도	16	남해안권 초광역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주희진, 김건위
제주특별자치도	1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재편 방향과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연계 방안 연구	이서희, 김민영

* 비공개 기간 만료 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4. 정책이슈리포트

지역	No	과제명	저자
서울특별시	1	서울 균형발전 전략 재구성 방안: 개념 및 정책 추진 방향 정립	김민영, 양원탁
부산광역시	2	북극항로 거점항구 역할을 위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전략적 방안 모색	주희진, 김건위
대구광역시	3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기준 연구	황해동, 전성만
인천광역시	4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김민영, 박진경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저감 개선방안 마련	김수동, 이재용
대전광역시	6	계축산 권역 특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황해동, 전영준
울산광역시	7	상수도 분야 전문인력 고령화 대응 방안	박해육, 이경은
세종특별자치시	8	단층제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직관리 방안*	강영주, 최지민
경기도	9	경기도 소방관서 성과집단 구분 지표 설계에 관한 연구	김 필, 김해솔
강원특별자치도	10	시·도 지역본부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최정우, 이서희
충청북도	11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김건위, 안지선
충청남도	12	충남소방 현장활동 업무량 기반 성과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박해육, 이경은
전북특별자치도	13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교통서비스 확보 방안	박진경, 이원도
경상북도	1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공동체식사 시범마을 추진의 쟁점과 과제*	안지선, 김건위
경상남도	15	경상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함정 MRO 산업 육성 방안*	양원탁, 김민영
제주특별자치도	16	「제주 글로벌 위케이션 허브 도시 조성」 추진 방안 연구*	이원도, 유자영

* 비공개 기간 만료 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5. 자체연구

분야	No	과제명	저자
기획조정실	1	 2026 지방행정 트렌드	유수동, 주희진, 유자영, 유보람, 양원탁, 문혜리
자치분권제도실	2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	김 필, 김건위, 전대욱, 주희진, 안지선
지방행정혁신실	3	지방주도·현장중심 지방행정혁신전략	이경은, 강영주, 김지수, 최지민, 이재용, 유자영, 김수동, 박해육
지방재정경제실	4	지방재정 30년 평가를 통한 주민중심 지방재정 전략	전성만, 전영준, 조기현, 신두섭, 김성주, 이서희, 유보람, 최정우, 황해동
지역균형발전실	5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	박진경, 이원도, 김민영, 양원탁, 김주락

6. 지침연구

분야	No	과제명	저자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1	문화·체육시설 건립의 편익 추정을 위한 객단가 적용 방법론 연구	김상기, 박용덕, 최성원, 이진우
	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가이드라인	송지영, 이민기, 정연백, 이정희
	3	R&D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II):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론 관련	김지훈, 김도영, 허은진, 전승훈
	4	의료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II)	송지영, 정연백, 박소연, 조현민

7. 수시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저자
자치분권제도	1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건위, 주희진
지방행정혁신	2	주민자치회에 관한 심층분석 연구: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김지수, 김수동
지방행정혁신	3	기본사회 정책범위 및 분야별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분석	김지수, 전대욱, 신규 2인
지방재정경제	4	유휴공유재산의 대부·매각 기준 및 공개시스템 개선 연구	이서희, 김성주, 최정우

8.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분야	No	과제명	저자
지방재정경제	1	고향사랑기부제 컨설팅(강원 태백시)	유보람, 전성만, 전영준, 오유리
지방재정경제	2	고향사랑기부제 컨설팅(전남 구례군)	전성만, 유보람, 전영준, 오유리
자치분권제도	3	시도·시군구 발굴 특례·규제개선 건의 협의 전 컨설팅(충남 금산군)	김 필, 전대욱, 주희진, 김해솔

9. 공동연구과제

공동연구기관	과제명	저자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서울연구원)	지방규제혁신 및 중앙 규제 권한이양 방안연구	정기용

10. 수탁연구과제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원: 지방자치분권 분야’ 등 총 21과제

11. 타당성조사과제

‘○○○○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등 총 60과제

